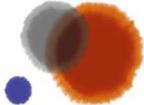

문화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협력과제 발굴

2013. 1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협력과제 발굴 연구 연구진

연구책임 양 혜 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공동연구 현 재 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아시아개발연구소 연구원)

연구보조 안 현 정 (경희대 일반대학원 공연예술학과 박사 수료)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문화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협력과제 발굴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12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박 광 무

<제목 차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
1. 연구 배경	2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4
1. 연구범위	4
2. 연구방법	5
제2장 정부 간 협업의 의의와 문화 가치의 사회적 확산 필요성	6
제1절 정부 간 협업의 의의 및 필요성	7
1. 정부 간 협업의 의의와 현황	7
2. 융합행정의 대두와 현황	9
3. 정부 3.0과 부처간 칸막이 허물기	16
제2절 문화 가치의 사회적 확산 필요성	12
1. 문화의 가치	21
2. 문화의 가치와 효과에 대한 국내외 연구	32
3. 문화 가치를 활용한 국내외 사례	6
4. 새 정부 출범과 국정기조로서의 문화융성	64
5. 문화 가치의 사회적 확산 모델	8
제3장 문화 관련 정부 간 협업 현황 및 문제점	65
제1절 문화체육관광부와 타 부처 간 협력 현황	65
1.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협력 현황	7
2. 국무조정실 주재 부처간 협업과제 추진 현황	85
제2절 타 부처에서 진행하는 문화 관련 사업 현황	36
1. 기획재정부	63
2. 미래창조과학부	63
3. 교육부	65
4. 외교부	67

5. 통일부	68
6. 법무부	68
7. 국방부	69
8. 안전행정부	70
9. 농림축산식품부	70
10. 산업통상자원부	72
11. 보건복지부	73
12. 환경부	74
13. 고용노동부	74
14. 여성가족부	76
15. 국토교통부	78
16. 해양수산부	79
17. 문화재청	79
18. 타 부처 문화 관련 사업 수행 조직 현황	B
제3절 국내 문화 관련 부처 간 협력의 성과와 문제점	68
1.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8
2. 협업을 통한 성과	94
3. 부처간 협업에 있어 문제점	9
제4장 문화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협력과제 발굴	10
제1절 문화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	10
1. 기본방향	101
2. 추진전략	101
3. 추진방식	103
제2절 주요 협력과제	106
1. 교육 및 복지 분야	106
2. 산업 및 고용 분야	121
3. 문화교류 및 외교 분야	136
4. 지역 및 일상 분야	148
제3절 문화로 옷 입히기를 위한 협력기반 구축	B
1. 문화진흥기본계획 및 문화영향평가 실시	B
2. 문화자원DB 공동활용과 문화컨설팅 제공	B
3. 공공시설과 행정서식에 창의적 문화 감성 구현	B

4. 행정인(人)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으로 Soft Power 강화	6
5.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의 협력체계 구축 및 협업지원체계 강화	11
[참고문헌]	163
[부록 1] 전문가 설문조사 설문지	19
[부록 2] 전문가 설문조사 응답결과 : 협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17

I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견인을 위한 문화 가치의 사회적 확산 필요
-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의 수요 증가 및 자율적인 지역특화 발전 요구 증대
 - 경제 성장의 결과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력이 높아진 반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은 경시되고 국민의 행복 수준은 낮은 수준
 - 무역규모 1조달러에 국민소득은 2만 달러 수준을 이루었으나 OECD 34개 국가 중 자살률은 1위이며 행복지수(BLI)는 24위(2011년)에 불과
 - 국가 발전 모델에서 개개인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로의 전환 필요
 - 산업화, 민주화의 성공을 이어 ‘문화융성’의 새로운 시대 개척 필요
- 문화예술이 가지는 본질적 가치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가치의 전 사회적 확산을 통해 한국이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 및 경제성장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필요성 증대
 - 문화예술은 단순히 미학적 아름다움이나 감수성 제고라는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발전과 잠재능력, 자존감을 고취시키고 공동체를 변화키시며 범죄, 건강, 사회통합에 긍정적 효과를 미침
 - 사람 사이의 마음을 여는 통로로서 문화예술은 타인과의 소통과 신뢰, 나눔과 배려 등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고 키우는 과정으로 문화예술은 타인과의 협동 및 소통 능력 향상, 타인에 대한 포용력 증가,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등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기여
 - 또한 문화콘텐츠산업은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으로 경제적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
-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중심으로 한 정부 3.0 시대의 도래
-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융합행정의 필요성 증대
 - 단일 부처의 독자적 접근방식(silo approach)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봉사할 수 있는 서비스의 영역이 줄어들어는 반면, 저출산·고령화, 외국인 거주민의 확대 등 관련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까지를 연계하는 협업 시스템을 통한 대응을 요구하는 문제와 서비스 영역은 점점 더 확장됨에 따라 다수 부처 관련 정책과

- 제(cross-cutting issues)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
-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정책사업은 국민보다는 개별 부처 및 부서 중심의 업무 추진으로 국민 불편 초래 및 예산낭비 우려
- 정보의 개방·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초기 단계이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등 한계 노출
- 기관간 협력미흡으로 국민 64% 불편 경험(2011 한국조직학회 조사결과)

2. 연구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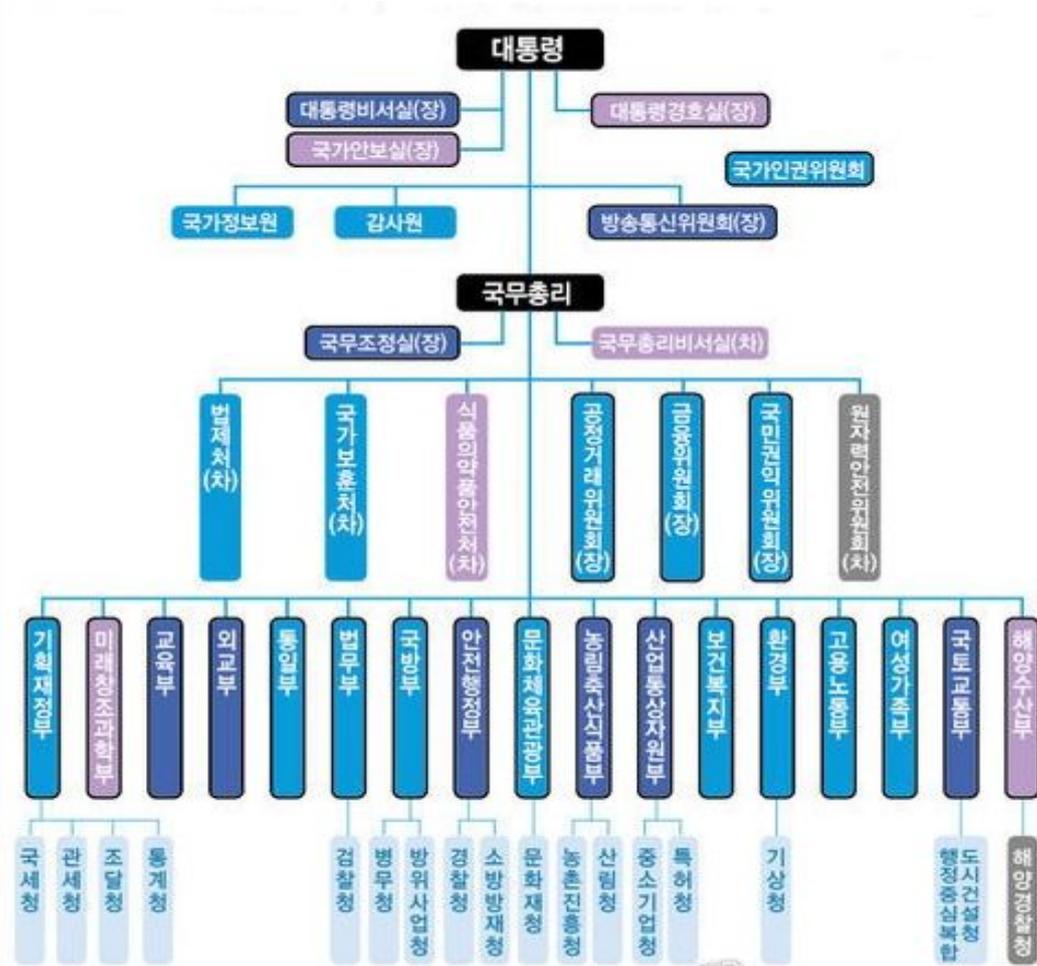
- 문화 가치의 사회적 확산의 의의 및 필요성 제시
 - 문화가 가진 다양한 가치들을 제시하고, 이러한 문화 가치의 사회적 확산의 필요성과 확산 모델에 대한 검토
- 문화 분야 부처간 협력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문화와 관련된 부처간 협력 사례를 파악하고 이러한 부처 간 협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
 - 협력과제 발굴 및 협력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의 파악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타부처 협력과제 발굴
 - 타 부처를 통해 수행되고 있는 사업 중 문화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정책적 성과 및 행정 효율성의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협력과제의 발굴
- ‘문화로 옷입히기’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 제시
 - 제시된 협력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융합행정체계의 제도적 기반(조직, 절차, 재정, 평가 등)에 대한 구축방안 제시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 정부 간 협업의 의의와 필요성
 - 정부 간 협업의 의의와 필요성, 대두배경, 유사개념으로 떠오르고 있는 융합행정의 의의와 현황 및 사례, 새정부 출범 이후 대두된 정부 3.0과 정부간 칸막이 허물기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개괄
- 문화 가치의 사회적 확산 필요성
 - 문화의 가치와 효과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와 문화의 가치를 활용한 국내외 주요 사례 검토
 -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조로 제시된 문화융성의 의미
 - 문화융성을 가져온 해외 문화정책 사례와 국내 문화 가치의 사회적 확산 모델 검토
- 문화 관련 정부 간 협업 현황과 문제점 검토
 - 문화체육관광부와 타 부처간 협력 현황 검토
 - 타 부처에서 진행하는 문화 관련 사업의 검토
 - 국내 문화 관련 부처 간 협력의 성과와 문제점 검토
- 문화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 및 주요 협력과제 발굴
- 다만, 협력의 수준은 중앙정부 수준으로 한정함
 - 2013년 3월 이후 개편된 중앙정부 조직은 17부 3처 17청 2원 5실 6위원회로서 이들을 중심으로 협력과제를 발굴
 - 다만 필요할 경우 지방정부 또는 민간부문의 역할 등을 포함

<그림 1-1> 정부조직도(2013.3월 개편)



2. 연구방법

- 기존 선행연구 등 문헌분석(literature review)을 통한 문화 관련 타 부처 협력현황 및 문제점 파악
- 정책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FGI : Focused group interview)
 - 문화 관련 협력의 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협력과제 도출
- 주요 협력과제 및 개선과제에 대한 관련부처 담당자 및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핵심과제 및 우선과제 도출
 - 협력에 있어서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 도출
 - 개선과제 도출

II

정부 간 협업의 의의와 문화 가치의 사회적 확산 필요성

제1절 정부 간 협업의 의의 및 필요성

제2절 문화 가치의 사회적 확산 필요성

제1절 정부 간 협업의 의의 및 필요성

1. 정부 간 협업의 의의와 현황

가. 정부 간 협업의 의의

- 광의의 의미로서 협업(collaboration)이란, ‘단독으로 행동하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고자 복수의 조직이 함께 노력하는 모든 방식’을 의미(McGuire, 2006; Horne & Paris, 2009; 김윤권, 2013에서 재인용)
- 대다수의 정부기관에서 협업은 복잡한 정책과정, 급변하는 환경, 자원과 전문가의 분산으로 인한 문제, 끊임없는 새로운 정보의 흐름 등 여러 가지 현대 사회의 문제에 대응하는 주요 수단(Fleishman, 2009; 김윤권, 2013에서 재인용)
- 김윤권(2013)은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라는 이름으로 부처이기주의로 형성된 부처간 벽을 허물고, 각종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관리 방식으로서 협업행정(Collaborative Public Administration)을 제시

나. 정부 간 협업의 필요성 및 대두 배경

- 정부 간 협업뿐만 아니라 정부 내 기간관 협업, 정부-민간의 협업, 정부-개인의 협업이 이미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왔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 향상, 감세, 의사결정의 개선, 공공의 참여 확대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음(김윤권, 2013)
- 특히 현재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의 등장으로 기존 부처 단위의 기구 및 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저출산·고령화, 기후·환경 문제 등)가 발생
- 개인별 맞춤형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 구현을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 및 기능을 연계하는 협업체계의 구축이 필요함(박덕수, 2013)

다. 협업행정 현황 및 지원방안

- 부처간 권한 다툼 및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한 주요사업 추진의 지연(갈등발생), 유사사업의 중복시행으로 인한 정책의 효율성 및 형평성 저하(업무중복), 부처간 업무 떠넘기기로 인한 국민피해 발생(업무사각지대), 기관 단위의 정책사업 수행으로 인한 통합서비스 제공 불가(업무분절), 관련 기관 간 업무관련 정보, 장비, 시설 등의 비공유로 인한 인력 및 예산의 비효율 발생(자원낭비) 등이 문제시되고 있음(박덕수, 2013)
- 이러한 부처간 칸막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박덕수(2013)는 기관간 정보공유 체계 및 공동작업 가능한 정보화 기반 미흡(시스템), 부처 단위의 경직적 구조로 인한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 저해(조직), 부처별 폐쇄형 인사시스템으로 인한 기관간 소통·이해 부족(인사), 기관별 예산 배정으로 T/F 등 협업관련 조직의 자율적 예산 운영 한계(예산), 주관부처 위주의 업무평가 체계로 인한 협업 참여부처 성과에 대한 평가 불가능(평가) 등을 제시
- 관계부처 합동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2013)에 따르면,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위한 조직·인사·예산·평가 관련 정부 혁신 방안을 제시
 -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는 기반시스템으로서, 소속부처와 상관없이 전 공무원들이 PC·스마트 기기로 의사소통 및 온라인 협업이 가능한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을 2013년 말까지 구축하여 중앙부처 시범서비스 도입 예정
 - 각 부처의 정책정보, 출장·해외연수 결과 등 각종 보고서를 공유하고, 맞춤형으로 검색할 수 있는 「지식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과 연계, 집단 지성을 활용한 정책품질 제고
 - 범정부 영상회의 공통기반 구축 및 회의문화 개선 등 디지털 협업 시스템 구축을 통한 원격근무 비효율 극복, 정부통합전산센터를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로 전환(~2017)하여 지식·정보 공유 기반 마련
 - 부처 및 부서간 경계를 넘나드는 과제중심형 조직(T/F, 매트릭스형 조직 등)의 적극 활용, 부처단위 정원관리를 탈피한 「범정부 통합정원제」 도입¹⁾, 조직진단으로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여 협업체계 재설계 등 유연하고 과제지향적인 조직관리 방안 추진 예정
 - 전문·협업 분야 중심으로 정부간, 정부-대학간, 정부-연구기관간, 정부-공공기관간 인사교류 확대(고위공무원단) 및 협업분야 인력 10%이상에 대한 '교류정원제' 도입을 통한 타 부처 공무원 임용 의무화(4,5급 이하), 중앙-지방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인사교류 확대(과장급 계획교류목표제, 중앙-지방 교환근무 제도화 등) 등 협업 활성화를 위한 열린 인사 구현 목표
 - 협업지원 예산에 대한 우선적 지원, 협업 T/F에 관련 예산 조정 권한 부여, 협업 우수기

1) 범정부 통합정원제: 매년 전부처의 정원 1% (5년간 5%)를 통합정원으로 지정하여 협업과제에 우선 배정

관에 예산 인센티브 제공 등 협업 과제 중심의 예산 운영 및 정부업무평가, 개인평가 및 지자체 합동평가에 '협업추진실적'을 포함하는 등 협업 평가 체계 구축

2. 융합행정의 대두와 현황

가. 융합행정의 개념

- 복수의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민간주체들 사이의 협의와 역할분담·협업을 통해 상호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장비·정보 등의 자원을 공동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비용은 낮추는 업무수행 방식을 의미

나. 융합행정의 대두배경

- 1980~1990년대 영미권을 중심으로 민간부문의 관리방식과 시장정향을 행정에 적용하는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이 대두
- 이러한 신공공관리는 부처별, 부서별, 개인별 목표와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내부의 수직적 인 능률성은 성취하였으나 횡적인 조화와 협조면에서는 미흡하여 여러 부처에 걸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노출함
- 특히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과 같은 앵글로 색슨 국가에서 이런 문제들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이들 국가는 여러 기관이 공동의 목표 하에 함께 일하도록 부처별·기관별로 분화되어 있는 정부기능을 하나로 묶거나(joined-up), 총괄적인 독립부서를 두는 등 다양한 시도
- 영국의 연계형 정부(joined-up government), 캐나다의 횡적 연계(horizontality), 호주 및 뉴질랜드의 총체형 정부(whole-of-government), OECD의 정책정합성(policy coherence), 미국의 협업적 공공관리(collaborative public management) 등으로 표현되는 행정개혁모델을 예로 들 수 있음

다. 유사개념과의 비교

- 1) 영국의 연계형 정부(joined up government)

- 부처주의(departmentalism), 터널비전(tunnel vision), 수직적 원탑(vertical silos)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Tony Blair 정부에 의해 1997년에 처음 소개됨
- 주된 목표는 공공기관들간, 행정수준(administrative levels)간, 정책영역간의 경계선에 걸쳐 있는 까다로운 이슈들(wicked issues)을 보다 효과적으로 장악하기 위함(Politt, 2003).
- 또한 상이한 복수의 정책이 상호 저해하는 상황을 제거하기 위해 수평적·수직적 조정을 달성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부족한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특정 정책영역의 이해 당사자들(관련 중앙기관, 지방정부, 민간주체 등)이 협력함으로써 과업수행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시민들에게는 분산된 서비스가 아니라 이음매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Christine & Laegreid, 2007)
- 영국 노동당 정부가 연계형 정부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노동당 정부가 주목했던 사회적 배제, 가족, 범죄, 기업의 경쟁력, 환경 문제 등은 부처주의적 구조와 수단으로 쉽게 해소될 수 없으며, 이러한 사회문제들은 상호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수단들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됨
 - 둘째, 보수당 정부에 의한 신공공관리 개혁이 명백한 한계를 지녔음이 드러남. NPM개혁은 다수의 책임운영기관과 비정부부처 공공기관(NDPBs)에 의해 운영되는 행정구조를 야기했는데(fragmentation 현상) 이 단일목적 기관들은 복합적인 문제에 대처하는데 특히 취약했던 것임. 이 기관들은 복합적인 성격의 문제를 방치하고 정보공유 노력을 충분히 하지 못하였으며 인터넷의 잠재력을 활용하는데 한계를 보임
 - 셋째, 기술 및 조직 관련 기법이 신속하게 발전했으며 특히 수평적인 의사소통과 조정의 비용이 빠르게 감소되면서 전통적인 조직구조보다 네트워크 조직이 더 중요한 활동의 단위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
 - 넷째, 소비자주의가 확대되면서 시민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원했으며 이는 전통적인 부처 구조에 의해서는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이었음
- 이에 영국 노동당 정부는 아동·청소년복지정책과 중소기업정책 등의 영역에서 연계형 정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큰 성과를 냄
- 연계형 정부는 정책집행이나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의 정부의 제도, 기술, 혹은 전문성 부족을 민간부문과의 횡단적 연계를 통해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확장되고 있음(Barrett, 2003).

2) 호주 및 뉴질랜드의 총체형 정부(Whole-of-Government)

- 총체형 정부는 행정기관들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고 특정 이슈에 대해 정부의 통합된 반

응을 보이고자 서로의 사업범위를 횡단하면서 함께 일하는 것을 의미

- 총체형정부의 개념은 신공공관리적(NPM) 개혁의 영향으로 공공부문과 공공서비스 제공이 크게 분절되는데 대한 일련의 반응으로서 통합과 조종, 그리고 문제해결 역량을 제고시키려는 노력 모두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용어(umbrella term)

3) 미국의 협업적 공공관리(collaborative public management)

- 단일 기관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목적에서 복수의 조직이 연계하여 작동하게 하는 과정을 기술하는 개념
- 빈곤, 보건, 자연재해 등 다루기 힘든 문제들(intractable problems)을 해결하기 위해 전통적인 정부조직에 비해 보다 유연하고 포괄적이며 적응력이 높고 빠른 속도로 작동하는 다른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음(McGuire, 2006).

<표 2-1> 융합행정과 유사개념의 비교

	목적 및 효과	관련주체	적용범위, 적용영역 및 대상
연계형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수주체의 통합되고 조정된 반응을 통한 현대의 복잡한 정책문제를 해결하거나 시민들에게 이음매 없는 통합된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부처간 ●중앙정부 + 지방정부 ●정부 + 민간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 ●전정부적 전략목표, 정책개발, 규제, 공동서비스 전달 등 ●특정집단, 특정지역, 특정정책 부문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부문 감축을 토대로 한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의 관계 재구축과 역할 재분담 및 이를 통한 사회공동체 문제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기관, 준정부기관, 비영리조직, 민간조직, 시민단체, 민간기업, 자원봉사자 및 이들 간의 연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넓은 의미에서는 정책결정과 정책집행 포괄 ●좁은 의미에서는 공공서비스의 공급활동에 초점 ●교육, 보건, 복지 등 다양한 정책영역
정책조정과 정책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조정: 기관 간 이견 조정을 통해 관련 정책의 가외성, 비정합성, 누락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부문 정책의 효율성 제고 ●정책통합: 관련 정책들이 보합성과 통합성을 갖도록 재정렬함으로써 정부 전체의 효율성과 목표달성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수의 관련 행정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의 주요 정책, 국정현안, 사회갈등 등
공공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다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수의 중앙부처, 중앙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수립 및 집행

관리	한 주체들 사이에 발생될 수 있는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낭비 방지	부와 지방정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와 시민 사이	●주로 대형 공공사업
융합행정	●행정기관들을 포함한 복수의 주체들 간 협의와 역할분담 등을 체계화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효과성 제고 및 비용절감 지향	●중앙부처간 ●중앙정부+지방정부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 ●정부+민간부문	●주로 정책집행, 대국민서비스 ●프로그램 관리, 규제, 공동의 서비스 전달 ●특정 집단 특정지역, 특정 정책부문

라. 융합행정 현황 및 사례

1) 영국의 연계형 정부 추진 사례

-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의 성과와 혁신 유닛(Performance and Innovation Unit)은 협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 예산형태, 리더십 스타일 등에 대한 자료 제공, 서비스우선 유닛(Service First Unit)은 공공정책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견해를 알기 위해 국민패널(People's Panel)을 설치·운영
- 재무성(Treasury)은 횡단적인 성격의 목표를 포함한 각 부처의 전반적인 목표를 확인하는 공공서비스 성과계약(Public Services Agreements), 공공부문의 생산성 증진방안에 대해 조언을 수행하는 공공서비스 생산성 패널(Public Service Productivity Panel), 협업이 나타날 수 있는 회계 및 예산의 틀 제시
- 아동·청소년복지정책

- 중앙정부의 교육기술성을 주무부처로 하고 아동·청소년가족관련 정책을 통합조정하는 전담차관(Minister for Children, Young People and Families)을 둬
- 아동·청소년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아동·청소년의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기관으로 아동·청소년책임관(Children's Commissioner)직을 설치함
-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각 지방 단위에서 교육과 아동·청소년의 사회서비스를 책임지는 아동·청소년서비스국장(Director of Children's Services)직을 신설하고 아동·청소년 담당지방의원(a lead council member for children)을 지정함

○ 중소기업정책

- 다수의 중앙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규제 및 지원방안들을 총괄하는 책임을 중소기업지원청(Small Business Service : SBS)에 부여

- 지방수준에서는 지역개발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 RDAs)에 조정 및 관리책임을 부여
- 각 부처들은 주요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해당 정책이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먼저 고려하도록 했으며(Think Small First) 특히 규제정책에 관한 쟁점들에 있어 각 부처들은 정책입안의 초기 단계에서 SBS에 자문을 구할 것을 요구받음
- SBS의 정책조정 노력은 중복된 중소기업 규제와 지원을 줄여나기는데 집중되었으며 단일의 웹 포털 사이트를 개발하여 중소기업의 혼란을 줄이는 데 기여

2) 국내 융합행정 사례

○ 국내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융합행정우수사례로 제시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행정안전부, 2011)

-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된 사업으로는 <고졸자 취업지원을 위한 다수부처 협력 사례>와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효율화를 위한 협력 사례>가 포함됨

<표 2-2> 융합행정 우수사례

사례명	주관부처	관계부처	내용
고졸자 취업지원을 위한 다수부처 협력	교과부	기재, 고용, 병무, 문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계 주요 단체기관과 협동으로 특성화고 취업촉진팀 구성운영 • 수도권 금융기관에서 시작된 고졸채용 분위기를 공공분야 및 전 지역의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 • 고졸 채용 확대와 교육기부 확산을 위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경제인연합회간 공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출소예정자 등 취·창업지원	법무부	고용, 중기, 농진, 행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출소예정자 등 참여 • 출소예정자 등 채용기업에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에 출소예정자 등 채용기업 포함 • 출소예정자 등 직업심리검사 및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지원 • 출소예정자를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 출소예정자 등을 위한 소자본 창업교육 실시 • 수형자 심성교육 및 원예기술 습득을 위한 원예활동 지원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 강화 협력	법무부	여가, 복지, 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협의회 구성·운영 • 수용자 가족접견실 운영 • 장기수용자 가족캠프 운영 • 수용자 가족지원 안내센터 설치 운영 • 요보호 위기자녀 지원 체계 구축 • 수용자 자녀 상담 매뉴얼 개발 보급 • 부모 체포 시 자녀배려지침 수립 • 수용자 자녀 대학생 멘토링 결연 지원 • 사랑이음 영상편지 보내기
장례사망정보 공유를 위한 부처간 협력	복지부	행안, 국방, 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 실명인증을 기반으로 전국 화장시설의 화장예약 창구 단일화 • 장시문화 전반(장례절차, 장례용품 가격정보, 장례시설 정보 등)에 대해 대국민 서비스 제공

		연금공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예약 과정에서 조기 취득된 사망정보를 각종 연금기관 및 행정안전부, 통계청 등 9개 기관에서 업무에 활용
자동차 관련 과태료 일괄 압류해제 납부 시스템	국토부	행안, 국세, 경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일괄 압류해제납부시스템 구축 BERMSP 사업제안 요청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일괄 압류해제 납부시스템 구축을 위한 본사업 추진
통관창구 단일화를 위한 부처간 협력	관세청	환경, 농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처리시간 단축으로 관세행정서비스 제고 • One-stop 처리에 따른 신속통관으로 물류비용 절감효과 달성
실종 아동여성찾기 정보 공유	경찰청	행안, 복지, 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부 무연고자 등 가족찾기 정보 9개 기관 약 36만건 연계 • 실종아동 범위 현실화, 위치추적권 확보 등 불합리한 실종법 개정신설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지원 협력	농진청	중기, 유통, 공사, 농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소농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전문가 풀 구축 • 농업경영체 역량강화를 위한 MOU기관 전문가 합동 현장컨설팅 • 농공상 융합 EXPO 공동개최 • 중기청 소상공인진흥원 활용 경영개선교육
기상강우 레이더 공동활용	기상청	국방, 국토, 행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기상 탐지 및 예측능력 향상 • 부처별로 레이더 증설 및 예산 절감 효과 • 기상레이더 운영 및 기술개발의 효율성 증대
112로 보이스피싱 처리 협력체계 구축	금융위	금감위,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 불법사금융 관련 특별단속 추진과 함께 제도개선 병행 • 보험범죄 1차 특별단속 실시 결과 2,833명 감j
학생정신건강서비스	교과부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자원 연계를 통한 포괄적이고 연속적인 조기개입 서비스 제공으로 정책에 대한 국민만족도 제고 • 학생(아동청소년)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작업으로 학교(지역사회)기반의 정신건강증진 기틀 마련 • 학생정신건강서비스지원 체계의 일원화로 행정적인 효율성 제고 및 기관 간 상호보완체계 마련으로 정책의 시너지 효과 • 정신건강문제는 신체건강과 달리 개인문제에 국한하지 않은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것으로 국민정신건강증진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
전기올타리 안전관리를 위한 부처협력	행안부	지경, 환경, 농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전사고 발생 감소 • 행정적 조치 : 종합대책 정상 추진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효율화를 위한 협력	여가부	법무, 문광, 행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확대 • 결혼이민자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시에도 국적취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한국어교육 효율화를 추진하고 불필요한 이중교육을 예방함으로써 예산절감효과 기대

자료 : 박천오·주재현·진중순.(2012). 우리나라 융합행정의 발전 가능성과 방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6(2). 85-112

마. 융합행정의 성공요인과 활성화 방안

○ 박천오 외(2012)의 25개 정부부처 공무원 대상 융합행정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융합행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의 89.7%가 융합행정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융합행정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는 '행정 효율성 향상'(49.4%), 기관 간 칸막이 제거(31.3%), 공공서비스 수준의 향상(13.8%), 고객지향적 마인드의 확산(3.1%), 창의적 발상의 촉진(0.6%)로 나타남
- 융합행정의 장애요인으로는 '개별부처 중심의 정부 운영시스템(28.8%)과 '기관 간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 부족(27.5%)'이 가장 심각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업무 발생에 따른 부담감(15.5%)', '외부 관계 집단과의 이해 충돌(15.2%)', '부서장·기관장의 관심 부족(.5%)', '융합행정 추진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15%)'이 제시됨
- 융합행정 활성화를 위해서는 '융합행정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26.7%), 예산조직 등 업무시스템 재설계(20%), IT를 기반으로 한 부처 간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 활성화(15.2%), 융합행정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지도 제고 및 인식 전환(15.5%), 기관·부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11.5%), 부서장·기관장의 융합행정 리더십(11.5%)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
- 융합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는 '융합행정과제 관련 기관·부서에 조직·인력 확충(45.5%), 정부업무평가/부서평가/개인평가에서 가점 등을 통해 높은 점수를 부여(30%), 융합행정과제 관련 예산을 적극 지원(17%) 등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융합행정과제 발굴방법으로는 '과제 발굴 여부 및 규모를 모두 각 기관 자율에 맡김(38.2%), 각 기관별로 연도별 융합행정 추진계획을 작성하고 그 안에서 일정 수 이상이 과제를 포함하도록 함(28.2%), 국민 혹은 민간전문가 등으로부터 과제제안을 받음(25.2%), 연두업무보고 시 일정 수 이상의 과제를 의무적으로 포함(8.5%)의 순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응답
- 융합행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영역으로는 복지(30%), IT와 전산(12.8%), 고용(8.6%), 재난관리와 방재(7.1%), 기관 간 중복 영역(7.1%), 정부 간 중복 영역(5.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Ling(2002)은 문화와 철학(culture & philosophy), 새로운 업무방식(new ways of working), 새로운 책임성과 인센티브(new accountabilities and incentives), 정책개발, 프로그램 설계, 서비스 전달의 새로운 방식(new ways of developing policies, designing programs and delivering services)로 제시
- 영국 감사기관(NAO, 2001)은 연계형 정부에 참여하는 부처들이 융합행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염두에 두어야 할 체크리스트로 다음과 같이 제시
 - 융합행정 접근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결정, 최적의 융합행정 형태의 설계, 융합행정 접근

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협력기관들의 정책목표 공유, 성과측정체계의 설치, 적절한 방식을 통한 재정지원, 관련 지방 파트너들의 행정적 부담 최소화, 실현가능한 일정계획의 수립, 우수한 리더십 조장, 적절한 기술의 개발과 실행, 적절한 지침과 조언의 제공, 시민 민원통로의 명료화, 책임성의 확보

- 홍콩의 효율추진팀(Hong Kong efficiency Unit, 2009)은 융합행정의 핵심적 성공요인을 참여자(기관)들의 가치 공유, 리더십(leadership), 전략적 기획(strategic planning), 자원 배분(resource allocation),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로 제시했으며 장애요인으로는 세력다툼(turf), 예산통제권의 유지(budget protection), 관료정치(bureaucratic politics), 무관심(ignorance)을 제시

3. 정부 3.0과 부처간 칸막이 허물기

가. 정부 3.0의 의미

-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
 -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정부-국민 간 소통과 협력을 확대
 - 국가보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두어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민간의 창의와 활력이 증진되는 혁신 생태계 조성
 - 부처간 칸막이를 뛰어넘는 통합형 정부운영 지향
 -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민간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 정부

<표 2-3>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

구분	정부 1.0	정부 2.0	정부 3.0
운영방향	정부 중심	국민 중심	국민 개개인 중심
핵심가치	효율성	민주성	확장된 민주성
참여	관 주도·동원 방식	제한된 공개·참여	능동적 공개·참여 개방·공유·소통·협력
행정서비스	일방향 제공	양방향 제공	양방향·맞춤형 제공
수단(채널)	직접 방문	인터넷	무선 인터넷 스마트 모바일

-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토대로 하는 정부 3.0은 일방향 정부 1.0을 넘어 쌍방향 정부 2.0을 구현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별 맞춤형 행복을 토대로 하는 정부 3.0시대를 달성한다는 취지(김윤권, 2013)
 - 정부 3.0의 핵심 내용은 행정정보 공개·공유로서, 정부 부처간, 정부-국민간 정보가 원활히 오갈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어 부처 이기주의를 해소하며, 맞춤형 정보 서비스를 통해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강화·확대한다는 주요 목적을 가짐(김윤권, 2013)

나. 정부 3.0 추진배경

- 정부는 행정환경 변화로 인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조직 운영원리가 필요
 - 고용률 정체, 양극화 심화 등 저성장 구조 속에서 경제부흥을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새로운 모멘텀 필요
 - 기후·환경 변화, 에너지·식량 부족, 저출산·고령화 등 기존의 방식으로 풀기 어려운 복잡한 사회 문제가 대두함으로써 국가간, 부처간 공동대응이 필요한 과제 급증
 - 지식정보사회의 전환에 따라 정부-국민간 관계가 일방향적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변화하고, 모바일·SNS 등의 확산에 따라 정책에 대한 참여 및 투명성 요구가 증대
 - 다양한 정책문제 해결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수단으로서 ICT 기술 활용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지식과 기술의 융복합 혁명이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등장
-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대함
 - 경제규모 세계 15위, 무역규모 7위, 한류 열풍 등 달라진 국가 위상에도 불구하고, 자살률 및 이혼율 OECD 국가 중 1위, 국민행복지수 97위(2012 미겔립조사) 등 국민 행복감 낮음
 - 부처간 칸막이 현상으로 인한 비효율(국제경영개발원 발표 국가경쟁력 22위, 정부 효율성 25위),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 제약으로 인한 정책의 투명성·수용성 저하(2012 국제투명성 기구 부패인식지수 순위 45위)

다. 정부 3.0의 주요 내용

- 공공정보에 대한 적극적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식품·위생, 치안, 가정·복지, 지역물가), 대규모

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정보(공공사업, 계약정보), 예산집행내용·사업평가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지방재정, 국정감시)에 대하여 i)사실을 있는 그대로, ii) 전과정에 대하여, iii)국민 중심으로 공개한다는 원칙 하에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 중심’ 정보 공개로 패러다임 전환

-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 정보를 최소화 하며, 부처별 위원회 및 출자·출연·보조 기관까지 공개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원문까지 사전 공개하는 등 정보공개 대상기관 및 범위를 대폭 확대
- 생산된 문서는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에 바로 이관되어 공개될 수 있도록 「원문정보공개시스템」 을 구축

<표 2-4>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전정보공개 확대 사례

분야	공개정보명	현행	개선
가정·복지	어린이집운영내역 (복지부, 지자체)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아동 및 보육교사 수, 특별활동비, 급식현황, 위반처분내용 등
	의료기관 평가 인증 정보(복지부)	의료기관명, 의료기관 종류, 소재지, 유효기간 등	의료기관 대표자, 병상 수, 의료기관 종료 세분화 등
	교원임용시험 사전예고제 확대(교육부)	시도별, 교과목별 선발예정인원 공개(중등교원 임용시험에 한정)	유치원, 초등, 특수, 영양, 사서, 전문상담 등 모든 교원 임용시험으로 확대
식품·위생 ·환경	의약품 정보(식약처)	의약품 등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	
	유해화학물질(환경부)	거주지역 주변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관리정보	
	원자력 이용시설 주변 환경 정보(원안위)	원자력 이용시설 주변 방사선 환경조사 및 평가보고서	
국가·지방 재정	국가채무현황(기재부)	중앙·지자체·일부 비영리공공기관 채무현황	모든 공기업의 채무현황
	지방재정(안행부)	재정운용결과 및 중요사항, 통합공시 등	대규모 투자사업, 지자체·지방공기업 채무부채현황, 사업별 원가정보 등
행정감시	지방계약정보(안행부, 지자체)	발주계획과 수의계약 내역	발주계획부터 준공감사까지 전 계약과정
	위원회 회의 정보	시장 참석 주요회의(4종) 및 위원회 회의(118종) 전면 공개(회의개요, 회의록 또는 회의 결과)	

○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신규 산업 및 서비스 창출 유도

- 기상, 교통, 지리, 특허, 복지, 보건의료 등 민간의 개방수요가 많고 파급효과 큰 데이터 부터 단계적 개방 추진하고 공공 데이터베이스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개방 5개년 로

드맵'을 수립

- 관련부처간(미래부, 중기청, 안행부 등) 협업체계 구축 및 종합지원을 통해 고공정보가 민간의 창의성 및 혁신적 아이디어와 결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 DB 품질개선사업 확대 및 개방형·표준형 전파, 공공정보 제공창구 일원화,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률 및 장애요소 정비 등 공공데이터를 개방·활용하는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대규모의 경제적 효과 예측(전체 공공데이터 개방시 15만명의 일자리, 24조원의 경제적 효과 유발, 2012 NIA, KAIST)

<표 2-5>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계획

구분	현행	확대(예시)
교통	버스 실시간 운행정보, 노선 및 정류소 정보 등	버스·지하철·항공·항만 운행 시시간 정보, 지역별 교통정보, 도로정보
지리	국가공간정보, 해수면높이 관측정보, 국가지반정보, 국가하천전자지도 등	정제된 GIS 정보, 상업적 활용도가 높은 지리정보 등
교육	학교 일반현황, 교육과정 정보 등	교육기관 평가정보, 입시 및 시험 정보, 다양한 교재정보 등
복지	보건산업 통계, 보육시설 정보, 건강보험정보, 의료보험 정보 등	복지정보간 연계정보, 각종 복지기금 수급·상세정보 등
재정	국가재정정보, 공공기관 경영정보 등	국가예산 배정 및 집행정보, 부처별·사업별 예산 및 집행정보 등

- 주요 국정과제 등 정책 전 과정에 집단지성을 구현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민·관 협치 활성화
 -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전 과정에 국민과의 정보공유·소통·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확장된 민주주의 구현
 - 현장·국민 중심의 행정 구현(현장방문, 현장토론회, 온라인 정책토론 및 전자공청회 등 활성화), 행정제도 개선과정에 민간전문가·정책고객 등 참여 활성화, 현장의 목소리 반영을 위한 행정참여 확대(행정예고절차 개선, 청문·공청회 제도 운영 내실화 등) 등 국민 참여 확대

제2절 문화 가치의 사회적 확산 필요성

1. 문화의 가치

- 문화(culture)의 개념은 예술이나 학문과 같은 ‘정신활동의 소산’이라는 좁은 의미에서 집단적으로 전승되는 ‘삶의 양식의 총체’라는 넓은 의미로 확장되었음(Williams, 1982)
- 문화의 ‘가치’와 ‘효과’라는 용어는 혼용되는 경향이 있으나, 문화의 가치(cultural value)가 ‘문화의 존재 의의’를 뜻한다면 문화의 효과(impact)란 문화활동의 성과(performance) 혹은 결과(outcome), 즉 ‘실현된 가치’, 혹은 ‘측정된 가치’라고 볼 수 있음
- 문화가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논자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이러한 문화 가치가 문화부문에 대한 공공지원의 근거 또는 문화정책의 중요한 정당성을 제공하고 있음
- 영국 싱크탱크인 Demos의 John Holden(2004; 2006)²⁾는 문화의 가치를 i) 미학적 수월성, 개인적인 즐거움과 같은 문화 분야에만 고유한 가치인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 ii) 문화를 이용한 사회정책 및 경제정책으로부터 파생되는 도구적 가치(instrumental value) iii) 문화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신뢰 또는 자긍심과 같은 제도적 가치(institutional value)로 구분함
- 한편 오스트리아 경제학자인 David Throsby(2001)는 문화(cultural object, institution or experience)를 구성하는 문화적 가치를 미적 가치(aesthetic), 영적(spiritual), 사회적 가치(social), 역사적 가치(historic), 상징적 가치(symbolic), 정통적 가치(authenticity value)로 나누고, 이러한 문화적 가치가 가격, 지불의사 등으로 표현되는 사람들의 선호로 이해하는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함

<표 2-6> Throsby가 제시한 문화적 가치

가치 영역	내 용
미학적 가치	미학적인 품질이라는 포착하기 어려운 개념을 그 이상 분해하지 않고 아름다움, 조화, 형식, 기타 작품의 미학적 성질을 예술작품의 문화적 가치로 인식하는 구성 요소로 볼 수 있으며, 작품의 미학적 해석에는 스타일, 유행, 그리고 개인의 기호 등에 영향을 받는 요소가 추가 될 수 있음
정신적	예술작품이 어떤 종교적 신앙, 부족, 그 밖의 문화적인 집단의 일원으로서 특별한 중요성을 갖고

2) Holden, J.(2004). Capturing Cultural Value : How culture has become a tool of government policy. Lodon: Demos.
Holden, J.(2006). Cultural Value and the crisis of legitimacy. London: Demos.

가치	있는 것과 같은 종교적 관점에서 해석될 수도 있으며, 종교와는 무관하게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내적인 특성을 의미할 수도 있음. 또한, 정신적 가치에 의해서 전달되는 유의한 효과로는 이해, 계몽, 통찰 등을 들 수 있음
사회적 가치	예술작품은 다른 사람과의 연대감을 전달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본질을 이해하고 정체성과 장(場)에 대한 감각을 갖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
역사적 가치	예술작품의 문화적 가치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는 그 작품이 탄생할 당시의 생활 상태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거와의 연대감을 부여함으로써 현재를 어떠한 방식으로 투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역사적 연결성임
상징적 가치	예술작품과 기타의 문화적 대상은 의미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것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개인의 예술작품에 대한 해석이 의미를 추출해내는 것이라면, 그 작품의 상징적 가치는 작품으로부터 전달되는 의미의 본질과 소비자에게 주는 가치가 포함 됨.
진품의 가치	예술작품이 진품이며 그 작품이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의미함. 또한 작품의 진품성과 완전성이 위에서 열거한 가치의 다른 원천 외에 그 자체로서 인정되는 가치라는 점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음

자료 : 정제환.(2004). 문화경제학. 한울아카데미.

- 양현미(2007)는 Arjo Klammer(2004))³⁾의 논의에 기반하여 문화의 가치를 크게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문화적 가치로 나누고 있음
 - 그에 따르면 문화의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란 문화적 재화나 서비스가 가지는 가격 또는 그것의 교환가치를 뜻하며 문화의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란 문화의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개인들, 그룹들, 공동체들, 사회들 간의 신뢰, 우정, 사랑, 정체성, 공감 등의 가치들이 증진되는 데에 있어서 각 단위들의 다양한 문화적 습속, 제도, 신념, 활동과 산물들이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총괄하는 것이라고 봄
 - 또한 문화적 가치란 문화가 가진 내재적 가치로서 숭고하고 성스럽고 미적인 경험을 획득하고 체화하고 계발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문화사적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능력으로 봄
 - 한편 문화의 내재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문화적 가치평가의 주체인 집단과 개인에 따라 사회적 가치 평가 또한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 브루노 프라이(2007)⁴⁾와 김정수(2010)⁵⁾는 문화의 가치를 문화예술이 가지는 공공재적 속성 혹은 비사용가치로 파악하고 선택가치(Option value), 존재가치(existence value), 유

3) Arjo Klammer(2004).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Values of Cultural Goods, Cultural and Public Action. V. Rao and M. Walton, eds., Stanford University Press.

4) Bruno S. Frey.(2007). 문화예술경제학. 주수현, 유영명, 박상현, 최성희 역. 시그마프레스

5) 김정수.(2010). 문화행정론 : 이론적 기반과 정책적 과제. 집문당.

산가치(bequest value), 명성가치(prestige value), 혁신가치(innovative value) 등을 제시함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논의들을 토대로 문화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9개로 구분함
 - 물론 여기에 나타난 9가지 유형은 완전히 상호배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문화 가치의 사회적 확산이라는 본 연구의 특성 상 문화가 가지는 가치를 가능한 세분화하여 해당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과 연결시키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방식을 취함
 - 또한 여기에서는 ‘문화’를 협의의 개념이 아닌 광의의 개념으로 보고 논의를 전개함

① 미적 가치(aesthetic value)

- 모든 인간은 아름다움과 감동을 갈구하는 본능적 욕구를 가지고 있음
- 훌륭한 문학, 시, 음악, 회화 등의 예술작품이나, 이러한 문화예술적 요소가 가미된 대상은 그것을 소비·향유하는 이에게 미적 체험을 가능하게 함

② 오락적 가치(recreational value)

- 문화예술은 이를 향유하는 이에게 즐거움과 쾌감을 선사하고, 기분전환을 통해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게 하는 등 오락적 가치를 가짐

③ 소통·공감의 가치(communication / sympathy value)

- 문화예술작품은 그 자체로 작가·예술가의 자기표현이며, 예술가는 작품을 통해 당대의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함
- 문화는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작품을 매개로 서로 이야기하고 이견을 공유하며, 그 속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과정 속에서 억눌려 있던 생각과 불만이 표현되고 분출되며, 각자가 가진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짐
-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공감대를 기반으로 사회적 결속력의 강화가 가능해짐

④ 치료·치유적 가치(therapeutic value / healing value)

- 문화예술은 삶에 지친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심리적 만족과 안정을 찾게 해줌
- 문화예술은 미학적 카타르시스를 통해 스트레스와 불만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정신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 제고에 도움을 줌(art as therapy)

- 또한 문화예술은 일상적 생활이 곤란할 정도의 질병과 장애를 가진 이들의 문제를 완화하고 치유하기 위한 치료도구로서 사용되기도 함(예술치료 : art for psychotherapy)
- 예술치료는 ‘이론에 근거하여 창의적 매체와 예술방법을 적절하게 적용함으로써, 인간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주어 병을 치유하고 완화하며, 인간성을 개발하고 윤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Petzold와 Orth, 1991) 또는 ‘예술을 도구하여 인간의 심리적, 심리사회적,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고 회복하여 전인적 성장에 이르게 하는 것(정여주, 2007)으로 정의되며⁶⁾ 미술치료, 음악치료, 무용동작치료, 연극치료, 글쓰기문학치료, 영화치료 등이 이에 해당함

⑤ 역사적 가치(historic value)

- 문화예술은 과거의 문물을 ‘기록’하고, 현재에 ‘재현’하며, 미래에 전달하는 기능을 가짐으로써 전통의 계승,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연결 기능을 수행함
- 물리적·무형적 전통문화 뿐 아니 당대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반영된 정신적 전통 또한 함께 계승하게 됨

⑥ 상징적 가치(symbolic value)

- 우리 모두는 당대의 문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큰 영향을 받음
- 특정한 집단에 소속된 이들은 해당 집단의 문화 혹은 하위문화(sub-culture)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으며, 문화는 해당 집단 구성원의 정체성과 행동방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뛰어난 문화 혹은 예술가는 해당 집단/지역/국가의 자랑이며, 그 구성원들은 문화를 통해 자부심과 소속감을 부여받게 됨

⑦ 교육적 가치(education value)

- 훌륭한 문화예술은 사물과 세상의 본질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제공하며, 본질에 대한 천착을 가능하게 함
- 문화예술의 향유 및 참여는 감성적 영역에서 뿐 아니라 인지능력 제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침
- 문화는 다른 사람, 다른 집단, 다른 문명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관용, 호혜성, 신뢰 등 민주주의 시민이 갖추어야 할 시민적 미덕(civic virtue)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

6) 정여주, 미술교육논총<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예술치유 시범사업 평가 및 발전 방안>, 한국미술교육학회, 2007.4. p.269.

적 자본(social capital)의 축적을 통해 사회 통합에도 긍정적 기능을 수행함

⑧ 창조적 가치(creative/ innovative value)

- 문화예술은 독특성과 참신성, 새로움을 주요한 요소로 하는 만큼, 기성질서 또는 기존 사고의 틀을 전복하고 새로운 사상, 아이디어, 비전을 제시하는 창조적·혁신적 가치를 가짐
- 문화는 창조적 발상과 비판적 평가능력 함양을 가능케 함으로써 새로운 혁신을 가능하게 함

⑨ 경제적·산업적 가치 (economic value)

- 문화콘텐츠산업은 창의성과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아이디어집약 산업이며, OSMU(One Source Multi Use)를 통한 창구효과(window effect)로 인해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음
- 또한 문화콘텐츠산업은 노동집약적(labor intensive) 산업에 속하여, 고용창출효과가 커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한편 문화콘텐츠는 그 무형성으로 인해 다른 매체, 다른 기술, 다른 분야 등과의 융복합을 통해 얼마든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신산업 창출을 위한 다크호스로 주목받고 있음

<표 2-7> 문화 가치의 차원 구분

문화의 가치	내용
미적 가치	아름다움, 미학적 수월성
오락적 가치	즐거움, 쾌감, 기분전환, 활력
소통·공감의 가치	의사소통(커뮤니케이션), 자기표현, 차이와 다양성의 이해, 사회적 결속력 강화
치료·치유적 가치	심리적 만족과 안정, 위로, 스트레스 해소, 신체적 건강 및 정신건강 함양
역사적 가치	전통의 계승,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연결
상징적 가치	정체성 및 소속감(개인/집단/지역/국가)의 부여
교육적 가치	사물과 세상의 이해, 인지능력 제고, 관용·호혜성·신뢰 등 시민적 미덕의 학습
창조적 가치	창조적 발상, 비판적 평가능력 함양
경제적·산업적 가치	경제성장동력,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고용창출

2. 문화의 가치와 효과에 대한 국내외 연구

가. 해외 연구

- 문화가 가지는 가치의 실제적 측정(measurement)을 통해 문화가 가지는 효과(impact)를 증명하려는 시도는 오랫동안 의구심의 대상이었음
 - 이는 “예술 자체의 개념은 정의가 불가능하며, 이를 측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그것이 가진 핵심적인 요소를 대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던 Hewison(2002:85)과 Missel(1983)의 언급과 그 맥락이 닿아있음
 - 실제로 문화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계량화·화폐화하는데 활용되는 경제이론은 마흐의 곡이나 번스타인의 작품 속에 내재된 가치가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때로는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Bakhshi et al, 2009).
- 따라서 1980년대 이전까지는 문화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었고, 문화에 대한 지원은 문화가 가지는 미적 정당성과 문화의 내재적, 교화적 가치(civilizing values)에 근거했음
-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영국을 위시하여 문화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문화의 효과(impact)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기 시작했음
- 이는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해 재정긴축의 압박, 즉 Smith(2010b)가 말한 예술 지원에 대한 ‘cooler climate’의 맥락에서 더욱 강조되기 시작하여 문화 가치의 입증이라는 문제는 이제는 문화영역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가 됨(Scott & Soren, 2009).
- 영국에서는 문화 및 스포츠 활동이 가치는 가치와 사회경제적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DCMS가 ACE(arts Council England), EH(English Heritage), MLA(the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 SE(Sport England)와 협력 하에 CASE Program(the Culture and Sport Evidence program)이라는 3년에 걸친 대규모의 공동연구를 수행함
- 동 보고서에서는 문화와 스포츠 활동을 통해 생성되는 편익을 다음의 <표 3-1>와 같이 정리하고, 이러한 문화 및 스포츠 활동에의 관여가 가치는 가치, 동기,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

<표 2-8> 문화 및 스포츠 활동의 편익(Benefits)

개인 차원(individual engager)	공동체차원(communitiy)	국가적 차원(national)
achievement, continuity with the past, creativity, diversion, enjoyment, escape, expression, health, income, inspiration, knowledge of culture, self-esteem, self-identity, skills/competency, solace/consolation,	bequest value community cohesion community identity creativity employment existence value innovation option to use productivity reduced crime shared experience social capital	citizenship, international reputation, national pride

- 특히 「Understanding the drivers, impact and value of engaging in culture and sport : An over-arching summary of the research」는 문화예술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문화예술참여가 가져온 사회적 효과를 주관적 안녕(SWB)에 미친 효과와 이에 대한 소득보상액의 추정을 통해 분석하고 있음(CASE, 2010).
 - 보고서에 따르면 일주에 한번 이상 영화를 보는 것은 연간 가구당 9000파운드의 소득보상의 가치를 가지며, 일주일에 한번 이상 콘서트에 가는 것은 9000파운드의 소득보상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는 별도로 Joshua Guetzkow(2002)는 기존의 실증적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인과 사회에 대한 예술의 효과를 다음의 <표 3-2>와 같이 체계적으로 구분함

<표 2-9> 개인과 사회에 대한 예술의 효과

		직접참여	관객참여	예술가, 예술단체 및 기관의 존재
개인	신체적 건강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을 증진시키는 대인관계 구축 및 자원봉사 촉진 ◦ 자기표현과 향유기회 증가 ◦ 청소년범죄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유기회 증가 ◦ 스트레스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개인의 기회 및 성향 증가
	인지적 심리적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효능감과 자아존중감 증가 ◦ 지역사회에 대한 개인의 소속감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자본 증가 ◦ 시공간 추리력 향상(모차르트효과) ◦ 학업성적 향상 	

		◦ 인적자본-기술과 창조력 향상		
	대인관계 효과	◦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형성 ◦ 타인과의 협동 및 소통능력 향상	◦ 타인에 대한 포용력 증가	
사회	경제적 효과	◦ 종업원에게 지불되는 임금	◦ 사람들(특히 관광객방문객)이 예술관람과 지역기업에 비용지출 ◦ 이러한 예술시설이나 기업이 지역에 지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배가효과를 냄	◦ 지역사회 구성원의 예술 참여 성향증가 ◦ 관광객 기업, 사람들(특히 고숙련노동자)과 투자자에게 지역매력도 증가 ◦ 창조산업의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는 창조적 환경 조성 ◦ 경제부흥의 가능성이 더 높아짐
	문화적 효과	◦ 집단적 정체성과 효능감 증가	◦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자부심 형성 ◦ 다양성, 관용, 자유로운 표현같은 긍정적인 공동체 규범 확산	◦ 지역사회의 이미지와 위상 제고
	사회적 효과	◦ 사람들을 참여시키거나, 단체들을 서로 연계하거나, 참여자들에게 지역정부 및 비영리기관을 조직하거나 협력하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자본 형성	◦ 이 기회가 아니면 서로 몰랐을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됨	◦ 이웃의 문화적 다양성 제고 ◦ 이웃의 범죄 및 비행 감소

- 한편 영국의 Art Council(2004)은 문화행사에 참여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압안정, 호르몬 균형, 면역력 향상이 이루어졌으며 수명이 더 길게 나타났다고 보고함⁷⁾
- 또한 문화예술은 범죄예방에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남(양현미, 2007)⁸⁾
 - 예술프로그램 참여 재소자는 출소 후 전체 평균에 비해 재범률이 낮음(예술참여자 재범률 31% < 평균 58%)
 - 청소년 범죄예방 예술프로그램이 도입된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범죄율이 약 5.2% 감소

7) Art Council(2004). The Impact of the Arts : Some Research Evidence.

8) 양현미.(2007). 문화의 사회적 가치 - 행복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영국의 창조산업(creative industries)의 경제적 가치⁹⁾

- 영국 문화미디어체육부(DCMS)가 발표한 <Creative Industries Economic Estimates-January 2014>에 따르면 2012년 영국 창조산업¹⁰⁾의 총 부가가치(GVA, Gross Value Added)는 714억 파운드(약 123조원)으로 이는 영국 경제전체 GVA의 약 5.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영국 창조산업의 GVA는 2008년과 비교하여 15.6% 증가하였으며, 2012년에 약 10% 성장을 기록하여 다른 산업분야보다 월등한 결과를 가져옴
- 영국 창조산업과 관련된 일자리는 168만개로 영국 전체 일자리의 5.6%를 차지하며, 2011년 대비 8.6% 증가한 수치임
- 수출규모는 2011년 기준 약 155억 파운드로 영국 서비스 수출규모의 약 8%를 차지하며, 2009년 대비 16.1% 증가하여 영국 전체 서비스시장 규모 성장률인 11.5%에 비해 높은 성장 속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프랑스 문화산업의 경제적 가치¹¹⁾

- 프랑스 문화통신부에 따르면 2011년 프랑스의 문화 분야(공연예술, 문화유산, 시각예술, 출판, 박물관, 시청각, 건축, 영화, 이미지와 소리 산업, 도서관, 아카이브 등 포함)는 578억 유로의 부가가치를 생산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모바일 통신의 2배 이상, 자동차 산업의 7배 이상의 수준임
- 한편 문화 분야에 종사하는 인구는 약 65만명으로 이는 프랑스 총 노동인구의 2.5%를 차지
 - 공연예술(15만명), 광고(10만명), 그리고 출판(8만7천명) 순으로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나. 국내 연구

□ 창의성과 상상력에 미치는 효과

- 조은영(2008)은¹²⁾ 실험군의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무용교육이 유아실험집단의 유창성, 융

9)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reative-industries-economic-estimates-january-2014>

10) 광고/마케팅, 건축, 공예, 디자인(상품, 그래픽, 패션), 영화, TV, 비디오, 라디오, 사진, IT, 소프트웨어, 컴퓨터, 출판,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음악, 공연, 미술 등을 포함

11)

<http://policydb.kcti.re.kr/galleryView.do?sgrp=S01&siteCmsCd=CM0001&topCmsCd=CM0223&cmsCd=CM0418&pnum=1&cnum=2&ntNo=209&dvsn=&src=&srcTemp=&currPg=1&origin=Le+figaro>

12) 조은영(2008), 「무용교육이 유아의 창의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통성, 독창성, 상상력을 증가시킴을 검증함

- 경기도 화성시 D유치원 유아대상, 실험집단- 30명, 비교집단- 30명 선정하여 소고 교육을 8주간 실시
- 무용교육이 유아의 창의성 발달 중 언어, 도형, 신체 영역에 있어서 하위개념인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상상력에 효과가 있었으며, 유아의 창의성발달시기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는 결과 도출

○ 변윤희, 현은자(2004)¹³⁾는 만5세 유아실험/비교집단의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이를 통한 반성적 사고가 유아의 언어창의성, 도형창의성, 신체창의성, 음악창의성 증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검증함

- 사회경제적 수준이 중류층으로 비슷한 서울의 C 유치원과 일산의 S유치원의 만 5세 원아 총 111명을 대상으로 실시, 이 중 실험집단 61명, 비교집단 50명에 대해 10주간 그림책 중심 유아 예술교육프로그램을 실시
- 그림책은 종합 예술적 가치를 가지며 통합예술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
-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예술교육프로그램은 언어, 미술, 신체, 음악 영역에서 유아의 창의성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임을 검증

□ 성적 및 태도 향상에 미치는 효과

○ 허정임 외(2010)¹⁴⁾는 산촌벽지학교의 초1~6학년17명 대상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미술교육이 학생들의 학습태도, 창의적 미술표현, 수학성적의 향상을 가져온다는 결과를 얻음

○ 강인에 외(2011)¹⁵⁾는 교직과목 수강중인 대학생 27명을 대상으로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문화예술활동 기반 통합 수업이 학생들의 지식, 기술, 태도 등이 향상 되고 창의성, 재미, 흥미 측면에서 유용함을 검증함

○ 구인숙(2010)¹⁶⁾은 초2년생 37명 실험/비교집단의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예술통합교육·무용이 실험 집단의 정서 지능 향상효과를 측정

□ 우울증 감소 및 미치는 효과

13) 변윤희, 현은자(2004),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유아교육연구, 24(5) : 311-336.

14) 허정임 외(2010), 「미술교육을 통한 문화예술 소외지역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 연구」, 미술교육연구논총, 27 : 185-203.

15) 강인에 외(2011), 「문화예술활동 기반 통합 수업의 학습효과」, 조형교육, 40 : 1-26.

16) 구인숙(2010), 「예술통합교육·무용이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모드니 예술, 3 : 237-255.

- 곽윤정(2010)¹⁷⁾은 10-12세 복지시설 아동 312명 대상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실험군의 우울성향 유의하게 유지시키고 자아상을 유의하게 상승시킨다는 결과를 얻음
- 심리적 안정 및 자존감 제고에 미치는 효과
- 변인옥, 황순택(2009)¹⁸⁾은 알코올 중독환자 대상의 실험/처치/비처치 통제를 통해 알코올 중독환자 실험군이 예술치료를 통해 충동성 감소, 자기 존중감 증가, 효과지속성이 제일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얻음
- 김은영(2011)¹⁹⁾은 저소득층 10세미만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문화 예술교육프로그램이 자신감 향상, 타인 배려능력, 의사소통 능력향상, 호기심, 즐거움 등 긍정적 영향을 가져오고 기능훈련의 경우 기량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검증함
- 서주연, 원상화(2011)²⁰⁾는 자신감이 적고 대인관계가 어려운 특목고2년 여고생 1인을 대상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예술심리치료가 학교 부적응 행동 감소, 자아관계, 상황대처능력, 자아 존중감 증진, 타인관계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얻음
- 김은진, 강인애(2011)²¹⁾는 대학 교양과목 수강생 대상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대학교양과목 수업에서 음악테크놀로지 기반학습(MTBL)이 음악에 대한 관심과 흥미 상승, 창의적인 아이디어 관찰, 타 전공 분야와의 연계관찰, 재미와 몰입이 학습의 주요 동기로 작용함을 밝힘
- 문지영(2010)²²⁾은 (CCSBI:Classroom Child Stress Behavior Instrument)측정을 통해 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유치원 재원 중인 만 5세아동 남 21명, 여19명 총 40명을 대상으로 12주간의 집단음악치료프로그램 제공과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하여 집단음악 치료프로그램이 유치원 아동의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검증함
 - 12주간의 음악치료프로그램 진행 결과 음악치료프로그램은 아동들이 선호하는 음악활동 안에서 자유롭게 감정적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유치원 상황에서 유발되

17) 곽윤정(2010),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우울성향, 자아상, 정서기능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7(1) : 1-14.

18) 변인옥, 황순택(2009), 「알코올 중독자의 충동성 및 자기존중감 향상을 위한 인간중심 표현예술치료의 효과」, 미술치료연구, 16(6) : 1003-1027.

19) 김은영(2011),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영향에 대한 질적연구」, 예술경영연구, 19 : 5-31.

20) 서주연, 원상화(2011), 「예술심리치료가 학교부적응 여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학교적응력에 미치는 단일사례 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7(1) : 19-43.

21) 김은진, 강인애(2011), 「대학교양과목 수업에서 음악테크놀로지 기반학습(MTBL)이 감성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감성과학, 14(4) : 513-524.

22) 문지영(2010),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유치원 아동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 예술교육연구, 8(2) : 35-48.

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제시

□ 적응력 제고에 미치는 효과

- 김인숙, 이경희(2011)²³⁾ 다문화가정아동 실험/통제군을 통해 무용/동작치료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내재화 문제를 유의하게 감소시키고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하게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얻음
- 김은화(2011)²⁴⁾은 지적장애아동 20명의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통합예술치료가 적응행동을 증가, 부적응행동을 감소시킴을 검증함
 - 실험집단 대상아동: K시에 소재한 L어린이집 방과 후에 다니고 있는 초등 학교 장애아동 10명(8세~13세)
 - 통제집단 대상아동: K시에 소재한 D초등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아동 10명(8세~13세)
 - 20회에 걸쳐 지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통합예술치료를 적용해 적응행동 향상과 부적응행동 감소가 일어남을 밝힘
- 신형미, 정여주(2006)²⁵⁾는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탈북청소년이 체험하게 되는 본질과 의미를 도출해내기 위해 탈북청소년 3명에게 10주간의 단계별집단미술치료를 제공하고 van Manen의 해석학적 질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고, 탈북청소년이 치료과정을 통해 <상징적 의사소통>과 <내적 대화>, <공동집단의 격려>, <미래 설계의 가능성>등을 체험하여 집단미술치료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함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도출하였음. 또한, 향후 미술치료의 대상을 기존의 주요대상 군이었던 정신 및 지체장애인에서 독특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으로까지 확대 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였음

□ 사회적 관계 형성에 미치는 효과

- 강경숙, 최세민, 오가영(2009)²⁶⁾은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이 함께 통합된 환경에서 음악, 미술, 동작, 놀이 등을 통한 통합예술치료적 접근이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
 - 동 연구는 장애아동 3명과 일반아동 3명을 선정하여 단계별 통합예술치료를 제공하고 사

23) 김인숙, 이경희(2011), 「무용/동작치료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7(4) : 57-73.

24) 김은화(2011), 「통합예술치료가 지적장애아동의 적응행동과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7(1) : 117-140.

25) 신형미, 정여주(2006), 「탈북청소년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체험연구」, 심리치료: 다학제적 접근, 6(2) : 81-102.

26) 강경숙, 최세민, 오가영(2009), 「통합예술치료가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또래관계 향상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13(2) : 99-112.

전/사후 검사를 통해 통합환경에서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또래관계에 있어 사회적지지, 친밀, 우의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검증함으로써 통합예술치료가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또래관계 형성에 효과가 있으며 향후 장애인과 일반인의 사회통합의 도구로서 활용할 가치가 있음을 강조함

- 이은경(2005)²⁷⁾은 재범의 방지와 함께 자아정체감이 중요한 시기에 법적 재판과정을 경험하고 죄명을 부여받아 저하된 자존감과 환경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보호관찰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상표상²⁸⁾을 통해 집단예술치료 제공과 사전/사후 Rorschach²⁹⁾검사를 통해 표현예술치료의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의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과 전인격적 성취를 위해 촉진적 역할을 하는 치료프로그램임을 입증함

□ 인지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 정정순(2004)³⁰⁾은 발달장애 아동6명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아동의 감정표현과 인지적 능력, 주변인 이해도가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질적으로 향상됨을 검증함
- 최애나(2010)³¹⁾는 67-91세 노인 중 약간의 심신장애노인 12명 추출하여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음악치료활동이 67-91세 약간의 심신장애노인들의 인지기능을 호전시키고 우울증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검증함

□ 건강에 미치는 효과

- 이철우, 김갑숙(2007)³²⁾은 흡연 중인 여자중학생 12인 대상 단계적 인지행동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제공 전, 후로 사전/사후 검사를 통하여 인지행동집단미술치료가 흡연충동 감소, 스트레스 정서중심적 대처방식, 자기효능감 향상, 흡연량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검증함

□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효과

- 문선영(2008)³³⁾은 4개 중학교 10명 학생 실험군/비실험군 대상 검증, 조사, 관찰을 통해

27) 이은경(2005), 「보호 관찰소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집단치료프로그램 효과검증」, 학생생활연구, 21 : 99-128.
 28) 표상을 크게 자아표상(self-representation)과 타인표상(other-representation)으로 나뉘며, 대상표상은 자아표상과 함께 쓰임. 자아표상은 주요타자들과 대인관계경험을 바탕으로 내면화된, 자신에 대한 생각, 느낌, 감각, 기억, 의미를 뜻함.
 29) 심리검사법의 하나로 스위스의 정신과의 로르샤크 H.Rorschach에 의해서 창안된 투사법에 의한 인격검사법(간호학대사전)
 30) 정정순(2004),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이 발달장애아동의 감정표현에 미치는 효과」, 언어치료연구, 13(3) : 53-74.
 31) 최애나 외 (2010), 「음악치료활동이 주간보호노인의 인지기능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6(1) : 103-121.
 32) 이철우, 김갑숙(2007), 「인지행동 집단미술치료가 흡연여중생의 흡연량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8(2) : 493-511.

통합 예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대인예민성, 신뢰감, 자신감 상승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얻음

□ 기타 문화향유 및 참여활동과 문화복지정책의 효과

○ 양혜원(2012)³⁴⁾은 1,021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회귀분석하여 문화예술 향유 수준이 높을수록³⁵⁾ 자아존중감(self-respect), 대인적 의사소통(communication) 능력, 타인에 대한 신뢰 등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창의성((creativity) 여가만족도, 삶의 만족도, 행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지며, 우울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을 밝혀냄

- 또한 국민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문화복지정책(문화바우처사업 등)과 문화예술교육이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의 증가를 통해 수혜자들의 문화예술 관심도, 문화예술에 대한 감수성, 행복, 건강, 신뢰, 창의성을 유의미하게 증대시켰음을 제시함

[그림 2-1] 문화예술향유 및 문화복지정책의 효과



자료 : 양혜원(2012) 분석 결과를 재구성

□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제적 효과

○ 2011년 기준 국내 콘텐츠산업의 매출액은 약 83조원으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연평균 6.4 증가함

○ 한편 수출액은 43억 201만 달러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22.1% 증가하였으며, 부가가치는 약 24조원에 달함

33) 문선영(2008), 「통합예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 한국예술치료학회지, 8(1) : 275-301.

34) 양혜원(2012). 문화복지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 추정과 정책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5) 연간 문학, 공연(음악, 연극, 뮤지컬, 무용, 전통예술), 전시, 영화 등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 빈도

- 2011년 국내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수는 약 60만 4,730명으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0>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제적 효과

(단위 : 10억원, 백만달러, 천명)

	매출액 (10억원)	수출(백만달러)	부가가치(10억원)	종사자 수(천명)
출판	21,245	283	8,946	199
만화	752	17	308	10
음악	3,817	196	1,598	78
게임	8,805	2,378	-	95
영화	3,773	16	-	30
애니메이션	529	116	223	5
캐릭터	7,210	392	3,065	26
방송	12,752	223	4,548	38
광고	12,173	102		35
지식정보	9,046	432	3,915	69
콘텐츠솔루션	2,867	146	1,166	20
합계	82,968	4,302	23,769	605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2 콘텐츠산업백서.

□ 문화콘텐츠가 국가이미지에 미치는 효과

- 조혜영(2003)³⁶)은 중국 학생들이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 및 한국 제품에 대한 원산지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형성되었음을 밝혔으며, 한류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인식, 관심이 증가했으며,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가 크게 개선되었음을 주장함
- 유세경과 고민경(2006)³⁷)은 중국대학생들에 대한 연구에서 한국 TV 드라마의 시청시간이 길어질수록 한국 대중문화에 긍정적이고, 한국에 대한 인지도와 이미지가 상승한다는 결과를 보고함
- 유승관(2009)³⁸)은 일본인이 한국드라마 시청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인식 전환이 나타나고 더 나아가 한국 국가 이미지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힘
- 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성섭·김미주, 2009)³⁹)에서도 한국영상물과 대중가요가 한국

36) 조혜영.(2003). 한국 체류 중국 유학생들의 한류와 한국 이미지 인식에 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3(2) : 209-234

37) 유세경·고민경.(2006). 한국 TV 드라마의 시청행위와 한국과 한류에 대한 태도 관계 연구: 중국 대학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6 : 46-76

38) 유승관(2009). 한일 양국 수용자의 드라마 시청이 국가이미지 형성에 대한 비교 연구. 방송통신연구 68 : 192-220

39) 김성섭·김미주.(2009). 태국사회에서 한류 대중문화 상품이 한국의 국가이미지 인식과 한국 방문의향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23(4) : 101-125

의 국가 이미지를 우호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접적으로 한국 방문을 촉진하는 효과도 일으키고 있다고 보고함

3. 문화 가치를 활용한 국내외 사례

가. 해외 사례

□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템아(El Sistema) (유문무, 2010)⁴⁰⁾

- 엘 시스템아(El Sistema)는 베네수엘라 국립 청년 및 유소년 오케스트라 시스템 육성재단으로, 1975년 경제학자 호세 안토니오 아크레우의 <음악을 위한 사회행동>으로 시작됨
- 마약과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던 빈민가 청소년에게 오케스트라교육을 통해 악기에 대한 책임감, 조화를 위한 협동심과 상호존중을 일깨워줌으로써, 음악을 통한 교육과 재활, 범죄로부터의 보호를 이루어냈으며, 이들을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서 성장시키는 사회적 치유 효과를 거둠
- 2010년 현재 베네수엘라에는 취학 전 아동, 어린이, 청소년 레벨 등으로 나뉜 5백 개 가량의 오케스트라와 음악그룹이 활동 중이며 25개 주에 전문음악교육시설과 기술지원 시설을 갖춘 221개의 지역센터가 설립되어 있음
- 또한 위의 조직을 거쳐 간 인원은 약 30 만명에 달하며 그들 중 다수는 5세 ~ 20세 이며, 60%가 빈민층 출신임

□ 영국의 게이즈헤드(Gateshead)

- 영국의 게이즈헤드는 산업기반이 석탄 산업에서 산업혁명 이후 금속제조업, 조선업, 화학공업 등과 같은 중화학공업으로 급속하게 성장하지만 1900년대 중반 중화학공업의 쇠퇴와 더불어 경제적, 사회적으로 쇠퇴하게 됨
- 이에 실패한 중공업도시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문화적, 경제적으로 활력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문화수도 도시재생전략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연간방문객 증가되었으며, 세이지 음악당(2005)과 발틱 미술관(2002) 등 신규시설 설립으로 고용 창출 효과 등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인구증가는 주

40) 유문무. (2010). 문화복지의 성장동력-영화 <엘시스템아>를 중심으로. 문화경제연구, 13(2) : 27-46.

목되는 결과임.

- 게이츠헤드 문화 중심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총감독인 피터 스타크은 ‘지역의 문화, 역사, 정체성에 기반을 둔 정책 수립’과 ‘지역 문화정책 전문가와 시의회 등 다양한 이해주체들이 <만장일치>의 원칙하에 상호 협력’, ‘외부관광객의 눈에 맞추지 않고 철저히 주민을 위한 문화 서비스 우선’ 등의 주민 중심의 내적 강화의 선행을 프로젝트의 성공요인이라고 평가함(김상원 외, 2012)⁴¹⁾

□ 일본 가나자와 시민예술촌⁴²⁾

- 인구 45만명이 거주하는 일본 이시가와현 가나자와시는 과거 타 도시에 비해 도시성장이 정체되었으나 문화를 통한 성공적인 도시재생으로 지역경제성장을 도모하였으며 현재 창조 도시의 국제적 모델이 되었음
- 가나자와시의 도시재생 핵심은 ‘전통문화자원의 활용과 현대문화의 재창조’이며 이를 위해 1996년 개관한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이 시민들의 문화 활동을 적극 지원함
- 1910년에 건축되어 낙후한 방직공장 창고를 가나자와시가 매입하고 리모델링한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은 시민과 아마추어 및 전문예술가들의 문화예술창조 공간, 성과발표의 장, 교류의 장, 교육연수의 장으로 이용됨
- 시민들의 문화체험을 위해 가나자와시에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365일 24시간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며 프로그램에 따라 저렴한 이용료를 지불함(6시간 기본 이용료는 1050엔, 한화 1만1600원⁴³⁾)
 - 총 97,000㎡ 규모의 시민예술촌은 5개의 예술공방, 잔디광장, 직인대학, 퍼포먼스관, 사무동, 전통가옥, 레스토랑으로 이루어져 있음
 - 각 공간에서 연극, 음악활동, 무용, 창작활동, 강의, 전통기술체험 등이 가능함
-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의 운영으로 지역예술가, 남녀노소, 아마추어예술가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예술을 향유함에 따라 문화를 통한 커뮤니티활동을 통해 가나자와시민 삶의 질이 높아졌으며, 창의성, 예술성, 공동체적 성향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게 됨
- 둘째, 지역의 역사성을 파괴하지 않고 재활용함으로써 전통과 현대의 공존을 통해 노후한 방직공장이 새로운 시민문화의 중심지가 되고 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졌으며, 공동체 활동의

41) 김상원 외.(2012). 문화도시 공간규모에 따른 창조적 재생 사례 연구-독일, 스페인, 영국, 국제기구 및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지>,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 344-363.

42) 윤혜경, 이연숙(2008).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의 도시재생 기능성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15. pp.123-128.

43) 광주일보. 2013년 9월 3일자. ‘문화로 도시살린 日가나자와·나오시마를 가다’.

www.kwangju.co.kr/read.php3?aid=1378134000505479007

장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참여와 공동체 회복이 이루어짐

- 셋째, 조직 간 효율적인 지역자원 분배, 도시경영의 장기적 정책추진, 도시정체성 확립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도시 브랜드가치 상승, 글로벌 브랜드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 등을 획득함

□ 영국의 에딘버러 페스티벌(Edinburgh Festival)

-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 유럽인들에게 가해진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 시작,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문화예술축제로 자리잡음
- 에딘버러 국제페스티벌은 영국정부와 에딘버러시의 후원을 받으며 글라인드번(Glyndebourne) 오페라단 행정관이었던 루돌프 빙(Fudolf Bing) 등의 기획으로 시작된 에딘버러 페스티벌은 오페라, 클래식음악, 연극, 춤, 비주얼 아트 분야에서 활약하는 여러 나라의 공연팀들을 초청하여 꾸미는 세계 최대의 공연축제로 성장함
- 매년 8월 중순부터 3주 동안 진행되며, 해마다 새로 정해지는 공연 테마에 따라 100여개의 공연이 무대에 올라가고 축제에 참여하는 관람객은 수십만 명에 이룸
- 10여개의 축제(국제예술축제,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영화제, 책 페스티벌, 재즈 페스티벌, 에딘버러 밀리터리 타투 등)로 이루어지며 특히 프린지페스티벌(fringe festival)에는 해마다 수백 개의 공연단체가 참가하여 수천 건이 넘는 공연이 행해짐(2011년 2,600여 공연 개최, 판매티켓 200만 장, 관객 20만여 명)
 - 2006년 발간된 에딘버러 축제에 대한 종합보고서(Thundering Hooves)에 따르면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을 통해 얻는 수익은 연간 7200만 파운드에 달함⁴⁴⁾
- 에딘버러 지역에는 연간 1,2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2007년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에딘버러 페스티벌의 경제적 효과는 2,544억 원으로 추정됨⁴⁵⁾
- 축제 관객의 30%가 에딘버러 주민이고 입장권 판매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주민들의 직접 참여도가 높아 지역주민들의 통합 및 결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됨

44) 에딘버러 프린지 A to Z, 2008, 예술경영지원센터

2) 노컷뉴스(2012.8.9.)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23224>

<그림 2-2> 영국 에딘버러 페스티벌



자료 : <http://blog.naver.com/modetourcom?Redirect=Log&logNo=70135727983>

□ 프랑스의 니스 카니발⁴⁶⁾

- 프랑스 니스시는 인구 35만 명의 중소도시로 과거 꽃, 향수, 올리브가 특산물인 작은 어촌 마을이었으나 뛰어난 경관으로 인해 휴양도시로 발전하였음
- 700년 전통의 카니발 축제는 매년 2월에 열리며 전통적인 축제방식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색을 입혀 연중 최대 관광객을 유치함
- 가장 큰 축제 카니발 이외에도 니스지역은 1년 사계절 내내 크고 작은 축제를 개최하며 휴양 및 관광도시로서 발전해 나가고 있음
 - 카니발은 사순절을 기념하여 금요일인 수요일 전 까지 만찬을 즐기는 종교적 축제이며 유럽 각 지역마다 그 성격이 조금씩 다르지만 니스시의 카니발은 1960년대에 들어서며 본격적으로 발달하여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음
 - 카니발 축제기간동안 니스시의 주민들은 마차제작과 각 테마에 맞는 축제의상, 모형, 인형 제작에 직접 참여하며 축제준비기간은 약 6개월이 소요됨
 - 또한 수천 명의 지역 학생, 회사원, 주민이 카니발 행렬과 퍼레이드에 직접 참여하며 해마다 니스시 시의회와 관광사무국을 주축으로 지역민들은 카니발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이웃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적극적으로 참여함
 - 지역상인, 숙박업자, 식당 종사자들은 친목회 형식으로 모여 자신의 사업장을 장식하고 가장행렬을 준비함으로써 본인들이 직접 축제를 즐김과 동시에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기위해 노력함
- 니스 카니발은 남녀노소 모든 시민이 축제를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에 참여함으로 축제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게 하였으며, 축제를 통해 니스시는 작은 어촌마을에서 휴양지로, 다시 세계적인 관광지로 각광받게 되었으며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발전,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고용증대 등의 효과가 나타남

46) 김성진(2005). 축제의 문화적 정체성과 경제·사회적 효과에 관한 연구 : 프랑스 니스 카니발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학위논문.

□ 중국의 산수실경공연, 인상(印象, impression)시리즈

- 장이머우(張藝謀) 감독의 산수실경공연으로 중국 정부와 공동으로 중국의 명산, 호수, 관광지를 무대로 그 지역의 민화나 전설을 공연으로 제작함
-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대형 예술극에 해당하며, 2004년 계림 지역의 <인상유삼저>를 시작으로 항주 지역의 <인상서호>, 리장 지역의 <인상여강> 등 5개의 시리즈가 만들어짐
- 해당 도시의 문화와 자연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주민들을 공연에 출연시켜 지역 경제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
- <인상서호>의 일일 입장수입은 1억여원에 달하며 <인상유삼저>와 <인상서호>의 경우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공연 관련 일자리 창출 등 연간 3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 창출⁴⁷⁾
- 계림 지역의 경우 <인상유삼저> 공연으로 지역주민들에게 300~400만원의 수입 창출

<그림 2-3> 중국의 산수실경공연, 인상 시리즈



자료 : <http://blog.naver.com/chinasisa?Redirect=Log&logNo=20181355267>, <http://cafe.naver.com/chinasunkorea/31>

□ 서커스에 스토리와 첨단무대기술 및 영상을 접목한 <태양의 서커스>

- 태양의 서커스(Cirque du Soleil)는 캐나다의 거리공연자 기 랄리베르테가 1984년에 캐나다 퀘벡주에 같은 이름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설립하면서 시작됨
- 전통적인 서커스 요소와 함께 첨단 무대기술과 영상, 오페라, 음악, 코미디 등이 혼합되어 새로운 공연 장르를 열었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연간 1조원이 넘는 매출과 약 1,500만 명의

47) 이동배(2011). 중국 수상공연 콘텐츠의 성공요인 분석과 한국적 적용방안 연구-장이머우의 인상시리즈를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연구 제1호.

관객을 달성하는 등 큰 성공을 거두어 전 세계 6개 대륙 150여 도시에서 순회공연을 펼치고 있음⁴⁸⁾

□ 3D 입체영상으로 영화사에 새로운 획을 그은 <아바타>

- 2009년 개봉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블록버스터 할리우드 영화로 실사촬영과 CG가 혼합된 3D 영화로 아날로그적 정서와 신화적 상상력, 디지털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흥행에 대성공함
 - 이모션 캡처(Emotion Capture) 기술과 가상 카메라(Virtual Camera)를 통하여 CG 캐릭터의 생생한 피부와 표정, 근육의 움직임뿐 아니라 동공 크기의 변화, 눈썹의 미세한 떨림까지 세밀하게 표현함
 - 전 세계 동시개봉 17일 만에 월드와이드 박스오피스 1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전 세계 역대 흥행 1위를 차지함

<그림 2-4> 태양의 서커스와 아바타



□ 기타 다양한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 영국 런던의 그네가 있는 버스정류장이나 일본에 있는 딸기 모양, 수박모양의 버스정류장, 축구 골대 모양의 버스정류장 등 다양한 버스정류장 디자인이 등장⁴⁹⁾
- 프랑스 리옹의 Croix Rousse 터널⁵⁰⁾은 미디어아트작품을 터널에 설치함으로써 빛과 예술을 활용한 새로운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선보임

48)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2&nid=171107>

49) http://blog.naver.com/on_line_mag?Redirect=Log&logNo=60207397564

50) <http://culturebox.francetvinfo.fr/premiere-a-lyon-le-spectacle-est-dans-le-tunnel-146265>

○ 쓰레기 봉투의 변신⁵¹⁾

-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있었던 도시의 환경을 바꾸는 캠페인 중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 하에 쓰레기 봉투의 디자인을 바꿈으로써 친환경의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얻게 됨

<그림 2-5> 해외의 다양한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나. 국내 사례

□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 경기 수원시 못골시장

- 못골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전성시 사업⁵²⁾으로 조성되었으며, 문화를 이용하여 침체된 재래시장을 활성화한 성공사례로 꼽힘
- 상인들의 이야기가 담긴 간판과 매대 : 전문가들이 상인들을 취재하여 그 이야기를 기반으로 간판과 매대를 디자인함. 손님들은 독특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간판을 보면서 주인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고, 상점 주인과 손님이 이를 통해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면서 신뢰와 유대가 형성되게 됨
- 못골 온에어 : 상인들이 직접 라디오 DJ가 되어 방송을 하는 라디오스타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시장의 소식을 전해주고 손님들의 불만을 일일이 공개하며 노래를 틀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상인 라디오 방송
- 줌마불평합창단 : 여성 상인들을 대상으로 노래교실을 통해 상인들의 이야기를 합창으로 풀어냄으로써 상인 간 소통 및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여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으며, 못골시장의 스타로 떠오름
- 못골밴드 : 못골시장 상인동아리 중 하나로, 국내 최초의 상인 밴드

51) <http://blog.naver.com/yhjung362001?Redirect=Log&logNo=100166909093>

52) 전통시장을 지역문화공간이자 일상의 관광지로 조성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민의 문화향유를 제고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 과거 점포 수 90개, 방문객 4천명에 불과했던 못골시장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 이후 지역주민과 외지 관광객이 많게는 하루 2만명씩 찾아와 문전성시를 이루게 됨⁵³⁾
- 문전성시 이후 못골시장의 매출액은 평균 22.8%가 상승했고 유입인구는 35% 증가하는 효과를 거둠⁵⁴⁾

<그림 2-6> 수원 못골시장의 이야기간판, 못골온에어, 줌마불평합창단



자료 : <http://blog.naver.com/sexysharon?Redirect=Log&logN>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

- 마을미술 프로젝트 : 부산 감천마을
- 부산의 대표적인 달동네 관자촌이던 감천문화마을은 지역 예술가들과 주민공동체가 예술적 감성을 불어넣으면서 커다란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변모함
- 천마산의 높은 산자락을 따라 계단식으로 늘어선 집들의 벽에는 알록달록한 파스텔 색상의 페인트가 칠해져 ‘한국의 맛추픽추’ 로 불리며, 미로 같은 골목마다 숨겨진 공공미술작품, 빈집을 활용한 갤러리와 북 카페 등으로 볼 거리가 가득하여, 한국형 도시재생의 성공모델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음
- 매 주말 3,000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방문하며, 2013년에는 약 30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다녀가면서⁵⁵⁾ 5곳에 불과하던 점포는 30여 곳으로 증가하는 등 감천문화마을의 경제파급 효과는 약 500억원으로 추정됨⁵⁶⁾

<그림 2-7> 부산 감천마을

53) 남정탁.(2013). “수원 못골시장, 구경 한번 와보세요...웃음이 가득해요”. 세계일보 2013.11.19.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11/19/OutUrl=naver>

54) 최영진.(2012). 시장의 진화 - 전통시장이 문화예술을 만났을 때, 경향신문. 2012.9.2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code=960100

55) 이상연.(2014). ‘산복도로 르네상스’...부산 감천문화마을 사업비 10억 추가 확보. 경상일보. 2014.1.19.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0249>

56) 김태현.(2014). 달동네였던 '부산 감천문화마을', 관광객 年 40만명 몰린다는데... 한국경제 2014.1.20.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



자료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12059241>, <http://yaho8.blog.me/20202251483>

□ 아트마케팅 및 예술을 활용한 브랜드디자인 경영

- 예술을 활용한 브랜드디자인 경영은 예술의 부가가치를 이용하여 기업이나 브랜드의 이미지와 인지도를 높여가는 전략으로 문화예술이 구축한 독특한 감성코드를 통해 소비자들이 기업과 브랜드에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게 하며, 브랜드에 대한 고객들의 지속적 관심 제고, 브랜드 인지도 증가를 통해 기업 이미지와 로열티 형성에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함⁵⁷⁾
- 국내에서 내수경기 및 소비침체로 고심하는 기업들의 새로운 마케팅 기법으로 문화(culture)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⁵⁸⁾
 - 이들은 4C, 즉 문화예술 활동(culture)강화와 업체 간 전략적 협업(collaboration), 웰빙 열풍에 맞춘 고객 건강관리(control), 체험을 통한 직접소통(communication)을 활용
 - CJ제인제당은 자사의 햄 제품(스팸)과 비슷한 이름의 영국 뮤지컬 <스팸어랏>의 메인 협찬사로 참여해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으며, 20~30대 여성들이 주 타겟인 디저트용 젤리 ‘쁘띠첼’의 이름을 넣은 <쁘띠첼 씨어터>를 개관
- 삼성전자의 버블샷3 W9000은 물을 한 방울도 사용하지 않는 ‘무수 건조’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 10명과 어린이들에게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실제 물을 절약하는 방법을 담은 그림책을 제작함⁵⁹⁾
- SPC그룹의 파리바게뜨도 프랑스의 유명 일러스트 작가 세브렝 미예와 베이커리 패키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며 파리의 낭만적 감성을 재해석한 ‘러비앵’ 캐릭터 패키지를 선보임
 - 총 16가지의 ‘러비앵’ 캐릭터 제품들은 설렘, 행복, 씩스러움 등 다양한 감정과 표정을 지니고 있어 패키지를 통해 선물하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임.
- 한국도자기는 젊고 개성있는 작가들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여 디자인 콜라보레이션 라인

57) 이현우.(2011). 예술과의 협업을 통한 브랜드 디자인 경영실태와 효과. 예술경영연구 19. 123-147.

58) 김현진·장관석.(2013). 골빔면... 스팸뮤지컬... 식품업계 4C 마케팅.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30609/55741064/1?rec=1>)

59) 뉴스핌(2013). 제품에 예술을 입혀라..콜라보레이션 마케팅 ‘눈길’.

인 'YAP(Young Artists Project)'을 론칭함

- 톡톡 튀는 이미지와 컬러풀한 색이 특징인 팝아트 회화를 도자기에 표현하여 20-30대 신규 고객층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도모함

○ 화장품업계에서는 러쉬가 텍스타일 디자이너 윌리엄 모리스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기프트 세트 'LUSH JOY TO THE WORLD'를 선보였음.

- 빅토리아 시대를 모티브로 한 패키지 디자인으로 베스트셀러 보디 크림인 드림 크림과 크리스마스 한정판 보디숍, 스노우 케이크로 구성되었음.

□ 소셜게임(Social Game)⁶⁰⁾

○ 소셜게임 SNG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게임(Game)의 합성어로 커뮤니티 서비스와 게임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문화콘텐츠 분야임

○ SNG는 SNS 상의 인간관계를 플랫폼 기반으로 하는 게임이며 과거 온라인게임 진행방식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커뮤니티 기능의 지원 유무임

○ PC,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게임기 등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게임 조작이 간단하고 진행시간이 빠르다는 특징이 있음

○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에 전문적으로 SNG를 제작하고 보급하는 전문 업체들이 등장했으며 소셜게임 시장규모는 점차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 SNG 전년도대비 성장률이 30% 이상을 기록함⁶¹⁾

○ 세계 SNG시장규모는 지난 2008년 7,600만 달러(8천5백억 원)에서 올해는 12억 1,300만 달러(1조3천억 원), 오는 2014년에는 15억 5,300만 달러(1조7천억 원)에 이를 전망이며, 2012년 국내 SNG 게임시장 규모는 9천억 원에 육박했음⁶²⁾

○ 스마트폰 이용 인구가 3,600만명에 달하는 한국의 경우 소셜게임의 위력은 더욱 크게 나타나 '애니팡', '다함께 차차차', '윈드러너' 등은 천만명 이상이 다운로드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소년, 청년층을 넘어 장년층까지 게임을 플레이하도록 하여 세대간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평가도 존재함

□ 다양한 공공디자인 및 공공예술 프로젝트

60) 김윤경(2011). 국내 소셜 게임 시장 전망.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24(1). pp. 113-123.

61)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Interview] ① SNG 시장의 히든 챔피언, '에클로게' 이상진 팀장을 만나다!". koreancontent.kr/1400

62) 게임동아. 최호경기자. 2012년 3월 19일자. "너도나도 터치' 1조3천억 SNG시장에 게임사들 군침" game.donga.com/61305/

-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부터 한국미술프로젝트추진위원회와 함께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작가들의 일자리 창출과 작품 활동을 유도하고, 쇠락한 도시를 예술로 승화시켜 지역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2014년 제4회를 맞이하는 안양 공공미술 프로젝트(APAP)는 향락이 즐비하던 유원지를 예술 명소로 바꾸어 지역 이미지 개선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됨⁶³⁾
- 피아노 건강계단⁶⁴⁾
 -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은 인천교통공사와 함께 부평역, 계산역, 인천시청 역 등에 피아노 건강계단을 설치함
 - 피아노 건강계단은 계단을 밟으면 센서가 작동해 LED 조명이 켜지고 소리가 나도록 해 걷기 운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
 - 지역주민과 지하철 이용객에게 재미와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서울시 '문화예술 입히기 프로젝트'⁶⁵⁾
 -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청 지하도에 공공디자인을 도입하는 <문화예술 입히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피아노 계단, 남산타워, 서울도서관 등 서울의 명소를 입체적으로 표현한 트릭아트, 소원과 고민을 말하면 TV에 나오고 소원도 들어준다는 미리내와 함께 하는 국민행복 소원카메라 등과 같은 재미있고 눈에 띄는 문화예술 작품을 설치하여 지하도를 찾은 시민들의 발길이 머물고 방문객이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지하상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그림 2-8> 국내 다양한 공공디자인 및 공공미술 프로젝트



63) <http://cafe.naver.com/beetwobee/1093>

64) 송수연.(2013). 인천성모병원, 인천지하철에 피아노건강계단 설치. 청년의사. 2013.12.13.

65) 장은지.(2013). 피아노계단,트릭아트...시청 지하도에 공공디자인 도입. news1 2013.12.31. <http://news1.kr/articles/1474704>

4. 새 정부 출범과 국정기조로서의 문화융성

- 2013년 새로이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21세기를 문화가 국력인 시대, 국민 개개인의 상상력이 콘텐츠가 되는 시대’로 규정하고 ‘우리 정신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 곳곳에 문화의 가치가 스며들게 하여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을 밝혔으며, 이를 위해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그리고 문화융성’을 새 정부의 국정기조로 제시함
- 새정부 국정기조로 제시된 ‘문화융성’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됨(이동연, 2013)⁶⁶⁾
- 첫째, 문화의 융성임
 - ‘문화의 융성’이란 예술문화산업·관광·체육 등 문화 분야의 역량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며, 예술가의 창작수월성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수권을 확대시키는 창작-수용의 다양한 흐름들을 생성시키는 것을 의미함
- 둘째, 문화를 통한 융성임
 - ‘문화를 통한 융성은 문화의 융성이 다른 사회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함
 - 즉, 문화의 창조성·다원성이 경제·외교·교육·복지·생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문화의 인적·물적 자원이 21세기 창조적 국가성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활용되는 것
- 문화융성이라는 개념이 학술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정책적으로 주창된 용어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한 의견은 분분할 수 있겠으나, 이전과 비교할 때 ‘문화’가 더 이상 부차적인 영역이 아니라 ‘경제부흥’이나 ‘국민행복’과 같은 국가발전의 중요한 영역으로, 그리고 국민행복과 한반도 평화통일, 행복한 지구촌 형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밑거름이자 촉매제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는 의미를 가짐

- 문화융성의 5가지 의미⁶⁷⁾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에서 문화융성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제시함

- ① 행복을 키우는 문화
 - 2013년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4천달러를 돌파하는 등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불과
 - 지역·계층·연령 등에 따른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문화 가치 확산 및 향유 확대를 통한 개인

66) 이동연.(2013). 문화융성이란 무엇인가 : 개념, 정책방향, 실천과제. 문화체육관광부.

67) 국민소통실.(2013). 문화융성의 의미 및 실천방안. 문화체육관광부.

의 삶의 질 및 행복지수를 제고하여 국민행복 시대를 개막할 필요

② 경제를 키우는 문화

-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해외 시장에서 경쟁압력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고용률 정체 및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는 시점
- 문화적 창의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리드하고 이를 뒷받침할 필요
- 과학(기술)과 인문학(상상력)의 만남을 통한 산업 창조성 발현
- 문화 콘텐츠, 관광 산업 육성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생산 및 일자리 창출, 新 성장 동력 발굴
- 청소년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문화 교육을 통한 창의적 인재 육성

“문화는 돈을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적 경제 시스템을 낳게 한다” [미사유키 사사키]

상품에는 소비자가 있지만 문화예술에는 팬이 있다. 문화예술은 언어나 섹처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한다. 소프트파워시대의 경제 키워드는 '감동산업'이다. 감동이 미래의 경제력이고 정치사회적인 힘이 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어령]

③ 갈등을 없애는 문화

-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잉태된 경제적·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각종 사회적 범죄가 증가하는 시점
- 문화활동 및 가치확산을 통해 소통과 화합을 도모할 필요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계층간 갈등 해소
- 예술,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한 에너지 발산 및 사회구성원들간의 화합 도모
- 나눔, 배려, 예(예), 공동체의식 등 정신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통합 추진

④ 국격을 높이는 문화

- 세계 10대 경제대국 진입 등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는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통한 지구촌 행복에 기여하고 진정한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필요
- 전통문화의 복원 및 계층을 통한 한류의 다양화와 가치의 모범 제시
- 국내 다문화 포용 및 외국 문화교류 확대를 통한 한국 문화의 외연 확장

⑤ 문화를 키우는 문화

- 과거 정부는 문화를 산업적, 수단적 측면에서만 이해하고 접근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문화의 진정한 가치 발현을 위해서는 목적적 가치로서 접근이 필요
- 순수문화 육성을 통한 문화융성의 토대 마련이 필요
- 문화예술인 창작 지원 및 복지 향상
- 생산과 소비의 동시화 및 선순환을 통한 문화발전 동력 마련

<그림 2-9> 문화융성의 5가지 의미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3).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 문화융성의 7대 키워드⁶⁸⁾

① 문화 창의성(Cultural Creativity)

- 문화의 창조적 역량과 가치를 국가사회발전의 동력으로 중시
- 경제활동, 인재발굴, 도시 활력, 지역균형발전에 문화의 창조적 가치를 활용

창의성은 미래를 위해 현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생각들을 제안하고 그래서 현실의 벽을 넘어서는 노력들이 새로운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적 가치는 조직들 내에 창의적인 활동을

68) 국민소통실.(2013). 문화융성의 의미 및 실천방안. 문화체육관광부.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고, 그런 점에서 창의성은 독창적이고 가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상상력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캔 로빈슨, 2007] 69)

② 문화 세계화(Cultural Globalization)

- 다양한 세계 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류 및 한국문화의 위상 강화

③ 문화-예술-기술의 융합(C-A-T Convergence)

- 21세기를 움직이는 인적, 물적 자원의 핵심은 문화-예술-기술의 창조적 융합
- 유비쿼터스 시대에 통신 네트워크와 인프라, 혁신적 미디어 플랫폼,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능력이 결합된 21세기형 융복합 문화르네상스를 구현
- 문화예술의 창의적 상상력과 기술의 혁신적 잠재력을 융합하는 문화콘텐츠 연구개발(R&D) 강화

④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

- 한국사회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특정한 문화의 독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문화의 종다양성 확보

⑤ 문화분권(Cultural Decentralization)

- 특정 지역 중심의 문화융성이 아닌 모든 지역에서 문화융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역분권의 구체적 실현

⑥ 문화권리(Cultural Rights)

-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 및 권리의 보호 및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권리의 보장

⑦ 문화복지(Cultural Welfare)

- 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문화예술교육 강화와 예술가의 창작활동에 필요한 복지 강화

<표 2-11> 문화융성을 위한 문화정책 실천과제

69) 캔 로빈슨(2007). 내 안의 창의력을 깨우는 일곱가지 법칙. 한길아트

키워드	주요 정책 과제	해결과제
문화 창의성	창의적 문화콘텐츠 산업 역량 강화	규제 최소화, 육성지원정책강화 글로벌 인재 유치, 국내 투자 및 시장 진출 지원
	예술가들의 사회진출의 확대	예술가 직업 다원화 쿼터제 예술가의 정규직 직업기회 제공
	창의적 예술교육의 활성화	창조적 상상이 가능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강화
문화세계화	한류의 지속가능한 확산	대중문화 산업 지원 방안마련
	전통문화예술 자원의 세계화	전통문화예술가들의 해외 진출 지원
	비주류 문화권의 문화교류 확대	비주류 문화권역 전문가 양성 비주류 문화권과의 적극적인 문화교류
문화-예술-기술 융합	예술-기술 융합 콘텐츠 R&D 강화 C-A-T R&D	새로운 혁신적 콘텐츠 제작을 위한 연구개발 재원의 강화
	융합적 문화창작 콤플렉스 조성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를 문화 창작 복합콤플렉스로 조성
	C-A-T 특성화 창조인력 양성	국제적 인력양성이 가능한 미래 창조 스튜디오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제정	국회 입법 활동 문화다양성 협약의 국내 준수
	소수문화의 공존과 상생	사회적 소수자들의 문화 활동의 활성화
	문화독점 해소와 비주류문화 활성화	문화콘텐츠 독점 규제와 비주류문화 유통시장의 다양한 확대
문화 분권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국회 입법 활동
	권역의 문화특성화 전략	서울,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 권역 별로 문화장기발전 MP
	지역문화 자원과 문화관광 연계	지역문화 자원의 스토리텔링개발과 문화관광자원의 내실 있는 연구
문화권리	문화기본법 제정	국회 입법활동. 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근본 가치 제정
	표현의 자유 확대	창작자들의 표현의 자유의 권리를 존중하는 표현의 자유 가이드라인 마련
	시민들의 문화 접근권 확대	공연관람, 축제참여, 미디어 활동의 접근 기회를 확대
문화복지	예술인복지법 전면 개정	국회 입법 활동
	문화커뮤니티 센터 걸립	전국에 문화예술, 취미활동, 스포츠 활동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센터 건립
	문화협동조합 활성화	문화예술계의 문화협동조합 운영 지원

자료 : 이동연.(2013). 문화융성이란 무엇인가 : 개념, 정책방향, 실천과제.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융성위원회의 출범

- 2013년 7월에는 문화적 가치의 사회 확산과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며, 문화의 가치와 위상 제고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대통령 자문을 위해 <문화융성위원회>가 설립됨

- 문화융성위원회는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당연직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됨
- 문화융성위원회는 문화융성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문화융성을 위한 국가전략에 관한 사항, 문화융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문화융성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문화융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확산에 관한 사항, 문화융성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 문화융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문화융성에 관하여 대통령이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
- 4개 분야 전문위원회(문화예술, 전통문화, 문화산업, 문화가치확산)와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음

5. 문화 가치의 사회적 확산 모델

가. 문화융성을 가져온 해외 문화정책 사례⁷⁰⁾

1) 미국의 문화예술 뉴딜정책

- 1929년 여름부터 고용과 생산이 저하되기 시작하고, 같은 해 10월 24일 주식시장이 붕괴(Black Tuesday)되면서 사상 유례 없는 대공황기에 진입
- 미국 32대 루즈벨트(F.D. Roosevelt) 대통령은 경제사회의 재건, 빈곤과 불안에 떠는 국민의 구제 등을 목적으로 대규모 복지프로그램과 노동 안정계획을 수립하여 경제부문의 뉴딜정책 뿐 아니라 문화부문 뉴딜정책을 추진
 - 경제위기로 인해 일이 줄어들어 예술가들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실시하였고, 예술가 개인이나 예술단체의 활동 지원보다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둔 사업들을 추진
- 문화부문 뉴딜정책은 크게 4가지 미술·음악·연극·작가 지원정책으로, ‘연방미술프로젝트(Federal Art Projects)’, ‘연방음악프로젝트(Federal Music Projects)’, ‘연방연극프로젝트(Federal Theatre Projects)’, ‘연방작가지원정책(Federal Writers Projects)’을 추진하였

70) 양건열.(2013). 문화융성의 의미 -역사적, 이론적, 정책적 사례를 중심으로. KDTI 가치와 전망 제18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음71)

- 문화부문 뉴딜정책은 예술인들의 고용을 창출하고 문화향유의 기회가 적었던 지역에 문화 예술을 공급하여 예술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조사연구 기능의 활성화로 중요한 기록을 보존
-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문학, 음악, 연극 등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예술지원을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둔 공공지원이나 체계적인 지원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이때 지원받은 예술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문화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음

2) 프랑스 대형 국책사업인 그랑프로제

- 1981년부터 12년간(1981~1986, 1988~1993) 문화부 수장을 역임한 자크 랑(Jack Lang)은 미테랑 대통령(Fransois Mitterrand)의 꾸준한 지지 아래 현대적인 문화의 개념을 도입하고 프랑스 문화정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킴
- 사회당 출신이었던 미테랑 대통령은 문화를 ‘생활 그 자체’로 표현하며 인간의 삶에서 문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역설하였고,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
- 자크 랑은 문화의 특권화를 폐지하고, 문화의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문화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공간과 참여의 폭을 넓히는데 역점⁷²⁾을 두었으며, 문화부문 지방분권을 위해 ‘문화특별교부금 제도’와 ‘문화발전협약 제도’를 도입하면서 문화부문 예산이 2배 이상 대폭 확대되었음
- 자크 랑은 확대된 문화예산을 예술과 대중의 벽을 낮추고, 고급예술과 하위예술의 개념을 없애고 사회적, 지위적 계급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별을 없애는 문화정책 실현에 사용하였음⁷³⁾

71) ‘연방미술프로젝트(Federal Art Projects)’는 예술분야에 대한 지원근거를 개인의 실업, 빈곤 등의 정책처럼 여타 복지관련 지원사업과 동일한 맥락에 두고 예술가를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 그들의 절대빈곤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지원사업은 공공사업미술 프로젝트(신축공공건물의 장식을 위한 벽화와 조각 제작 추진사업), 재무부 산하의 미술분과 및 공공사업촉진국(예술진흥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고용기회를 주고 교육적이고 전문적인 행정지원을 담당) 설립, 미술구호프로젝트 시행 등이 있다. ‘연방음악프로젝트(Federal Music Projects)’는 음악인들의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음악인들의 공연과 수업(공교육 음악프로그램과 연계) 등을 진행하고 연방 작가프로젝트와 협력하여 전국의 민요, 다양한 무용 등의 자료 수집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극분야에서는 ‘연방연극프로젝트(Federal Theatre Projects)’가 추진되었는데, 이는 배우나 감독, 작가, 기술스태프 등 연극인의 재취업을 목적으로 연극단체의 전국적인 순회공연을 실시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연방작가지원정책(Federal Writers Projects)’은 작가들로 하여금 생활사나 미국인의 관습, 구비문화 등을 기록하는 사업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대공황기 미국의 문화·관광 정책 사례분석 및 대응방향”, 2009.12)

72) 배준구, “프랑스의 지방분권 이후 문화정책”, 『프랑스문화연구』 제20집, 2010, pp. 175~201

73) 1984년 대중음악공연장(Concert Hall 'Le Zenith') 건립과 지방 확산, 1985년 국제만화페스티벌 개최 및 1991년 국립만화센터 설립, 사진예술학교 설립, 광고박물관 건립, 영화고등연구원 창설, 국립음악학교, 국립문화재학교, 루브르 학교 등 문화예술 학교 창설로 공교육 문화교육 확대 등 문화다양성을 장려하여 문화 대중화정책을 시행하였다. 황혜진, “국가주도형 프랑스 문화정책과 시사점”, 『유라시아연구』, 제7권 제1호, 2010.3, pp. 341~357

- 미테랑 대통령이 직접 관장한 대형 국책사업인 그랑프로제(Grand Projet)는 문화부 예산과는 별도로 책정되어 10개의 기념비적인 대형건축물이 건립되었음
- 1981년과 1982년에 걸쳐 발표된 건립대상은 1981년 오르세미술관, 루브르박물관 유리피라미드, 라 데팡스 대형아치, 라 빌레트 공원, 이슬람의 집, 음악당, 1982년 산업과학관, 바스티유 오페라극장, 커뮤니케이션 국제센터, 아랍세계문화원 사업으로, 이후 20여 년 간 국가사업으로 진행되어 파리가 문화도시로서 명성을 지속하는데 일대 전환점을 이루었음⁷⁴⁾

3) 문화예술의 산업적 가치 제고, 영국의 창조산업 정책

- 1990년대 후반부터 세계 각국에서는 문화산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았는데, 토니 블레어 총리는 창조산업 태스크포스(Creative Industries Task Force, CITF)를 구성하여 정부주도의 강력한 창조산업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영국 창조산업 정책의 핵심은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창조 역량(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 것으로, 블레어 총리는 문화미디어체육부를 중심으로 하여 정부의 다양한 부처가 모여 창조산업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도록 함
- 창조산업 육성 정책은 정부와 공공기관, 시장부문간 긴밀한 협조관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끊임없는 상호작용 및 시장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시의 적절한 정책이 추진됨
- 현재 창조산업은 기존의 영화, 음악, TV 등 문화콘텐츠와 미디어, 문화예술 등에 국한되었던 것에서 나아가 창의성을 전 부문의 경제성장으로 확장시키고 있는 추세

나. 국내 문화 가치의 사회적 확산 모델

- 이동연(2013)은 문화 가치를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일상적 가치로 구분하고, 문화융성의 가치 확산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표 2-12> 문화융성의 가치 확산 모델

가치 모델	구현 내용	과급효과
경제적 가치	• 문화콘텐츠 산업의 활성화	• 세계 5대 문화산업강국 실현

74) 황혜진, 같은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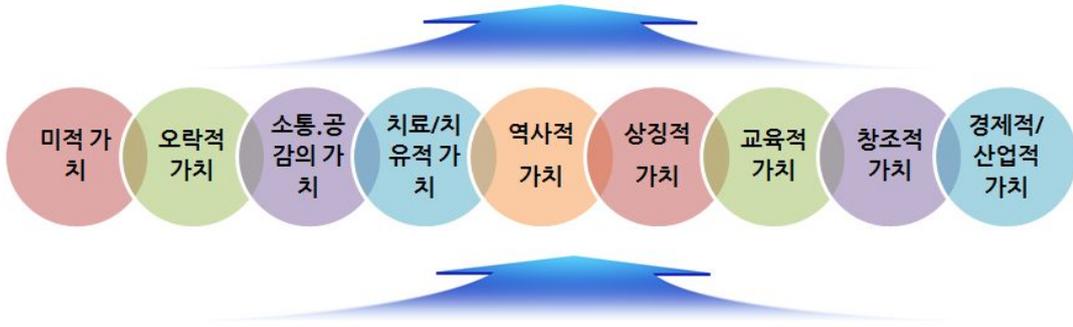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시장의 경제 활성화 • 국가 신-성장 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의 지속가능한 시장 확대 • 선진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국가 경쟁력 강화
사회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갈등 요소들의 치유 극복 • 문화적 차이와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성회복을 통한 자살, 왕따, 우울증의 예방 • 다문화, 이문화, 소수자 문화 등의 사회 공존, 사회갈등 해소 • 보편적 복지로서의 문화향수 확산
일상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의 즐거움과 행복감 • 개인들의 여가와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력 넘치는 일상, •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권리 확대 • 다양한 취미 여가 문화 활성화

자료 : 이동연.(2013). 문화융성이란 무엇인가 : 개념, 정책방향, 실천과제. 문화체육관광부.

- 양건열(2013)⁷⁵은 문화융성을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에 있어 ‘문화적 관점’이 관통하여야 한다는 인식의 확산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융성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문화로 옷을 입히며 “구슬을 꿰는 실”이 되어야 한다고 봄
 - 그는 문화를 인류가 서로 의존하는 방법이자 대화의 수단이며,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다양성의 시대에 공존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보며, 인간 발전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을 문화융성으로 봄
 - 또한 문화융성을 위한 정책패러다임을 다음과 같이 전환할 것을 제시함
 - 첫째, 기존의 문화국가 건설이라는 거대 담론에 기반한 성장 중심의 정책으로부터 국민의 일상 삶이 문화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생활 중심의 정책으로의 전환
 - 둘째, 모든 정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정책과 문화관련 시설들의 협력, 교류,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하여 통일성과 체계성 확보
 - 셋째, 기존의 정부주도형에서 수요자 중심 및 민관협치(거버넌스)로 전환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범정부적 차원의 문화융성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전반에 대하여 문화적 관점의 옷 입히기에 대한 조력과 평가를 시행하고, 구체적인 정책내용의 결정과 집행은 부처간,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과 기업, 문화재단, 단체, 개인 등 민간 부문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개발 운영
-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의 논의들을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 가치의 사회적 확산 모델을 설정하도록 함

<그림 2-10> 부처간 협업을 통한 문화 가치의 사회적 확산 모델

75) 양건열.(2013). 문화융성의 의미 -역사적, 이론적, 정책적 사례를 중심으로. KDTI 가치와 전망 제18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타 부처간 협업

III

문화 관련 정부 간 협업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문화체육관광부와 타 부처 간 협력 현황

제2절 타 부처에서 진행하는 문화 관련 사업 현황

제3절 국내 문화 관련 부처 간 협력의 성과와 문제점

제1절 문화체육관광부와 타 부처 간 협력 현황

1.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협력 현황

○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타 부처 간 40개 이상의 업무협약(MOU)이 체결

- 유형별로는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제공, 인력양성 및 활용, 공동이익의 추구, 경쟁을 지양하고 협력 지향하기 위한 양해각서, 타 부처의 인프라 활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3-1> 문화체육관광부와 타 부처 간 업무협약 현황(2004~2013년)

체결기관	체결일	내 용	소 관
정보통신부	2004.10.01	문화콘텐츠 및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	콘텐츠
과학기술부	2005.04.20	첨단 과학기술과 문화의 연계발전	콘텐츠
한국과학기술원(KAIST)	2005.04.28	문화기술(CT)대학원 설치 등	콘텐츠
법무부	2005.08.29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적 지원 저작권 보호, 관광 진흥	문화
해양수산부	2005.10.06	해양관광 활성화	관광
국방부	2005.12.06	문화적인 병영환경 조성	문화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2008.06.20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	콘텐츠
교육과학기술부	2008.10.15	문화예술체육 교육 진흥	예술
지식경제부	2008.12.23	누리꿈 스퀘어의 효율적 활용	콘텐츠
환경부	2009.02.21	생태관광 활성화	관광
복지부	2009.03.03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예술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무역협회)	2009.03.11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 및 한식 세계화	문화
법무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2009.05.18	아름다운 사이버세상을 위한 공동선언	저작권
노동부	2009.06.16	문화체육관광분야 사회적 기업 확대	예술
중소기업청	2009.12.17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
방송통신위원회	2010.02.09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미디어
농림수산식품부	2010.05.06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문화
법무부	2010.06.08	함께하는 법, 행복한 문화시민 추진	콘텐츠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2010.06.09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효율화 지원	문화
여성가족부	2010.08.18	청소년의 문화예술체험 확대	예술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2010.6.23	국가표준 용어정비 및 보급(국립국어원)	
방송통신위원회,	2010.10.29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예술

체결기관	체결일	내 용	소 관
한국방송광고공사			
중소기업청	2010.12.21	문화체육관광분야 중소기업 육성	콘텐츠
법무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2011.03.08	선진 출입국심사체제 구축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확대	관광
지식경제부, 서울특별시	2011.05.11	패션산업육성 정책 추진	콘텐츠
대통령직속미래기획위원회 ,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2011.06.22	콘텐츠 불법복제 방지 등 저작권 보호	저작권
법무부 교정본부	2011.8.25	교정시설도서관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리 프로그램 보급지원(국립중앙도서관)	
행안부 지방행정연수원	2011.11.9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분야 교육역량강화(예술의 전당)	
교육과학기술부	2012.03.09	학교체육교육 활성화	체육
국무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2012.04.12	해외 문화원·교육원 통합	문화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산림청, SK 커뮤니케이션즈	2012.05.17	취약계층 청소년 인터넷 중독 치유	콘텐츠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문화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2.06.28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 조성	문화
국토해양부	2012.07.03	전통한옥 활성화	문화
지식경제부	2012.07.12	문화와 기술의 융합 및 한류와 기업의 동반 발전	기조
국방부	2012.07.23	국군체육부대 동계스포츠종목 추가	체육
미래창조기획부	2013.06.04	창조경제 실현	콘텐츠
외교부	2013.06.05	‘문화융성’ 국정기조 실현을 위한 협업 강화	문화
농림수산식품부	2013.06.14	음식관광 활성화	관광
안행부, 코레일, 다음커뮤니케이션즈	2013.07.17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관광 활성화	레저
미래창조과학부	2013.08.01	빛마루 운영 활성화	미디어
국방부	2013.08.14	국가체육발전 및 국제대회의 성공적 국내개최	체육

2. 국무조정실 주재 부처간 협업과제 추진 현황⁷⁶⁾

1) 추진배경

- 2013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장차관 워크숍에서 정부운영 4대 원칙으로 ‘부처간 칸막이 철
폐’를 강조하고, 부처 이기주의에 대한 경계와 부처간 협업과제를 강조한 후 국무조정실 주

76) 협업과제 관련 업무현황(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및 부처간 협업과제 실행계획 자료

관으로 '협업점검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됨

- 제1차 협업점검협의회(2013.4월)에서 각 부처 업무보고 및 제출자료를 토대로 165개(조정 25개, 협력 140개, 전략 10개)과제가 선정됨
 - 조정과제(25개): 부처 간 이해상충 수준이 높은 과제→ 국민·수요자 관점에서 부처 간 이견 해소
 - 협력과제(140개) : 주관부처 중심 관계부처 협력 필요 과제 → 방관자 제거, 성공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로 협업문화 확산
 - 전략과제(10개) : 다수 부처 관련, 강한 구심체가 필요한 과제 → 국무조정실 주도 종합전략 추진
- 제2차 협업점검협의회(2013.5월)에서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170개 협업과제 검토 및 조정이 이루어짐(조정 17개, 협력 142개, 전략 11개)
- 제3차 협업점검협의회(2013. 6월)에서 협업과제 실행계획 및 지원방안이 논의되었고, 이후 지속적 협업점검이 진행 중(2013년 8월 제5차)
 - 162개 협업과제(조정 16개, 협조 135개, 전략 11개)

2) 문화체육관광부 협업과제 현황 : 총 41개(2013년 9월 기준)

(1) 조정과제 : 2개

주관부처	과제명	협조부처	담당부서
문체부, 교육부 외교부	재외문화교육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선도과제)	* 조정(국조실)	국제문화과 국어정책과
안행부	대체공휴일제 도입	문체부,기재부,고용부,산업부,중기청, * 조정(국조실)	관광정책과

(2) 협력과제 : 33개

주관부처	과제명	협조부처	담당부서
기재부	세입 확충·세출 구조조정	전부처	재정담당관실
통일부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외교부,국방부,안행부,문체부,환 경부,국토부	녹색관광과
미래부	범정부 차원의 창조경제 실현 추진	전부처	문화산업 정책과
미래부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 추진	문체부,산업부,복지부	문화산업정책과
미래부	국가 정보화 추진	전부처	정보통계담당관실
미래부	사회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국토부,문체부,복지부,산업부,안 행부,여가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주관부처	과제명	협조부처	담당부서
미래부,교육부	산학연 협력 및 창의적 인재육성(선도과제)	문체부,산업부,중기청	문화산업정책과
문체부,교육부	문화예술 및 체육교육 협력강화	-	기획행정관리담당관실
외교부	공공외교활성화법 제정	문체부	국제문화과
법무부	한국방문 우대카드제도 도입	문체부	국제관광과
안행부,방재청	국가방재자원 공동 활용	조달청, 전부처	비상안전기획관실
문체부	불법사행산업 근절 추진	사감위, 경찰청, 농식품부,방통위	체육정책과,관광정책과, 게임콘텐츠산업과
문체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법 제정	외교부	국제문화과
문체부	콘텐츠 산업 활성화(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조성, 콘텐츠코리아 랩 설립, 중장기 비전 수립)	기재부,미래부	문화산업정책과, 대중문화산업과
문체부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고용부	예술정책과
문체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기재부,안행부	예술정책과
문체부	통합형 여가바우처 도입	기재부,복지부	문화여가정책과
문체부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추진	교육부	문화예술교육과
문체부	대학교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문제 해결	교육부	저작권 산업과
문체부,복지부	의료관광 활성화	법무부	국제관광과
문체부	마이스(MICE) 산업 육성	산업부	국제관광과
문체부	관광 숙박업 제도 개선	복지부,국토부,농식품부	관광산업과
산업부	4대 융합 新산업 육성방안 수립	미래부,문체부,복지부	문화산업정책과
복지부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방안	기재부,고용부,교육부, 여가부,문체부,환경부, 농식품부,산업부,보훈처,문화재 청, 산림청	기획행정관리담당관실
복지부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선도과제)	안행부,고용부,문체부,여가부,교 육부	문화여가정책과
고용부	사회적 기업 활성화	전부처	예술정책과
고용부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계획 수립	전부처	기획행정관리담당관실
국토부	행복주택 프로젝트	고용부,문체부,복지부,중기청,경 찰청	예술정책과
해수부	마리나 산업의 전략적 육성	산업부,문체부,법무부,교육부,복 지부,관세청,방재청	새만금개발과
해수부	어촌 친수공간 조성 및 통합적 어촌 개발	안행부,문체부,농식품부,국토부	새만금개발과
법제처	법령정비를 통한 다수 국민의 민원 해결	전부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병무청	사회적 관심자원의 병역 집중 관리	문체부,국체청,안행부	체육진흥과
해수부	크루즈산업의 전략적 육성	문체부,산업부,법무부	관광산업과

(3) 전략과제 : 6개

주관부처	과제명	협조부처	담당부서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중심의 복지정책 추진	기재부,교육부,행안부,고용부,여가부,국 토부,법무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환 경부,보훈처 * 조정(국조실)	문화여가정책과
식약처	4대 사회악 근절(불량식품 근절)	교육부,법무부,안행부,문체부,농식품부,	정책여론과

주관부처	과제명	협조부처	담당부서
		해수부,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경청	
국조실, 여가부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 실효성 제고 (선도과제)	안행부, 법무부, 교육부, 문체부, 농식품부	문화여가정책과
국조실	현장으로 발굴시스템 구축운영 (손톱 밀 가시제거)	전 부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국조실	부처간 협력을 통한 사회 갈등 해결	권익위, 전 부처	기획행정관리담당관실
국조실, 중기청	중소기업 지원정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선도과제)	기재부, 미래부, 안행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금융위, 국세청, 통 계청	기획행정관리담당관실

3) 국정과제 관련 협업과제

구분	국정과제 명칭	주관부처	협조부처
2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통계청, 법무부, 경찰청,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외교 부
108	문화참여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문화부	대검찰청, 기획재정부
109	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협력 확대	문화부	문화재청, 교육부, 외교부
111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	문화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112	문화유산 보존 강화 및 활용 확대	문화부	문화재청, 교육부, 외교부
113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문화부	기획재정부
115	고부가가치 융·복합 한국관광 실현	문화부	법무부, 중소기업청, 해양수산부, 교육부, 안전행 정부, 국토교통부
116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문화부	국방부, 문화재청, 해양경찰청, 교육부
11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 토 관리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43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 계 구축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국토 교통부
50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미래창조 과학부, 국토교통부
51	다문화가족 적응 지원강화	여성가족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63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66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74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법무부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74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여성가족부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106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 제고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124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 화	통일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 자원부, 외교부
131	재외국민 안전·권익 보호와 공공외교·일 자리 외교 확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4) 추진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 각 부처의 기능 및 업무목표 등의 차이로 인한 견해차
 - 공통의 목표 수립과 절차, 내용 등 합의에 일부 애로
 -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부처 간 역할 또는 영역 다툼의 소지
- 국무조정실의 조정 및 지원 기능 미흡
 - 적극적인 협업 유도 및 중재·조율보다는 각 부처 간 자율적인 협의·조율 권고 및 점검 등 국조실 역할의 한계
 - 안행부, 기재부의 지원방안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기존 조직(인력), 예산 등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어, 추진동력 미흡
- 시스템 구축보다는 단기 성과지향적인 추진방식
 - 정부출범 이후 약 6개월간, ‘국정과제’, ‘정부3.0’, ‘협업과제’,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 등 다양한 과제 발굴, 추진을 요구받아 협업 마인드 공유를 통한 실질적인 협력체제 확산보다는 단기간에 형식적인 성과를 도출해야하는 업무 피로감 가중

제2절 타 부처에서 진행하는 문화 관련 사업 현황

- 2013년 기준 각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 관련 사업 또는 추가적으로 협업이 가능한 사업들은 다음과 같음
 - 동 내용은 2013년 상반기 각 부처에서 작성한 <업무계획보고> 내용 및 국무조정실 주관 <협업과제 현황>자료, 그리고 각 부처 2013년 예산개요 등을 참고하여 작성됨

1.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는 2013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창조경제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달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 민생 및 경제 안정, 국정과제 재원 확보를 주요 전략으로 제시함

<표 3-2> 기획재정부와 협업이 가능한 사업

	사업구분	주요내용
1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분야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 : 고졸자, 여성, 지역인재 채용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등
2	협동조합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강화, 기존 정책과의 연계, 인프라 구축, 교육·홍보 활성화, 공공부문의 지원 강화

2. 미래창조과학부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국가 연구개발 및 혁신역량 강화, SW와 콘텐츠를 핵심 산업화, 국제협력과 글로벌화,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과 ICT 구현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함

	사업구분	주요내용
1	창조허브로서의 무한상상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관을 중심으로 무한상상실 개설,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전문가 멘토링, 무한상상클럽, 스토리텔링 클럽 등 운영
2	창조경제 문화 조성(무한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아이디어

	상마당, 창조경제 종합포털 등)	페스티벌 등 무한상상마당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경제 종합포털 구축 • 창의적 과학문화정보나눔 활성화: 과학전시체험, 과학문화프로그램, 과학문화 확산사업
3	신학연 협력 및 창의적 인재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창업교육, 신입생 멘토링 등 입학에서 졸업까지 전주기 커리어 프로그램 도입 등 R&D 인프라 구축지원 강화 • 초·중·고 단계 융합형 과학교육 확대, 융합형 우수 이공계 과학영재 양성
4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에 아이디어와 문화콘텐츠, SW·인문·예술 등을 융합하여 신산업 창출 추진
5	지식정보의 창조적 활용체계 구축(국가DB구축 및 활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문화·역사·의료 등 민간 활용성이 높은 국가 DB를 구축 개방하고, 중소기업 기술지원 등 민간 활용을 지원 • 국가지식정보를 데이터 분석기술 등을 활용해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국가적 현안해결 및 미래비전 수립을 지원하는 국가미래전략센터 구축 추진
6	사회 각 분야에 ICT 적용 확산 (창조경제 비타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경제의 비타민인 ICT를 재난, 기상, 교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확산하여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등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ICT수요기반과 新시장 창출
7	생태계 창조형 R&D 패러다임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상력창의성과 기술이 결합되고, 지식재산권으로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 조성 (예) 아이디어 → 연구개발 → 특허출원등록 → 1인 창조기업 연계지원까지 종합지원 - 모바일·앱(App) 등 지식서비스 업종 창업활성화를 위해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13년 46개 → '14년 61개) 및 R&D지원('13년 100억원 → '14년 150억원) 확대 • 과학기술과 ICT 융합을 기반으로 R&D가 신산업으로 결실 맺는 창조형 시스템 도입(인력양성, 제도 개선, 시장개척까지 고려한 토털 솔루션형 정책 추진)
8	범정부 차원의 창조경제 실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부처별 역할과 과제를 종합한 범부처 「창조경제 실현계획-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 수립·추진
9	국가 정보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향후 5년간의 新 정보화 비전 및 청사진을 담은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3년 ~ 2017년) 수립
10	공개SW 온라인교육서비스 및 SW 오픈마켓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개발자 육성을 위한 온라인 교육센터 운영 및 동영상 강의, SW개발 분야별 커리큘럼 등 교육콘텐츠 강화 - 누구나(학생, 현직 개발자, IT관련 종사자 등) 직접 제작한 교육콘텐츠를 개설·수강할 수 있는 SW개발 교육 오픈마켓 활성화
11	한국 스타일 콘텐츠로 세계 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콘텐츠 기업의 창업 및 재기 지원을 위해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 펀드 조성, 산업계와 대학의 인재들이 참여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스토리·기획안 인큐베이팅 랩 (중소방송사, 1인 창작자, 디지털콘텐츠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기획안과 스토리 등을 발굴·육성하여 스타콘텐츠로 발전시키는 프로젝트 팀) 설립 • 기기-서비스-중소 콘텐츠 기업이 참여하여 콘텐츠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반성장 프로젝트 추진, 중소 스마트콘텐츠 제작사에게 입주공간 제공, 테스트베드, 해외유통 등 지원, 방송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원천 자료를

		저장·활용할 수 있는 공공아카이브 구축
12	방송산업 및 스마트미디어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PP등 중소기업의 콘텐츠기획·제작·유통을 원스톱 지원하는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 ●스마트미디어산업 육성: 양방향 콘텐츠 제작지원 및 N-스크린 관련 공통기술 표준화 등을 통해 콘텐츠 호환성 제고
13	사회이슈 해결형 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 참여·개방형 기획을 통한 사회이슈 선정: 사회문제의 원인별 기술적·제도적·사업화를 위한 토달 솔루션 마련(예시: 사회문제-기술연계 맵) ●범부처 연계형 [Flagship Project] 추진: 미래부 기존사업(공공복지안전사업)을 사회이슈 해결형 사업으로 특성화, 출연연사회이슈 관련 사업간 연계 강화 추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다부처 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초진체계 정립
14	사회문제해결형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인프라 구축 등을 연계하여 국민행복과 직결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고령화·에너지 등의 국가당면 이슈 해결, 사회·복지·안전 등 공공시스템과 연계한 신시장 창출 지원
15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 및 정보격차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정보소외계층 정보활용능력 강화
16	창조경제국민행복을 위한 우체국 네트워크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체국 네트워크와 집배원을 활용한 국가행정서비스 역할 수행으로 정부3.0 추진에 기여 ●우체국금융자금을 활용한 창조기업의 성장지원

3. 교육부

- 교육부는 2013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 교육 정상화,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함

	사업구분	주요내용
1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학교 문화예술강사 파견 확대
2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
3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상담과 체험을 통한 진로탐색 지원 ●체험중심 진로교육 운영을 위해 학교-지역 단체기관을 연결해주는 '직업 체험매칭시스템' 운영
4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전문 인력 배치를 통한 체육활동 내실화: 체육전담교사, 스포츠강사 ●1학생 1스포츠 문화 조성: 초·중·고 스포츠 클럽 지원
5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가해학생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 강화: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 학생상담과 치료를 위한 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을 확대 하고 Wee센터 운영 내실화 지원, 고위험군학생 조기발견 및

		<p>치료 시스템 구축·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학생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시범운영 중인 어울림프로그램을 보완, 표준화된 학교 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학교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
6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과정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 '14년까지 모든직무분야의 표준개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학교 교육과정 개편 추진, 학교 교육, 평생교육, 직장교육, 학점인정 등을 연계할 수 있는 국가역량체계(NQF)구축 기본계획 수립
7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국가·지역 전략산업 등 기술 명장 육성 필요 분야를 발굴하여, 마이스터고 8차 지정계획 수립시 반영, 관련부처·지자체 및 산업체와 연계하여 고졸 기술·기능 인력 필요 분야를 발굴('13.6)하고, 해당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을 확대 ● 취업 희망자가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 구축 ● 고졸 취업자가 일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 계속교육 시스템 강화
8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육성을 통해 산업핵심인력 양성체제 구축 ●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치를 통해 산업분야별 명장 육성 ● 전문대학생의 해외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가칭)세계로 프로젝트' 추진: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학생 대상으로 해외진출 산업체에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후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GHC(Global Hub College)사업 확대
9	지방대학 지원 확대(지방대학 특성화 분야 집중 육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대학이 우수인재 양성, 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의 거점이 되도록 '(가칭) 지방거점대학 육성사업' 계획 수립 ● 경쟁력 있는 명품 지방대학, 학부·학과를 발굴·육성하여 세계 수준으로의 도약을 지원하는 '(가칭)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계획 마련
10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대학 육성 ● 대학 유형과 여건에 따른 산학연 협력 활성화: 정부부처 간 역할분담 및 차별화를 통해 창업교육에서 창업기업 성장까지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청년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11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오프라인 평생학습종합전달체계 구축: 각 기관에서 생산한 평생학습콘텐츠를 스마트폰 등 다양한 온라인 도구를 통해 제공하는 '평생학습 종합정보서비스망' 구축, 광역지자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는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지원 ● 생애단계별·계층별 국민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노년층) 취미·여가생활, 건강·의료 등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변화적응 지원 등 자기주도적 생애설계 기회 제공(평생학습도시조성 사업지원을 통한 실버세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유도 (취약계층) 저학력자(문해교육), 경력단절여성(학습동아리 지원), 군인(군학습경험인정) 등의 기초 학습권 보장 및 제2경력 창출 지원
12	방과후돌봄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돌봄기능 강화: 누리과정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도모 ●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기능 강화: 오후 5시까지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하는 방과 후 돌봄프로그램을 '14년부터 연차적으로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p>무상제공하는 방안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 체제 구축 운영 : 중앙 및 시·군·구 단위 돌봄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부처별 돌봄 사업간 연계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
13	교육비 부담 경감(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및 공교육 기능 강화 : 3-5세 누리과정 학비 단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지원 •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
14	장애다문화탈북학생 등 교육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 교육여건 대폭 확충 : 특수교사 정원 증원을 통해 법정정원 95% 이상 확보 • 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교육 강화 등 한국사회정착 지원 : 한국어·문화에 대한 적응교육을 위해 예비학교 및 특별학급 확대 • 탈북학생의 특성·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15	재외문화교육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동포교육기본정책수립, 한국학교 선진화 및 특성화 등 • 해외 한국어 채택 및 한국어 교사 파견사업, 한국어교재 개발 보급, TOPIK • 한국교육원 운영지원 •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 재외동포 한민족 정체성 확립
16	신학연 협력 및 창의적 인재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출연의 창업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창의력·상상력이 풍부한 융합형 창의인재의 조기 발굴 및 체계적 육성 :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초·중등 교육에 ICT, 공학, 문화예술, 인문학 등 타분야를 접목한 융합형 창의교육 도입 확대
17	학술진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학 진흥 및 고전번역업무 • 인문학 대중화 • 대학도서관 활성화

4. 외교부

- 외교부는 2013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한반도·동북아의 평화 및 공동발전, 인류발전에 기여하는 신뢰한국, 국민행복증진과 매력한국 실현’의 핵심목표와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외교 전개’의 추진 전략을 설정하고, 북핵문제의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한·미 동맹과 한·중 동반자 관계의 조화·발전 및 한·일관계 안정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확대,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중견국 실현, 재외국민 안전·권익 보호와 공공외교·일자리 외교 확대, 경제협력 역량 강화, 공적원조(ODA) 지속확대 및 모범적·통합적 개발 협력 추진(협업과제)를 추진 계획으로 제시함

사업구분	
1	개도국에 희망주는 국민참여 개발협력(ODA)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기업 지출과 연계한 대개도국 차관 사업을 확대하여 개도국 인프라 확충 및 신흥시장 개척을 동시에 추진 ●해외 청년일자리 파견 확대 등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확대 : 해외봉사단 (KOICA), 청년인턴(KOICA)
2	700만 재외동포 역량 결집 및 교육문화 지원 확대
3	공공외교 활성화법 제정 및 유관부처 협업체제 구축
4	178개 재외공관 등의 문화외교 전초기지화
5	민간역량 결집을 통한 국민 공공외교 전개
6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공공외교 프로젝트 추진
7	한중일 3국간 공공외교포럼 창설 및 청소년교류 확대

5. 통일부

- 통일부는 2013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실질적 통일준비를 주요 전략으로 제시함

사업구분	주요내용
1	문화융성과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족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사업 우선 추진
2	북한이탈주민의 맞춤형 정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탈북민 맞춤형 교육서비스(전담 코디네이터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및 취업지원서비스(취업보호담당관 제도 내실화 등), 탈북여성 인권보호 교육, 탈북여성쉼터제공 등
3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세대 통일의식 제고 : 초·중·고 「통일교육 주간」 제정,, EBS 등과 협력, 청소년 대상 감성형 영상자료 제작 추진, 통일캠프 내실화 및 판문점·남북출입사무소 등 통일현장 체험 확대 ●통일교육을 통한 국민통합 기반 마련 :지역통일교육센터(전국 17개), 통일관(전국13개), 통일교육위원 등, 통일대비 전문인력 양성 강화
4	평화통일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 강화 :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6. 법무부

- 법무부는 2013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4대약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법과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검찰의 국민적 신뢰 회복, 사회통합적 인권보호체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창조경제 기반 지원, 손톱 밑 가

시를 뽑는 국민행복 법무정책을 전략목표로 제시함

	사업구분	주요내용
1	학교폭력 등 청소년비행예방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자치법정」 운영지원강화,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확충, ‘소년사건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도입
2	소년원교육 내실화 및 사회복지 지원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정심리치료센터 확대로 수용 중인 성폭력 사범에 대한 심리치료 강화 • 제 2치료감호소를 신설하여 치료환경을 개선하고, 치료감호 출소자도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3	전문인력에 의한 가정폭력치료 수강명령 집행	
4	맞춤형 교정교과프로그램 개발 운영	
5	수형자의 사회복귀 지원 활성화	
6	수형자의 취업·창업지원 활성화	
7	여성아동 대상 범죄피해자 인권강화 및 양성평등 의식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심리치유 및 임시주거를 지원하는 보호시설인 ‘스미일센터 전국확대 설치를 통해 심리치유 지원 강화
8	인권교육	•
9	이민자가 행복한 사회통합 기반 구축	•
10	한국방문 우대카드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력 높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하여 한국방문 우대카드 발급, 한국 재방문을 유도하여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 활성화
11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확대하고 운영을 활성화

7. 국방부

- 국방부는 2013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튼튼한 안보’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한미군사동맹의 지속적 발전 및 주변국 국방협력강화, 혁신적 국방경영 및 국방과학기술 발전, 보람있는 군 복무 및 국민존중의 국방정책 추진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함

	사업구분	주요내용
1	보람있는 군 복무 및 국민존중의 국방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병 의식주, 병영문화의 질적 개선 및 문화시설 확충 : 예술단체 초청공연, 체험형 문화예술공연 확대, 진중문고 보급대상 중대급 → 소규모 독립부대까지 확대, 병영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제외된 부대에 ‘병영문화 쉼터(조립식건물)’를 설치하여 매점, 빨래방, 사이버식식정보방 등 복지관련시설 통합배치, 양질의 보육환경 제공을 위해 군어린이집 지원확대

8. 안전행정부

- 안전행정부는 2013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를 주요 전략으로 제시함

	사업구분	주요내용
1	중대본 중심의 통합재난대응시스템 구축	●상향발생 초기부터 부처간 긴밀한 협력, 신속한 상황판단 및 대응,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중앙안전상황실」 설치, 상황관리 강화
2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으로 효율적 현장 대응 보장	●경찰, 소방, 군 등 기관별 운영중인 재난안전통신망 단일화, 현장 지휘 및 협조체제 구축
3	국가방재자원 공동활용	●재난유형별 방재자원을 공동 활용하기 위한 유관기관 간 상호협력 및 역할분담 등 지원체계 확립
4	이동여성 대상 성폭력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원스톱지원센터 확대 설치,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범죄관련 데이터 분석으로 위험지역을 도출하는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 도입 등 치안 통계분석을 통한 전략적 예방 활동 전개
5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117센터’와 학교전담경찰관 및 관계기관(교육부 Wee센터·여가부 Cys-net 등)간 연계 강화, 117 신고에 대한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가해학생 재범방지를 위한 ‘전도·지원 프로그램’ 개발
6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초기 적극적인 현장대응으로 추가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가정폭력 대응 전문교육 과정 신설/인식개선 교육/사례별 매뉴얼 제작·배포
7	다양한 마을공동체 발전사업의 시너지 제고	●마을 관련 사업의 효율적 종합추진체계 구축: 중앙부처간 협의체, 지자체 부서간 TF, 마을단위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예산, 계획, 시설·장비, 판로망, 컨설팅단 등 연계 활용,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한 맞춤형 현장 컨설팅 실시
8	공공정보 개방·공유를 위한 공통기반 조성	●모바일 앱 소프트웨어 개발 등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이 용이하도록 DB를 개방형·표준형 전환: 한국정보화진흥원내 공공정보품질관리센터(gooddata.kr) 운영 ●개방된 공공정보를 일괄 관리·등록·제공하는 범정부 단일 정보 공유 플랫폼(data.go.kr) 구축 ●공공정보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해 ‘국가오픈데이터포럼’ 출범
9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지원을 통한 창조적 일자리 창출	●1인 창조기업, 사회적기업 대상 공공정보 활용 지원 ●공공데이터 융합으로 신가치 창출 등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발굴: 창의적 앱(APP)개발 및 정보서비스 판매, 분석·가공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 및 기존서비스와의 융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9.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농식품 산업의 창조경제, 농가 소득·경영 안정, 농촌 복지 증진, 유통구조 개선, 안전 농식품 안정 공급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함

	사업구분	주요내용
1	생산기공유통관광 등을 융복합한 6차 산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판매·관광 등 2·3차 산업 연계 지원: 양조장 등 전통식품 제조현장을 6차 산업의 복합공간으로 발전시키고 전통식품 명인이 중심이 되는 체험·전승관 설치 ●농촌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체험·휴양마을 확대)
2	한식세계화 사업 재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억 중국시장 선점을 위한 물류전진기지 설치(청도), 스타식품 발굴(신규, 60억원) 등 신선품목 수출 지원강화
3	숲교육치유휴양 등 산림복지 혜택 확산 및 생활권 녹색공간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이숲체험(5개소), 산림교육센터(3개소), 치유의 숲(19개소), 자연휴양림(21개소) 등 산림복지 공간을 확충: 산림교육종합계획 수립·발표, ‘숲으로 가자!’ 캠페인 연중 전개 ●도시숲(173개소), 학교숲(149개교), 가로숲(511km) 등을 조성
4	농촌 정주여건 실현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 인프라)농촌 정주체계별 특성에 맞는 종합정비 추진: 농촌 공원(11개소) 등 문화·복지시설 확충, 공동체 프로그램 지원 등 ●예약형 콜버스 등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도입 법적근거 마련(국토부) 및 관련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지역주민·학교가 공동으로 지역 특성이 반영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 공동체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지역문화 발굴 보전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 마을회관 등 유희시설을 활용한 마을문화공간조성,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오케스트라, 합창단 등) 활성화
5	다문화여성대학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농협을 활용,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 한국문화 등 기초 적응교육을 실시하는 ‘다문화여성대학’ 운영, 한국 국적 취득 준비를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6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인력 양성, 지원조직 확충 및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활동가 육성(1천명) 및 광역단위 활성화지원센터 설치 ●주민스스로 자원발굴, 발전계획을 마련하는 현장포럼 실시
7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농촌 공동경영체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일자리를 창출하는 공동경영체를 농어촌공동체회사로 운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사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공동경영체를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공익성과 수익성을 갖춘 농업·농촌 분야 사회적협동조합 및 일반협동조합 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과정 신설
8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농촌 정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착 단계별 One-Stop 맞춤형 정책 서비스 지원:(관심단계) 귀농·귀촌 종합센터 등을 통해 각종 정보 제공(교육단계) 귀농·귀촌 단계별 맞춤형 창업·영농 교육

		● 기존 주민과 귀농·귀촌인과의 갈등 해소 프로그램 운영
9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및 목표치 수정보완	● 농어촌서비스 기준 및 항목에 문화 관련 내용 포함
10	농촌에 부족한 인적·물적자원 지원	● 농촌재능기부운동본부'를 구성(6월), 범국민 캠페인 전개

10.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커가는 기업, 좋은 일자리, 안전한 에너지’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융합확산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 협력생태계 조성으로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산업-통상 연계로 글로벌 시장 개척,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함

	사업구분	주요내용
1	선도형 신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융합 기반 확충으로 민간의 신산업 창출 촉진 : 디자인, 인문지식 등 ‘지식+제조’ 융합의 창의 산업화 체계 구축, e-트레이닝(금형·용접 등), 기계설비 애프터마켓, 자동차튜닝, I-패션 등 제조업 서비스화 확산체계 확립, 융합형 디자인 대학 확대, 창의융합 전문연구소 등 지원체계 구축 ● 융합 신산업의 발굴·기획, 시장개척 등 산업현장의 융합화를 선도해 나갈 창의·융합형 핵심인재 양성 : 헬스케어, 감성미디어, 나노·바이오소재 등 미래 유망사업 분야의 ‘산업융합 특성화 대학(3개)’를 지정, 年 70명의 석사급 융합인재 배출
2	전통기법, 소재 등 활용 생활용품의 명품브랜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건강, 편리, 문화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유망 신산업 창출로 국민 삶의 질 제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문화) 3D 홀로그래피 기술이 접목된 디지털 공연·패션, 레이보트 등
3	중견중소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기법·소재 등 접목을 통한 생활용품의 名品 브랜드화로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 주얼리, 문구, 가구, 인테리어 등 생활용품에 유리, 도자기, 한지, 실크 등 전통소재의 융합 촉진
4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 과제 중심 선도자형 R&D 지원확대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 비중을 대폭 확대 ● 내수형 전문기업의 글로벌화 추진 : 개별 지원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핵심 지원분야를 기반으로 기관간 협력을 통한 해외진출 패키지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 KOTRA(교육, 컨설팅, 전시회, IT·플랜트·바이어 등 현지전문가 지원), OKTA(한상네트워크 활용), 무역보험공사(무역보험), 정책금융공사(자금지원) 등
5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별 특화사업은 고용효과가 큰 전통·뿌리산업 지원 : 고용효과가 큰 전통산업, 뿌리산업 및 지식서비스업 등을 선정하고 고용목표가 큰 세부과

		제 우선 지원
6	경제자유구역 중점유치 업종별 클러스터 조성 및 서비스 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규모가 큰 MICE의료크루즈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7	기업과 인재가 지역에 남고 싶어하는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노후산단을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행복산단으로 재창조 : 노후공단 재정비 사업, 산업단지의 환경 및 문화 개선

11.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2013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 100% 행복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보다 두터운 중산층 형성, 안락하고 건강한 삶, 모두가 함께 가는 사회통합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함

	사업구분	주요내용
1	부모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보육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단계적 확대 추진 •육아정보 제공 및 상담, 일시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 가능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확대
2	취약아동 돌봄서비스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드림스타트 센터 추가 확충 및 지역사회 복지자원 조정·연계를 통해 취약아동 발굴 및 지원 강화 •방과 후 돌봄기관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관계부처와의 연계 강화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
3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46개)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사후관리, 상담 등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 강화: 학대피해아동 전용 치료보호시설 운영 및 임상심리사 등을 활용하여 가족지원치유프로그램 운영
4	범부처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봄, 건강관리, 상담 등 국민적 수요가 큰 유망사회서비스 및 부처간 융·복합 서비스를 발굴해 확대·제도화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 계층 직접일자리 지원 사업 확대 •범부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계획」 수립 및 발표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무원 배정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격무지 근무요원 심화교육 시범실시 후 점차 확대
6	해외환자유치 및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통역사·의료코디네이터 등 해외환자 유치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인재양성 센터 설립
7	치매 및 요양필요 노인 보호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증 치매환자 보호를 위한 주·야간보호 시설을 확충하고 치매거점병원 모델 개발 및 지원방안마련 등 인프라 강화
8	노인일자리 확대 및 사회참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공헌형) 노인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돌봄 및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확대 •(시장형) 시니어인턴십 활성화(4,100명) 및 고령자 친화기업(20개소)

		설립 지원 등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노인일자리 육성
9	공공-민간 복지자원 활용 극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방안을 마련(5월)하고, 공공-민간 복지자원 통합시스템 운영을 통해 민간자원 발굴 및 활용도 제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연금제도 도입, 세제지원 확대 방안 마련 등 제도적 기반 구축 : 나눔교육센터 설립, 나눔 활동 국민참여 캠페인 전개
10	주민센터를 맞춤형 복지 허브기관으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洞) 주민센터를 개편하여 지역 주민의 접근성·편의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제공체계 구축 : 맞춤형 급여·서비스 신청, 통합사례관리, 고용-복지 연계서비스, 사회적 경제(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지원
11	4대 중독문제(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에 대한 종합적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부처 중독대책 논의기구(가칭) 4대중독대책위원회 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중독예방·관리체계 구축
12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복지정책 통합조정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부처 사회보장제도 세부내용을 분석·검토, 사회보장기본계획,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및 기준 표준화 등과 연계하여 조정방안 마련

12. 환경부

- 환경부는 2013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행복을 완성하는 고품위 환경복지’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국민이 행복한 환경서비스 제공, 소통과 협업으로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요 전략으로 제시함

	사업구분	주요내용
1	생태휴식 공간 확대 등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생태휴식공간 확충
2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범부처 로드맵 수립
3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재생에너지 입지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
4.	지역단위 생태기반 지역발전 거버넌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협의체 중심의 생태관광 지원협력체계 구축 생태관광 콘텐츠 확충을 위한 스토리텔링 공모전 추진 지속가능한 생태탐방 및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생태관광 지정지역의 현명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한국형 그린 패스포트(K-Green Passport) 제도 구축

13.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는 2013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일자리의 질 올리기, 일하는 행복 키우기, 든든하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 지원하기, 미래창조형 상생의 노사관계로 나아가기를 주요 전략으로 제시함

	사업구분	주요내용
1	청년 친화적 일자리 확충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유망 직종 · 산업 분석 → 학생 진로 지도, 학부모 정보 제공 등 • KOTRA 등 현지 정보를 토대로 「6개 권역별 일자리 통합관리 시스템(K-Move 포털) 구축 · 운용 : (K-Move School) 창조적 분야 및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에 초점을 둔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강화
2	사회적기업 활성화로 따뜻한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극화 · 고령화에 따른 소외, 빈곤, 실업, 안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분야 및 유형의 사회적 기업 활성화 • 청년과 은퇴자 등의 사회적기업 취업 · 창업 지원 (문화 확산) 「소셜벤처 캠퍼스 투어」, 「스타 사회적기업가 선정 · 홍보 등 (교육 강화) 초·중등 교과과정에 내용 반영, 대학 · 대학원에 과목 개설 지원 등 (체험 지원) 「청년 사회적기업 인턴제」, 대학 동아리 지원 등 체험프로그램 마련 (창업 지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확대, 「소셜벤처 경영대회」, 「사회적기업 캠프」 등, 은퇴자 창업전문과정 개설,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 프로보노 사업 확대 등 경영 · 기술분야 전문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 취업 지원
3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 서비스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 여성 · 중장년 · 장애인 등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마련 · 지원 강화 • 청년 스펙초원 채용시스템 구축 및 핵심직무역량평가모델 개발을 통한 실력중심의 채용관행 확산, 글로벌 스펙초월취업지원시스템 구축 등 • 여성: 고학력 여성 등을 이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강화,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 중장년: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확대를 통한 종합적인 전직지원서비스 강화, 베이비부머의 현장연수 후 중소기업 재취업지원, 사회공헌 일자리 확대 • 장애인: 장애학생에 대해 기업연수(연간 600명),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고용 및 장애유형별 특화훈련 확대, 도심지 내 훈련시설 확충 • 제대 군인: 전역예정 군인 퇴직경찰 대상 취업특강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취업캠프 등 맞춤형 취업지원 · 직업훈련 서비스(국방부, 보건처, 경찰청 협조) • 일자리정보망과 복지정보망 연계를 통해 수요자의 맞춤형 고용을 지원하는 '범정부 일자리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5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
6	장시간 근로개선 및 장년 연장으로 함께 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대제 개편 등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인건비 지원 • 교대제 개편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을 지원하고, 장시간 근로 개선 확산을 위해 컨설팅 지원 확대
7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 및	근로자 건강 증진
8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	

9	여성의 능력 발휘를 위한 고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 : 이러닝 · 스마트러닝 등 일-육아-훈련을 병행할 수 있는 여성 친화적 훈련방식 개발 · 시행, 30~40대 경력단절 여성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환경 조성 : 공공 · 교육 · 보건 등 고학력 여성이 선호하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발굴 및 참여 사업장 지원 수준 인상, 선택적 · 탄력적 · 재량근로시간제 활성화하고, IT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재택근무, 스마트 워크 활성화
---	---------------------	--

14.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는 2013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여성행복, 가족행복, 국민행복’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일하고 싶은 여성 누구나 당당히 일할 수 있는 사회, 가족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사회, 여성 · 가족이 안전한 사회를 주요 전략으로 제시함

	사업구분	주요내용
1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일 센터 를 통한 종합서비스제공 및 센터 확대 :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연령, 학력 등)을 고려한 대상별 특화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기본형인 취업집중형 외에 자립지원형(결혼이미여성, 장애여성 등), 경력개발형(고학력 여성), 창업집중형 등 대상별 특화형 새일센터 확충)
2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 · 금융, 문화 · 예술, 이공계 분야와 민간기업 · 지역 인재 등을 적극발굴
3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친화기업인증제 내실화 및 확대 : 인증기업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공,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 경영 활성화, 일 · 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정부지원사업 선정 시 가족친화정도 반영
4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및 품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시간제 돌봄 확대 •부모의 여건과 아동의 특성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를 자녀돌봄형, 가시추기형, 보육교사 파견형 등 다양화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저소득층, 한부모, 맞벌이 가정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학업지원 · 급식 · 체험활동 등 돌봄서비스 제공 •관계 부처간 돌봄서비스 통합지원체계 구축 · 운영
5	위기청소년 눈높이 보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업중단청소년 통합지원프로그램(학업복귀 · 자립지원)을 확대하여 검정고시,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교육기회 보장으로 재도약 발판 마련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허브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확대하여 상담 · 보호 ·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우울증, 자해 등 자살위험 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상담전문기인 청소년동반자를 연계하여 심리적, 정서적 안정 지원강화

6	청소년의 창의성 및 글로벌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나 집 주변에서 청소년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확충 및 안전강화, 청소년 스스로 기획·활동하는 체험을 통해 주인의식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확대, 소외계층 청소년이 사회적지지를 통해 용기를 얻고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과의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 •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7	취약가족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 유형별·생애주기별 입체적 지위방안 마련을 위한 「한부모 가족 지원 종합 대책」 수립 • 사회공헌사업 등 민관협력을 통해 정부 미지원 미혼모의 자립지원, 재가 미혼모의 취학전 자녀에 대해 돌봄시간 확대 • 자녀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 한부모가족, 가정폭력 등 위기가족의 가족 간 관계개선을 위한 가족심리치료, 가족참여 프로그램 실시
8	다문화가족 적응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2개소 신설을 통해 접근성 강화 및 시각지대 해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문사례관리사 50명 시범 배치,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을 위한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콜센터’ 운영 체계마련 • 다문화가족 자녀의 맞춤형 교육 지원 : 초등학교 이하 자녀 언어(한국어)발달 지원서비스 확대(언어발달지도사)를 통해 서비스 접근성 제고, 엄마(아빠)나라 언어·문화교육을 위한 ‘언어영재교실’ 운영으로 자녀의 긍정적 자아 형성 및 향후 ‘아시아 브릿지’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지원, 이주배경청소년의 입국초기 한국어, 문화이해, 진로지원 등을 위한 레인보우스쿨 확대하여 한국사회 적응 지원 • 다문화를 이해하는 국민의식의 수용성 제고 : 다문화 이해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대상별 교육 강화, 다문화 수용성 제고 TV홍보 및 캠페인 전개
9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 및 활동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각급학교 등에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일반국민에게는 온라인교육 사이트를 통해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 제공, 국가, 지자체 대상 교육은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 과정과 연계 • 체험형 예방교육 및 성범죄 예방 홍보 강화 : 학교에서의 인권 및 폭력(성폭력, 성교육, 가정폭력 등) 예방 교육 확대,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아동안전지도를 통한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위험환경 개선
10	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피해이동 심리·정서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피해이동 별 발달단계에 따른 전문 심리평가를 통한 지원, 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이동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 지원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확대 :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한 곳에서 모두 제공하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 확대 •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가족 지원 확대 :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시설 지원확대 및 자활지원센터를 통한 자활프로그램 지원

15.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2013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이 행복한 국토창조’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역균형발전과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 좋은일자리, 안전한 생활환경, 출퇴근 교통난 완화, 건설물류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보편적 주거복지를 주요 전략으로 제시함

	사업구분	주요내용
1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건축·재개발 등 물리적 정비에서,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인 기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으로 도시정책의 방향을 전환 ●지자체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 및 주민의 역량강화, 기반시설 및 필요한 S/W사업 지원
2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도시공원, 근린생활권내 생활 공원, 공·폐가 및 유흥지를 활용한 쌈지공원 등 다양한 ‘동네 쉼터’ 조성
3	지역 성장거점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종시)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 및 지식산업센터 설립(16), 과학비즈니스벨트와의 연계발전 도모 ●(제주국제도시) 첨단과학, 교육, 의료, 관광의 복합도시로 발전 ●(낙후지역)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 : DMZ 일원에는 평화시대 프로젝트를 추진(134 연구 착수)하고 해안 및 내륙권에 휴양·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설계 착수
4	환경과 조화된 국토관리체제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난개발 방지 : 비도시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 도입, 간이 지구단위계획 성격으로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등 꼭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개발행위시 동 방안에 맞는 경우에만 허용, 용도지역별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차등화하고, 기반시설 확보 기준, 환경·경관 기준 등을 구체화·합리화
5	공간정보의 융복합을 통한 정부 30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합한 「공간 빅데이터」 구축
6	기존 산업의 창조산업화(U-City산업 항공 레저업, 자동차튜닝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 + IT → U-City 산업 ●항공 + 문화 → 항공레저업 ●자동차 정비 + 문화 → 자동차 튜닝업
7	산업단지를 창조기업의 인큐베이터로 조성 (노후산단 재창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후산단 재창조를 통해 기업 생산환경을 개선하고 첨단산업 유치 : 산업단지 + IT + 문화 → 창조산업의 인큐베이터 ●우수인재를 산업단지로 유치하기 위해 산단의 정주환경 개선 : 산단 주변에 주거(임대주택)·복지시설(유치원, 보육원)·문화·편의 시설 등을 입주시켜 미니복합타운으로 조성
8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 중심의 노선·시설·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철도·버스 등 전국 대중교통망 연계·통합 계획 수립 추진 : 문화·상업·업무시설 등을 갖춘 “복합환승센터” 사업 추진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고, 정기이용권버스노선 및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확대

9	행복주택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도부지, 유희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업무·상업시설이 포함된 복합개발 방식으로 건설, 지역 활성화도 도모 : 복지·문화시설 확보 및 복지·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변지역과 소통·화합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	---------	---

16.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2013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바다를 통한 국민의 꿈과 행복 실현’ 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5대양 6대주 글로벌 해양 경제영토 확대, 전통해양수산 산업의 미래산업화 구현, MT(Marine Technology) 기반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 국민 힐링(Healing) 해양공간 조성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함

	사업구분	주요내용
1	해양관광·레저스포츠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리나·크루즈 등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 요·보트, 크루즈, 카약 등 해양레포츠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수요층 확대를 위한 패키지 콘텐츠 개발과 관련 정보시스템 구현, 연안유희지(자연형성지, 국·공유지 등)를 활용하여 체육시설·친수 공간·오토캠핑장 등 실속형의 국민여가·휴양시설 조성
2	연안어촌의 국민생활 공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들이 즐겨찾는 시민친화적 해양공간 조성 : 해상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고속해상교통망 구축방안을 마련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촌관광 포털사이트, 도시-어촌 교류축진, 어촌관광홍보 지속추진 및 어촌 주민 주도의 어촌체험 마을 조성확대 •수산과 관광·문화·기능 융복합화, 어촌·어장 배후지역과 연계강화 등을 통한 종합개발 방식으로 전환하여 부가가치 창출

17. 문화재청

	사업구분	주요내용
1	문화재 안전관리체계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방재시스템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 등록문화재 방재계획 수립 및 설비설치·유지관리 기준 마련, 방재시설 네트워크를 통한 문화재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 사전예방적 문화재 안전관리체계 구축 : 재해위험도·관리정도에 따른 문화재 안전관리지도 개발
2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과정 신규 개설 • 맞춤형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현장 실습 중심의 특성화 교육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교원 적극 유치를 통한 교수 역량 강화 •전통문화교육원 전문교육 강화 및 다양화: 문화재 사이버 교육과정 개발, 문화재 행정실무교육 확대 등
3	국민의 문화재 향유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궁·능 무료관람 및 비공개지역의 단계적 개방 확대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역의 규제 합리화 • 고궁·조선왕릉 문화유산 해설 품질 강화 • 다문화가정·청소년 등 문화유산교육·체험 확대: 문화유산 창의 체험학교 지원확대 등 • 조선 왕실문화 콘텐츠 다양화로 명품 사회교육 육성·보급: 궁궐(4대궁 및 종묘) 및 왕릉(동구릉 등 4개소) 문화학교 운영, 찾아가는 왕실태교(미혼모), 용을 찾아라(정신지체), 교과서 연계 교육 등(10종) •문화소외지역 대상 전시·체험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무형 문화재'(문화재보호재단, 연중), '찾아가는 이동박물관'(연 3회), '섬마을 다문화 가족 초청행사'
4	문화재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유산 기록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문화유산 통합 디지털 아카이브(허브뱅크)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최신 IT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확대:국가기록유산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구축, 해리티지채널 동영상, 스토리 등 영·국문콘텐츠 확대 •문화유산 나눔 콘텐츠 서비스 확대: EDRB(EBS 디지털리소스뱅크)에 문화유산 콘텐츠 제공, IPTV를 통해 문화유산교육 학습 지도안 및 해리티지채널 콘텐츠 보급, 청·시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자막·음성 문화유산정보 제공(10건, 복지TV 등 연계)
5	지역문화재 활용 다양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도 등 역사문화환경 보호: 4개 고도(경주·공주·부여·익산) 보존 육성 기반 조성, 주민 대상 고도 아카데미, 세미나, 전통공예교실 운영 등 •문화유산을 지역 활성화 자원으로 육성: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지구 경관 조성·관리, 지역별·유형별 문화재활용(생생문화재)프로그램 지원, 생생 사업 선도 모델 제시를 위한 사업 발굴·추진, 문화유산 이야기 발굴 및 가치 창출 •살아 숨쉬는 4대궁 및 종묘 만들기 사업: 궁궐 내 민간 안내해설 제도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지속 추진(경복궁 중국인단체관광객 대상 전문해설 및 창덕궁 유료해설 개발) •문화재를 통한 일자리 창출: '문화재발굴사' 도입, '문화재관리사' 도입, 문화재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및 지원
6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 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 협력 활동 전개(외교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협조): 세계기록유산 국제지문회의 개최(6월), 세계유산위원회(6월), 무형유산위원회(12월) 등 국제회의 참석 •세계유산 해설체계 개편: 안내판·표지판 및 유도 제어 표지판 정비,

		브로슈어·홍보영상물 제작 등 ●세계유산 역사마을(하회·양동) 역사적 관람소재 프로그램 개발 ●문화재 교류를 통한 남북 소통 여건 조성: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조사, 고구려고분군 실태조사 및 남북 공동 발굴조사, 북한아리랑 확대 등재를 위한 '아리랑 공동등재 추진위' 구성 추진 ●「문화유산 공적원조(ODA) 기본계획」 수립·시행 ●국제기구 및 국제협력 활동 강화: 이태지역 세계유산 보호, 문화재 보존복원을 위한 신탁기금 및 국제기구 의무분담금 납부,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활동 강화, 양자 교류약정 체결 확대 및 교류 활성화, 아태지역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아리랑 신탁기금신설
7	문화재 남북교류 및 국제협력 강화	

18. 타 부처 문화 관련 사업 수행 조직 현황

○ 현재 타 부처에 편제되어 있는 문화 관련 과(팀)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3-3>과 같음

<표 3-3> 중앙정부 타 부처 내 문화관련 과(팀) 편제

부처명	부서		
	실	국(관)	과(팀)
기획재정부	예산실	사회예산심의관	문화예산과
교육부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외교부		문화외교국	공공외교정책과 문화예술협력과 문화교류협력과
통일부		교류협력국	사회문화교류과
국방부	국방정책실	국방교육정책관	문화정책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지역발전정책관	자전거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창의산업정책관	디자인생활산업과
환경부		자연보전국	공원생태과, 자연정책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문화경관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산업정책관	해양레저과

○ 또한 앞에서 제시된 문화예술분야 직·간접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타 부처의 담당부서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 3-4>와 같음

<표 3-4> 문화예술분야 직·간접 관련 업무 담당부서

부처명	부서			업무내용
	실	국(관)	과(팀)	
기획재정부	예산실	사회예산심의관	문화예산과	- 문화관련예산 심의
			예산총괄과	- 세입 확충·세출 구조조정 협력과제 주관
			예산정책과	
			조세특례제도과	
미래창조과학부 (조직개편 전 자료임)		정보화전략국	정보화기획과	- 국가 정보화 추진 협력과제 주관
	창조경제조정관	창조경제기획국	창조경제기획과	- 범정부 차원의 창조경제 실현 추진 협력과제 주관
			연구개발기획과	- 사회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협력과제 주관
	연구개발정책실	연구개발정책관	원천연구과	
	연구개발정책과	연구개발정책관	미래기술과	
			방송통신기술과	
	연구개발정책실	연구공동체정책관	연구공동체지원과	- 신학연협력 및 창의적 인재육성 협력과제 주관
	과학기술정책국	과학기술인재관	과기인재양성과	
교육부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 인성교육, 학교체육, 예술교육, 예술중점 학교운영, 예술강사지원사업
		학생복지안전관	방과후학교지원과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추진 협력과제 - 방과후학교 정책개발 및 제도 개선 - 범정부 방과후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및 타부처 연계
	대학지원실	학술장학지원관	학술진흥과	- 한국학진흥 및 고전번역업무 - 인문학 대중화 - 대학도서관 활성화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재외동포교육기본정책수립 한국학교 선진화 및 특성화 등 - 해외 한국어 채택 및 한국어교사 파견사업, 한국어교재 개발 보급, TOPIK - 한국교육원 운영지원 재외문화·교육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 협력과제 주관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창의교수학습과	- 창체 교육과정 운영 - 독서교육, 학교도서관 - 창의교육 확산 지원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 유치원 방과후과정, 돌봄유치원 운영,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 - 누리과정 관련 자료 개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 문화예술 및 체육교육 협력 과제 주관
	대학지원실	대학지원관	산학협력과	- 산학연협력 및 창의적 인재 육성 협력과제 주관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교육과정정책과 (융합교육팀)	
외교부		문화외교국	공공외교정책과	- 공공외교 및 문화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외교정책 총괄 - 공공외교활성화법 제정 협력과제 주관 재외문화·교육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 협력과제 주관
			문화예술협력과	- 해외 공연·전시 업무, 재외예술인 활용 사업, 문화의 교자문위 및 문화홍보 외 교사절 운영, 한식 세계화 사업 지원, 문화원 관련 업무 등 재외문화·교육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 협력과제 주관
			문화교류협력과	- 스포츠외교, 태권도·체육 분야 교류 지원 국제 체육대회 유치 지원, 테마형문화외교 사업, 청소년 교류 총괄·조정 등 재외문화·교육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 협력과제 주관
			재외동포과	재외문화·교육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 협력과제 주관
			개발협력과	재외문화·교육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 협력과제 주관
	통일부		교류협력국	사회문화교류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심사과	- 한국방문 우대카드 제도 도입 협력과제 주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 소년원의 초·중·고교 특성화교육과정 운영
	교정본부		사회복지과	- 수용자 교화, 문화프로그램 등 시행
국방부	국방정책실	국방교육정책관	문화정책과	- 국방문화정책의 개발·수립·조정 및 통제 전반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지역발전정책관	지역발전과	- 도서종합개발 10개년계획 및 연차별계획의 수립, 테마별 우수도서 콘테스트 등 도서 홍보 및 마케팅 - 기초생활권의 발전 지원 및 연계협력사업의 추진
	창조정부조직실	창조정부기획관	협업행정과	- 행정기관·민간부문·외국 등과의 지식행정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방행정실	지역발전정책관	자전거정책과	- 자전거 관련 국민의식 확산을 위한 국민운동 추진 -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자전거 공공디자인 도입 확산, 민간단체 관리
		윤리복무관	복무담당관실	- 대체공휴일제 도입 협력과제 주관
	안전관리 본부	재난관리국	국가기반보호 과	- 국가방재자원 공동 활용 협력과제 주관
농림축 산식품 부		농촌정책국	지역개발과	- 관광숙박업 제도 개선 협력과제 - 농어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어촌민박 등급제 도입
		농촌정책국	농촌산업과	-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사업, 도농교류 등
		농촌정책국	농촌복지여성 과	- 다문화 가족정책 실효성 제고 협력과제 - 여성농업인육성, 농촌보육여건개선, 다문화가족지 원
	산업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외식산업진흥 과	- 한식세계화
산업통 상자원 부	산업기반실	창의산업정책관	디자인생활산 업과	- 디자인진흥센터, 디자인 문화확산지원, - 디자인산업지원
	산업기반실	창의산업정책관	창의산업정책 과	- 4대 융합 新산업 육성방안 수립 협력과제 주관
보건복 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아동권리과	-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관한 사항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고령사회정책 과	- 노인주택·노인여가 및 노인문화 등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 노인친화적 사회문화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 정책실	사회서비스 정책관	사회서비스 일자리과	-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방안 마련 협력과 제 주관
	사회복지 정책실	복지행정지원관	지역복지과	-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협력과 제 주관
	사회복지 정책실	복지정책관	복지정책과	- 사회보장위원회 중심의 복지정책 추진 협력과 제 주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 과	- 의료관광활성화 협력과제 주관
환경부		자연보전국	공원생태과	- 국립공원관리공단 예산 및 관리감독, 재 난 및 탐방문화 개선
			자연정책과	- 문화유산지구 관련 생태관광, 생태놀이터 조성 등
고용노 동부		인력수급정책국	사회적기업과	- 사회적기업 활성화 협력과제 주관 - 사회적 기업 업무 전반
		인력수급정책국	청년고용기획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계획 수립 협력과제 주관

		인력수급정책국	청년고용기획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을 위한 직업진로 지도 등의 개발·확산 및 홍보·교육 - 청년고용촉진 및 직업진로지도 인프라의 구축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등 청소년 취업지원 제도의 운영·관리 - 해외취업 등 글로벌 청년리더 육성전략의 수립·시행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관	다문화가족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 및 홍보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관	청소년활동진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활동진흥, 역량개발 및 국제교류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 청소년의 수련활동 및 문화·예술체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등 방과 후 활동프로그램의 개발·지원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문화경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 건축문화행사(어린이 건축창의교실, 건축의 날, 한국 건축문화대상, 국토 도시디자인대전 등)추진 - 한옥 관련 업무
	공공주택건설본부 (별도조직)	공공주택 건설추진단	행복주택기획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주택 프로젝트 협력과제 주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산업정책관	해양레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레저 활성화 - 마리나 산업의 전략적 육성 협력과제 주관
		항만국	항만지역발전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리나 산업의 전략적 육성 협력과제 주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리나 산업의 전략적 육성 협력과제 주관 - 어촌친수공간 조성 및 통합적 어촌 개발 협력과제 주관

제3절 국내 문화 관련 부처 간 협력의 성과와 문제점

1.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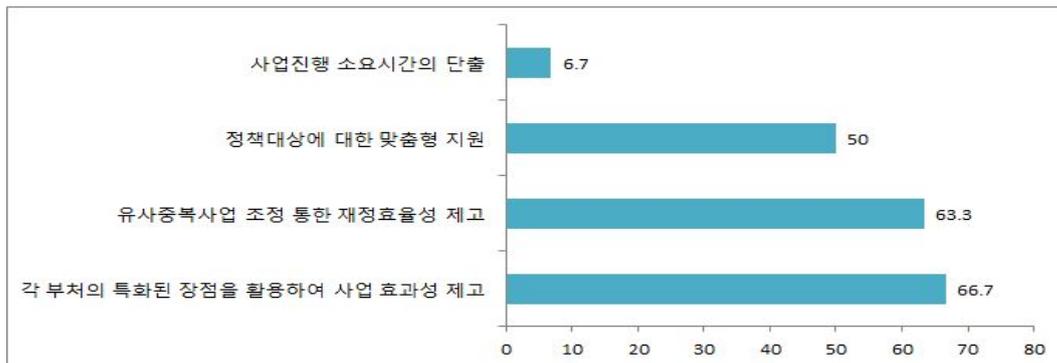
- 문화체육관광부와 타 부처 업무담당자와 학계 및 전문가 51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함
 - 조사기간 : 2013.12.9.~12.28(3주간)
 - 응답률 58.8%(30명) :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 업무 담당자 6명, 타 부처 업무담당자 4명, 학계 및 전문가 20명
 - 이 중 협업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의 비율은 26.7%로 나타남

가. 협업의 필요성 및 협업자원

□ 협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문화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타 부처와의 협력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5점 리커트척도로 응답하게 한 결과 평균 4.7점으로 협력과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체육관광부와 타 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각 부처의 특화된 장점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66.7%)와 ‘유사중복사업의 조정을 통한 재정효율성 제고’(63.3%), ‘정책대상(수혜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지므로(50%)’, 사업진행 소요시간의 단축(6.7%)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 문화체육관광부와 타 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한 이유



□ 협업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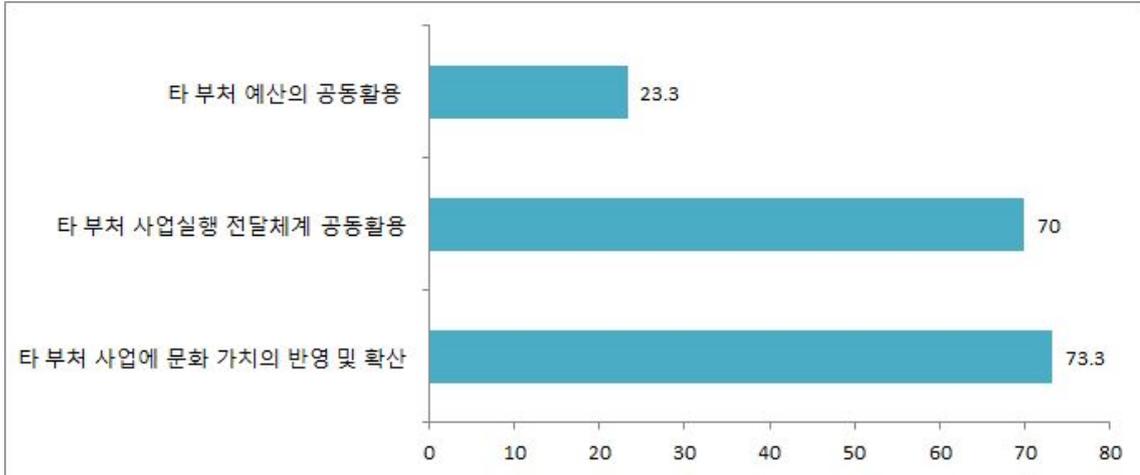
- 타 부처와의 협력과제를 진행함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지는 장점에 대해서는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집 등), 지역문화재단, 지역콘텐츠진흥원 등의 사업실행 네트워크의 보유’가 66.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 문화전문인력, 문화기업 등과의 원활한 소통과 관계적 친화성’ 및 ‘문화관련 사업실행과 관련된 노하우의 축적’이 각각 60%, ‘문화예술프로그램 및 문화콘텐츠 등 소프트웨어(S/W)의 보유’라고 응답한 이들은 46.7%로 나타남

<그림 3-2> 협업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의 강점



- 문화체육관광부가 타 부처와의 협력과제를 통해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부처 사업에 문화적 가치의 반영 및 확산’이 7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타 부처 사업실행 전달체계(네트워크)의 공동활용’이 70%, ‘타 부처 예산의 공동활용’이 23.3%로 나타남

<그림 3-3>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부분



□ 협업 우선순위

- 문화체육관광부와 타 부처간 협업을 가능한 사업들 중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협업의 우선 순위, 즉 협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게 나타난 과제들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3-5> 협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게 나타난 협력과제

부처	사업내용	협업의 필요성	협업의 시급성
교육부	문화예술교육활성화	80	63.3
문화체육관광부	타부처 공무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강화	80	33.3
통일부	문화융성과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 추진	80	23.3
문화체육관광부	범부처사업을 아우르는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76.7	43.3
농림축산식품부	유희시설 활용한 마을문화공간조성 및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70	43.3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적응력 제고	70	33.3
안전행정부	다양한 마을공동체 발전사업의 시너지 제고	66.7	53.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영향평가의 실시	66.7	40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66.7	36.7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문화조성(무한상상마당, 창조경제종합포털등)	66.7	36.7
환경부	생태휴식 공간 확대 등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	63.3	26.7
문화재청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 체계화	63.3	26.7
문화재청	국민의 문화재 향유권 확대	63.3	26.7
문화재청	문화재 남북교류 및 국제협력 강화	63.3	13.3
문화체육관광부	협업지원체계 강화	60	33.3
교육부	재외문화교육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	60	23.3
문화재청	문화재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확충	56.7	36.7
교육부	장애다문화탈북학생 등 교육 지원 강화	56.7	33.3
국토교통부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추진	56.7	33.3
교육부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정 운영(중학교자유학기제도입 등)	56.7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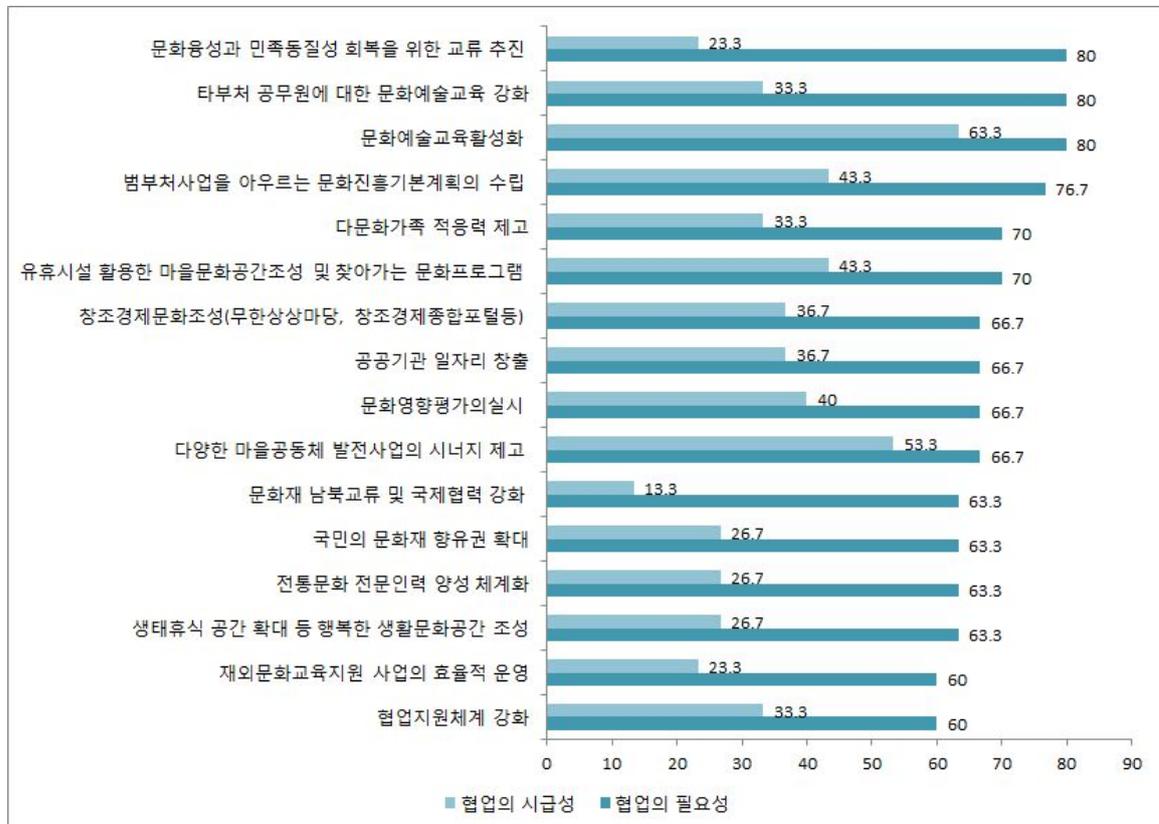
외교부	178개재외공관등의문화외교전초기지화	56.7	30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시설 및 행정서식에 문화적 감성을 입히기	56.7	30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정주여건 실현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확충	56.7	26.7
문화재청	지역문화재 활용 다양성 제고	56.7	23.3
해양수산부	해양관광레저스포츠 육성	56.7	20
법무부	소년원교육 내실화 및 사회복지 지원강화	56.7	13.3
교육부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교체육활성화	53.3	40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스타일 콘텐츠로 세계 진출	53.3	36.7
국토교통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인프라 확충	53.3	33.3
농림축산식품부	한식세계화 사업 재정비	53.3	26.7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맞춤형 정착 지원	53.3	23.3
보건복지부	4대 중독문제(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에 대한 종합적 대응	53.3	23.3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	53.3	23.3
문화재청	문화재 안전관리체계 고도화	53.3	23.3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활성화로 따듯한 성장	53.3	16.7
외교부	700만 재외동포 역량 결집 및 교육·문화 지원 확대	53.3	13.3
농림축산식품부	다문화여성대학 운영	53.3	10
미래창조과학부	창조허브로서의 무한상상실 운영	53.3	6.7
법무부	학교폭력 등 청소년비행예방기능 강화	50	33.3
여성가족부	청소년의 창의성 및 글로벌 역량 강화	50	33.3
미래창조과학부	산학연 협력 및 창의적 인재육성	50	30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산업 및 스마트미디어산업 육성	50	30
고용노동부	청년 친화적 일자리 확충 기반 조성	50	26.7
미래창조과학부	생태계 창조형 R&D 패러다임 전환	50	16.7

주 : 복수응답에 대한 응답비율(%)

- 협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사업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으로 응답자의 80%가 협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63.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응답자의 70% 이상이 협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업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교육부(80%)’, ‘타 부처 공무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강화(80%)’, ‘문화융성과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 추진-통일부(80%)’, ‘범 부처 사업을 아우르는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76.7%)’, ‘유휴시설을 활용한 마을문화공간조성 및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농림축산식품부(70%)’, ‘다문화가족 적응력 제고-여성가족부(70%)’ 등으로 나타남
 - 이 외에도 ‘다양한 마을공동체 발전사업의 시너지 제고-안전행정부’, ‘문화영향평가의 실시’,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기획재정부’, ‘창조경제문화조성-미래창조과학부’이 각 66.7%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생태휴식공간 확대 등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환경부’,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 체계화-문화재청’, ‘국민의 문화재 향유권 확대-문화재청’, ‘문화재 남북교류 및 국제협력 강화-문화재청’이 각 63.3%, ‘협업지원체계 강화’와 ‘재외문화교육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교육부’이 각 60%의 응답률을 나타냄

○ 협업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교육부(63.3%)’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양한 마을공동체 발전사업의 시너지 제고 -안전 행정부(53.3%)’, ‘범부처 사업을 아우르는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과 ‘유휴시설 활용한 마을문화공간조성 및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농림축산식품부’이 각 43.3%, ‘문화영향평가의 실시(40%)’,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교체육활성화-교육부(4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이 외에도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기획재정부’, 창조경제문화조성-미래창조과학부’, ‘문화재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확충-문화재청’, ‘한국스타일콘텐츠로 세계진출-미래창조과학부’가 각 36.7%, ‘타 부처 공무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강화’, ‘다문화가족 적응력 제고 -여성가족부’, ‘장애다문화탈북학생 등 교육지원 강화-교육부’,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추진-국토교통부’, ‘삶이 질 개선을 위한 생활인프라 확충-국토교통부’가 33.3%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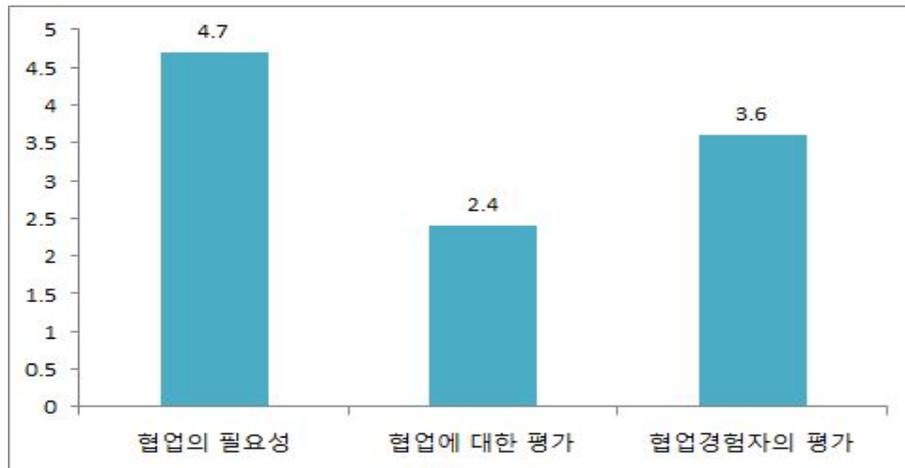
<그림 3-4> 협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게 나타난 협업과제



나. 협업 현황에 대한 평가 및 성공요인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타 부처와의 협업이 잘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평균 2.4점으로 응답하여, 협업이 잘 수행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실제로 협업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경우, 본인이 수행한 부처간 협력과제가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 평균 3.6점으로 응답하여, 다소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5> 협업의 필요성 및 협업수행에 대한 평가



- 본인이 수행한 부처간 협력과제의 성공 또는 실패요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의견이 나타남

※ 긍정적 평가

공동의 목표의식과 사명감을 가진 경우 성공적인 결과가 도출됨

실시에 대한 공감대 및 필요성 인식, 사전에 예산 및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구분으로 협업에 대한 부담이 적은 편

부처 간 이견이 없었으며, 추진과정에서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져 사업 성과가 좋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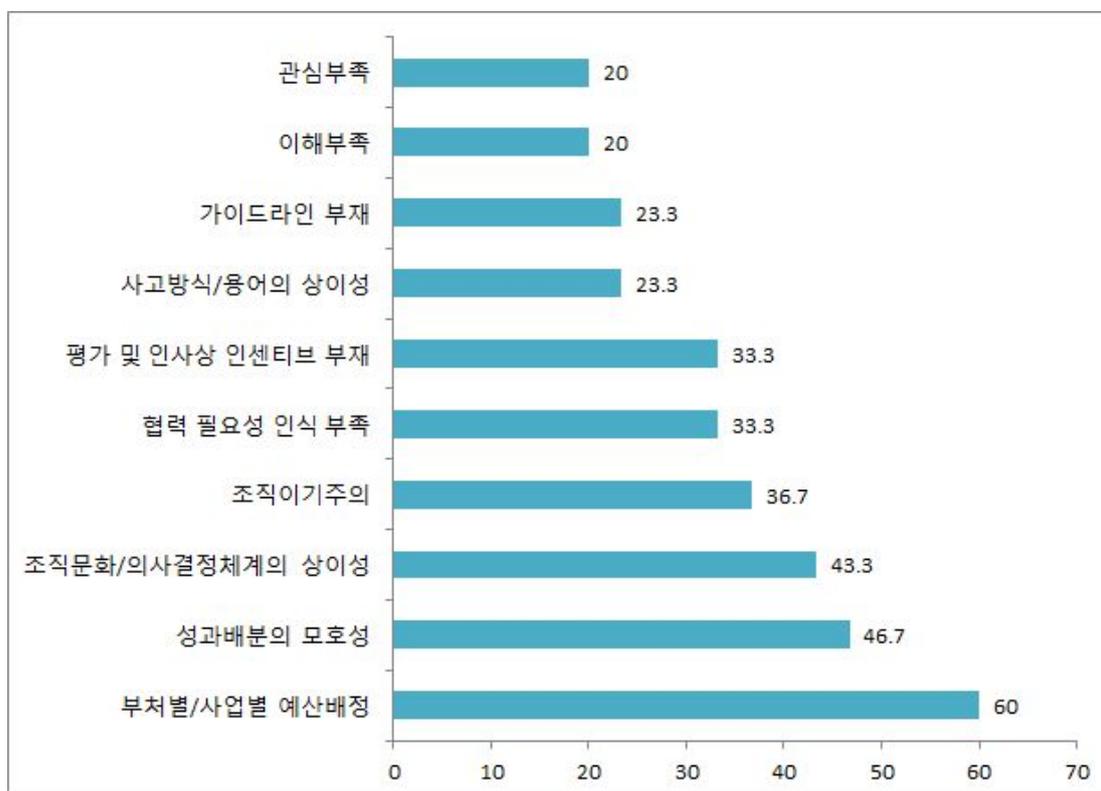
※ 부정적 평가

부처간 업무분장에 있어서 서로 미루는 행태를 갖고 있어서 업무진행에 어려움이 있음. 업무의 규모가 큰 경우는 협업보다도 한시적 위원회를 조직해서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함

협업이 필요하지만 각 부처별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음

- ‘문화체육관광부와 타 부처와의 협업이 잘 수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는 ‘부처별·사업별 예산 배정으로 인한 협력사업 추진의 곤란’이라고 응답한 이들이 60%, ‘협력사업으로 인한 성과 배분의 모호성(46.7%)’, ‘각 부처 조직문화 및 의사결정체계의 상이성(43.3%)’, ‘조직이기주의(36.7%)’,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협업 결과에 따른 평가 및 인사상 인센티브 부재’가 각 33.3%, ‘각 부처의 고유한 사고방식 및 용어로 인한 합의도출의 어려움’과 ‘협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부재’가 각 23.3%, ‘협력사업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협력사업에 대한 관심의 부족’이 각 20%를 차지함

<그림 3-6> 협업이 잘 수행되지 않는 이유



- ‘문화체육관광부와 타 부처와의 협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협업 담당자의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기회 제공’이 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획단계에서부터 협업과제에 대한 공동설계’가 56.7%, ‘협업 실무자간 교감 및 신뢰형성을 위한 워크숍, 간담회 실시’가 46.7%, ‘협업 관련부서 신설을 통한 협업에 대한 지원 강화’가 30%, ‘협업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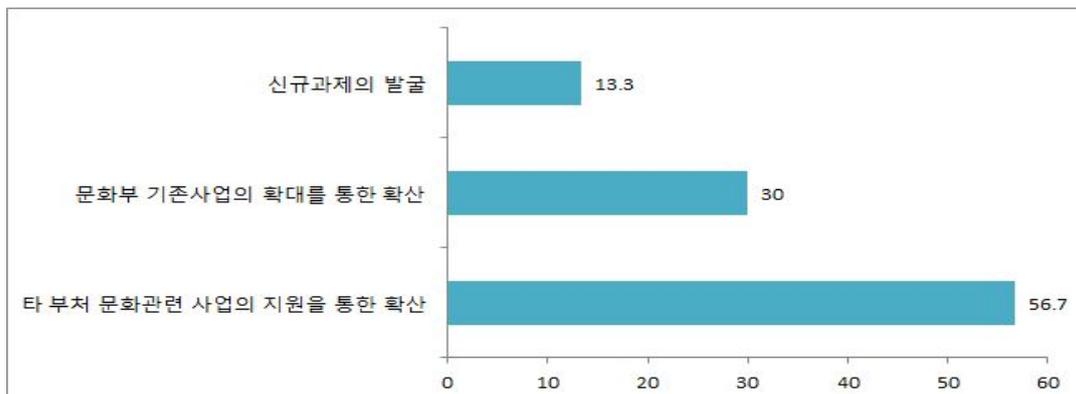
정 및 제시’, ‘협업과제에 대한 개인별 평가 및 인사상의 인센티브 제공’, 협업과제를 위한 별도의 인력 및 예산의 배정’이 각 26.7%를 차지함

<그림 3-7> 성공적 협업을 위해 필요한 요인



- 협업과제 진행 및 발굴에 있어 바람직한 방식에 대해서는 ‘타 부처가 진행하고 있는 문화 관련 사업의 지원을 통한 확산’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하고 있는 기존 사업의 확대를 통한 확산’이 30%, ‘신규과제의 발굴’이 13.3%로 나타남

<그림 3-8> 협업과제 진행 및 발굴에 있어 바람직한 방식



2. 협업을 통한 성과

가. 각 부처의 특화된 장점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과성 제고

- 각 부처가 보유한 고유의 정책자원, 사업실행 전달체계(네트워크), 예산의 공동활용을 통한 부처의 자원만으로는 수행할 수 없었던 정책대상(수혜자)에 대한 포괄적·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증대되었고, 결과적으로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각 부처가 진행하기에 어려운 업무에 대한 협조를 통해 사업진행 소요시간이 단축되어 즉각적인 문화서비스가 가능해졌다는 것 또한 성과로 볼 수 있음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사례

-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를 통해 풍부한 문화소양과 튼튼한 체력,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문화예술·체육교육 진흥을 위한 업무협력 합의서>를 체결함
 - 양 부처는 전문예술인을 학교에 지원하는 예술강사 지원사업, 초등학교에 대한 체육 보조강사 배치 사업, 쾌적한 체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한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사업, 실내스포츠 활동 지원을 위한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협력하여 추진하고, 이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련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및 재원확보,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홍보 등에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규정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강사 선발 및 학교 배치, 예술강사 교육, 예술강사 관리 및 평가 등 운영 전반을 담당
 - 교육부는 사업비 분담, 지원대상 학교 선정, 예술강사 배치 및 학교 운용 등 협조를 담당
-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양 부처가 보유한 행정적 전달체계(교육부의 시도 교육청,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6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및 국악운영단체)를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초·중·고등학교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창의·인성 함양 및 문화향유능력 제고에 기여함
 - 2013년 기준 총 사업비는 70,472백만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국고 39,421백만원), 시도 교육청(지방교육재정 25,238백만원), 지방자치단체(지방비 5,813백만원)
 - 2013년 기준 7,254개교(전체 대비 63%)의 기본교과, 선택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토요일아리 활동 등에 국악, 연극, 무용,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사진 등 8개

분야 예술강사 4,485명을 지원하여 약 210만명의 학생이 수혜를 받음

- 국가문화유산 대국민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사례
- 전국 국·공·사립 박물관 및 개인소장 유물 정보에 대한 종합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문화유산정보의 분산 관리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 및 행정적 비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
- 문화재청과 중앙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등 국가문화유산 관계기관 간 회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고 2013년 8월 <문화재보존관리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
- 국가문화유산종합서비스 언론브리핑을 합동으로 실시하고 9월부터 <문화포털 국가문화유산 온라인 종합서비스>를 실시함
 - 문화재 및 국·공·사립 박물관 소장 유물 정보 30만건을 연계하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기
- 11월부터 국가문화유산정보 품질제고 및 표준화 등 문화유산 대표기관 간 공유협업을 위한 내부망 정보 공유 연계
 - 표준유물관리시스템 78만여점, 등록 및 지정문화재, 출토유물 등 54만점
- 문화유산정보의 개방 확대 및 통합서비스 제공 기반으로 문화유산정보의 손쉬운 이용과 활용이 가능해졌으며, 문화유산정보를 활용한 관련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 문화재와 전통문화를 모티브로 하는 상품 개발 등에 기여

나.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을 통한 재정효율성 제고

- 부처간 업무협약(MOU)에서 협력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책임소재로 인한 유관기관 간 갈등가능성을 해소하고, 중복 사업에 대한 사전적 조정을 통해 재정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함
-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콘텐츠산업 활성화 협력 추진 사례
- 새 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콘텐츠 관련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됨에 따라 문화콘텐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디지털콘텐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 간에 업무조정 및 상호협조 필요성이 증대됨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 6월 <국정과제 및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7월에는 창의적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계획>을 합동 수립하여 발표함

- 또한 창조경제 협업과제 관련 실무협의회 및 빛마루(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공동운영 및 양 부처 국장급 정책협의체를 운영했으며, 9월에는 <콘텐츠 해외진출 확대방안>을 합동으로 수립하여 발표함
- 이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공동으로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워크숍을 개최하고 <문체부-미래부-카카오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모바일·스마트 콘텐츠 상생협력 MOU>체결 및 콘텐츠 창의생태계 협의회 개최, 양 부처간 협력강화를 위한 양 부처 과장급 간담회 개최, 양부처 장관의 콘텐츠업계 초청 정책협의회 개최, 콘텐츠코리아 랩 설립 추진을 위한 양 부처 공공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함
- 이러한 노력을 통해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양 부처 간 역할의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양 부처의 공동 노력을 통해 콘텐츠산업 육성 정책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었음

다. 문화부 정책의 영역을 넘어서 문화 가치의 사회적 확산

-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는 문화예술문화콘텐츠·체육·관광 정책의 영역을 넘어서 문화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타 부처가 진행하는 사업에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더 큰 시너지를 생성하는 데 기여함

□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활용 문화공간 조성 협력 사례

- 폐 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을 문화예술을 통해 활성화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 행복산단팀과 산업단지 근로자 문화여가공간 확충을 협의하고 산업단지 공간 활용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
-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사업 관련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부처 7개 사업 합동공모 추진
- 동 협력을 통해 버려져있는 유휴공간인 폐산업시설을 활용하고, 문화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예술인에게는 부족한 창작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됨

3. 부처간 협업에 있어 문제점

가. 협력사업에 대한 이해, 관심,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 대부분의 협업은 실무자 차원에서보다는 부처 최상위 차원에서의 정치적 결정 또는 MOU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협업을 추진하게 된 본래의 취지나 목적, 필요성, 상대 부처 사업에 대한 합의 또는 공감의 미형성으로 인해 이후 협업 과정에서 곤란을 겪게 됨
- 정책 기획보다는 집행 차원의 협력으로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관계 유지 곤란(김세훈, 2012)
 - 타부처 소관 법률조항이나 기본계획에서 문화분야가 포함될 것을 규정하고 있거나 관련 위원회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도 있으나 실제 부처간 협력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음
 - 문화체육관광부와 타 부처간 업무협력과제는 주로 정책결정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정책집행 차원의 실무적 협력에 집중
 - 이마저도 단기사업에 국한하여 이루어짐으로써 협력관계 유지가 해당 사업 추진기간 동안만 짧게 이루어지는 경향
- 일방적·수동적 협력의 한계(김세훈, 2012)
 - 초기단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타 영역에 문화예술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협력활동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타 부처의 협조를 얻어 문화활동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 협력 상대방인 타 부처의 경우 적극적 입장에서 이를 추진하기 보다는 수동적 입장에서 지원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나. 예산, 성과배분, 평가, 의사결정 등에 있어 제도적 한계

- 부처별·사업별 예산 배정으로 인한 협력사업 추진의 곤란
 - 협업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별도의 추가적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부처별·사업별로 예산이 배정되므로 이미 각 사업에 대한 예산이 배정된 이후에는 협력사업 추진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발생함
 - 협력과정에서 소요되는 추가적 업무와 예산, 인력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의 예산과 인력이 확정된 이후에는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타 부처와의 의견조율 등 추가적 업무 부담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담당자의 회피 행태가 나타나게 됨

- 협업 결과에 따른 성과의 과실을 각 부처가 어떻게 배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모호성
 - 협업 결과로 나타난 성과에 대해 각 부처, 업무 담당자의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곤란하며, 이로 인해 협력사업을 더욱 적극적·능동적으로 추진할 동력이 부재하게 됨
- 협업결과에 따른 평가 및 인사상의 인센티브가 부재
 - 부처간 협업을 위해서는 다수의 간담회와 회의를 통한 의견조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나 이에 대한 평가 또는 인사상의 인센티브가 없어 업무담당자의 소극적 행태를 초래하게 됨
 - 한편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2013년 정부업무평가>는 국정과제평가에 대해서도 과제협업에 대해 10점을, 국정과제지원평가에 있어서도 부처간 협업에 대해 25점을 배정하고 있음

<표 3-6> 2013년 정부업무평가에서 협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국정과제평가(성과목표달성도 60, 집행이행도 40, **과제협업 ±10**) + 국정과제지원평가(일자리 창출 25, 규제개선 25, **부처간 협업 25**, 정책홍보 15, 특정시책 이행관리 10)

- 각 부처의 조직문화 및 의사결정체계의 상이성
 - 부처간 조직문화와 의사결정체계가 달라 의견조율에 있어 어려움을 겪음
 - 예컨대 국실장 등 상위기관에 의사결정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부처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연한 조직문화와 의사결정체계를 가진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의견조율에 어려움을 겪거나 합의가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
- 각 부처의 고유한 사고방식 및 용어로 인한 합의도출의 어려움
 - ‘문화’를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재화로 인식하기보다는 일정 수준 이상의 상위계층에게나 필요한 ‘배부른 소리’로 간주하거나, 문화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종의 이벤트성 행사’ 등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어 협업에 어려움이 가중됨

다. 조직통합 및 업무조정에 대한 우려

- 효율성 중심의 통합 패러다임이 지배적인 현실에서 자칫 협업의 결과로 해당 사업이 규모나 자원이 큰 상대 부서로 통합되거나, 조직 자체가 통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

-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다수의 사업들은 소규모 예산을 통해 수행되는 소프트웨어적 사업들이 많은데, 이 경우 부처간 협업의 성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사업에 대해 예산 등에 있어 기여율이 높은 타 부처로 사업이 이관되는 경우가 발생
- 예컨대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인 <문진성시 사업>의 경우 소규모 예산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후 중소기업청에서 진행하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으로 통폐합되면서 ‘문화를 통한 시장활성화’보다는 전통시장의 편의시설 개보수 작업에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이 나타남
- 부처간 협업을 통해 좋은 성과를 낳았을 때, 해당 사업으로 인한 조직통합이나 업무이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업무담당자의 소극적 행태를 초래하게 됨

라. 협업절차, 가이드라인, 지원체계의 부재

○ 협업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부재

- 새정부 출범 이후 정부 3.0, 부처간 칸막이 허물기에 대한 논의가 크게 대두됨으로써 부처간 협업에 대한 요구가 크게 늘어 <창조경제 실현계획> 등과 같이 ‘부처간 합동계획’ 발표가 이곳 저곳에서 증가하고 있으나, 막상 협력 사업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이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업무담당자들에게는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협업을 위한 별도의 지원체계가 부재

- 일부 사업 담당자들의 경우 협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협업을 위해 타 부처의 어떤 곳과 접촉을 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협업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 등이 부족하여 협업에 애로를 겪음
- 상부기관의 MOU를 통해 이루어지는 협업의 경우 상부로부터의 지시로 인해 협의회나 간담회 등의 구체적인 후속절차가 이루어지는 데 어려움이 없으나, 개별 담당자들 차원에서 필요에 의해 협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장애가 큰 것으로 나타남

IV

문화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협력과제 발굴

제1절 문화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

제2절 주요 협력과제

제3절 협력기반 조성

제1절 문화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

1. 기본방향

- ‘문화’가 가지는 가치가 단순히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영역의 사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타 부처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영역까지 확대되고 반영됨으로써 각 부처가 추진하는 정책의 내용과 결과가 더욱 풍성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해 문화로 ‘모든 영역이 함께’ 융성하는 대한민국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비전과 목표를 설정함

□ 비전 : 대한민국, 문화를 입다 - 문화로 함께 융성하는 대한민국

□ 목표 : 부처 간 협업을 통한 문화 가치의 사회적 확산

2. 추진전략

가. 협업 담당자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신뢰 형성을 위한 교육 및 교류기회 제공

-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협력과제를 수행하는 양 부처 협업 담당자의 협력사업에 대한 공동의 이해와 인식, 그리고 신뢰임
 - 협력사업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없이는 함께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임
 - 또한 협력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어느 일방의 기회주의적인 행태가 발생하지 않고, 공동의 노력을 통해 협력사업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담당자간의 신뢰 형성이 매우 중요함
- 따라서 협업 담당자의 ‘문화’와 ‘해당 협력사업’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워크숍, 간담회가 필수적으로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협업과정에 있어 지속될 필요가 있음
 - 지속적인 교육과 워크숍, 간담회 등을 통해 협업 담당자 간의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사업의 성공을 위한 각 부처가 가진 강점을 적절히 활용한 창조적인 방안의 도출이 가능해질 수 있음

나. 기획단계에서부터 협업과제에 대한 공동설계

- 기존의 협력사업은 상부기관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 추후에 이루어지는 집행과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협력사업이 기획되는 사례가 많아 협업의 지속성이나 효과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나타남
- 한편 최근 들어서는 <창조경제 실현계획>이나 <사회보장기본계획>, <지역발전기본계획> 등과 같이 부처 합동으로 이루어지는 기본계획들이 다수 만들어지고 있으나 단기간에 너무 넓은 범위의 정책사업과 관련하여 중장기계획을 입안하다보니, 부처 간 심도 깊은 논의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해당 계획 속에 단순히 포함시키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동 사업을 협력하여 진행할 실무 담당자들 간의 협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쳤을 때 협업의 효과성과 지속성은 더욱 커질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쳤을 때 협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모호성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임

다. 협업과제에 대한 평가 및 인사상 인센티브 제공

- 국무조정실에서는 <국정과제지원평가 시행계획>에서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25점), 규제개선(25점), 정책홍보(20점), 특정시책 이행관리(10점)’외에도 ‘부처간 협업(20점)’을 통해 부처간 협업노력과 성과를 평가할 것을 제시함⁷⁷⁾
 - 평가대상기관은 41개 중앙행정기관이며, 평가지표 및 배점은 다음의 <표>와 같음
 - 협업노력도는 국정과제관리시스템(e-IPSES)를 통해 평가
- 국정과제 외에도 부처간 협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협업담당자의 추가적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별 평가 및 집단별 평가(과별 평가)에 있어 협업 노력과 성과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고, 특히 업무 난이도가 높은 협업과제에 대해서는 인사 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77) 국무조정실(2013). 국정과제지원평가 시행계획.

<표 4-1> 국정과제지원평가 중 ‘부처간 협업부문’의 평가지표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1. 국정과제 이행성과	○ 국정과제 협업부처로 참여하여 세부과제 추진결과 받은 평가결과의 합 (12점) = ‘단위과제 집행이행도’의 합 + 성과지표 달성도’의 합	12점
2. 부처간 협업노력도	○ 국정과제별 협업노력도(3점) - 국정과제별 주관부처가 협업부처의 협업노력도에 대한 평가 결과를 부처별 점수로 반영 ○ 국정과제 단위과제별 협업노력도(5점) - 단위과제별 주관부처가 단위과제 협업부처의 협업노력도에 대한 평가 결과를 부처별 점수로 반영	8점
3. 협조 우수사례 및 비협조 미흡사례	○ 우수사례에 대한 가점(3점) - 국정과제 또는 국정기조에 대한 협업기여도가 크고, 유관부서(정책조정, 규제, 협업점검협의회 등) 또는 언론 등에서 협업정도가 우수하다고 평가한 경우 ○ 미흡사례에 대한 감점(-3점) - 국정과제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사례 등	총점20점 범위내 ±3점

라. 협업과제를 위한 별도의 인력 및 예산의 배정

- 문화체육관광부와와의 협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부처별·사업별 예산 요구 및 배정 구조 하에서는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혹은 국무총리실이나 안전행정부 차원에서 부처간 협업을 위한 ‘협업 전용 예산’을 별도로 배정하여, 필요성이나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인정되는 협업과제에 대해 해당 예산을 활용하도록 한다면 협업이 활성화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현재의 예산 구조로는 협업을 위한 추가사업을 위해 기존 사업의 예산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칫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 협업에 필요한 추가 인력의 경우에도 해당 ‘협업 전용 예산’을 이용하여 인건비 등을 지불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3. 추진방식

- 타 부처가 진행하고 있는 문화 관련 사업의 지원을 통한 확산
- 먼저 타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수의 문화 관련 사업들에 대해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가진 부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노하우를 동원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하고 있는 기존사업의 확대를 통한 확산

○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하는 기존사업들 중 타 부처 사업과 결합되었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타 부처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해볼 수 있음

□ 신규과제의 발굴을 통한 확산

○ 현재 양 부처 어디에서도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타 부처간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을 신규 발굴하여 시행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음

<그림 4-1> 문화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협업의 구조도

비전	대한민국, 문화를 입다 - 문화로 함께 융성하는 대한민국	
목표	부처간 협업을 통한 문화 가치의 사회적 확산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업에 대한 이해, 인식 및 신뢰 형성을 위한 교육 및 교류 • 기획 단계에서부터 협업과제에 대한 공동설계 • 협업과제에 대한 평가 및 인사상 인센티브 제공 • 협업과제를 위한 별도의 인력 및 예산의 배정 	
추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부처가 진행하고 있는 문화 관련 사업의 지원을 통한 확산 •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하고 있는 기존 사업의 확대를 통한 확산 • 신규과제의 발굴을 통한 확산 	
주요 협력 과제	교육/복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유아교육 및 돌봄서비스 강화 2.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정(교과/방과후/자유학기제) 3. 학교폭력 근절 및 인성 함양 4. 장애인, 노인, 특수계층의 문화여가기회 확대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 강화 6. 북한이탈주민의 맞춤형 정착 지원 7. 폭력 및 중독문제에 대한 예방 및 치유
	산업/고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융합산업 및 신산업 발굴·육성 2. 융합형 창의인재 육성 3.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 4. 가족친화·여가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문화교류/외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외교육·문화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문화외교 활성화 2. 한국스타일 콘텐츠로 세계진출 및 한식세계화 3. 문화융성과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교류 추진
	지역/일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과 농촌 정주여건 실현을 위한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 2. 다양한 마을공동체 발전사업의 시너지 제고 3. 문화유산과 고도(古都)의 효과적 보존과 활용
협력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진흥기본계획 및 문화영향평가 실시 • 문화자원DB 공동활용 및 문화컨설팅 제공 • 공공시설과 행정서식에 창의적 문화 감성 구현 • 행정인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으로 Soft Power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지원 강화 	

제2절 주요 협력과제

1. 교육 및 복지 분야

가. 영유아 교육 및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협업 :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 현황 및 진단

○ 영유아기 아동의 보다 나은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돌봄서비스가 필요하며, 특히 문화예술이 영유아의 정서, 인지능력, 창의력 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감안할 때 유아교육보육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 2012년 기준 전국 어린이집의 수는 42,527개, 보육아동 수는 1,487,361명⁷⁸⁾
- 2012년 기준 전국 유치원의 수는 8,538개, 원아 수는 613,745명⁷⁹⁾
- 2011년 기준 전국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관, 아동전용시설) 수는 280개소, 수용자 수는 16,523명⁸⁰⁾
- 2012년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는 4,036개소, 이용 아동수는 108,357명⁸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진행 중임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을 체험-학습-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6개 분야(국악, 연극, 영화, 무용, 음악, 미술)의 전문 예술강사를 파견, 연간 30회 교육활동을 지원
- 주5일제 수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청소년이 토요일에 참여할 수 있는 주말 프로그램 3개 분야(문학, 장르 융 복합, 서예)을 지원
- 그러나 2012년 기준 아동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파견된 예술강사의 수는 197명, 수혜자 수는 4,203명에 불과⁸²⁾

78) 보건복지부(2012). 2012 보육 통계

79) 한국교육개발원 (2012). 2012 교육통계연보

80) 보건복지부(2011).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 및 중사자현황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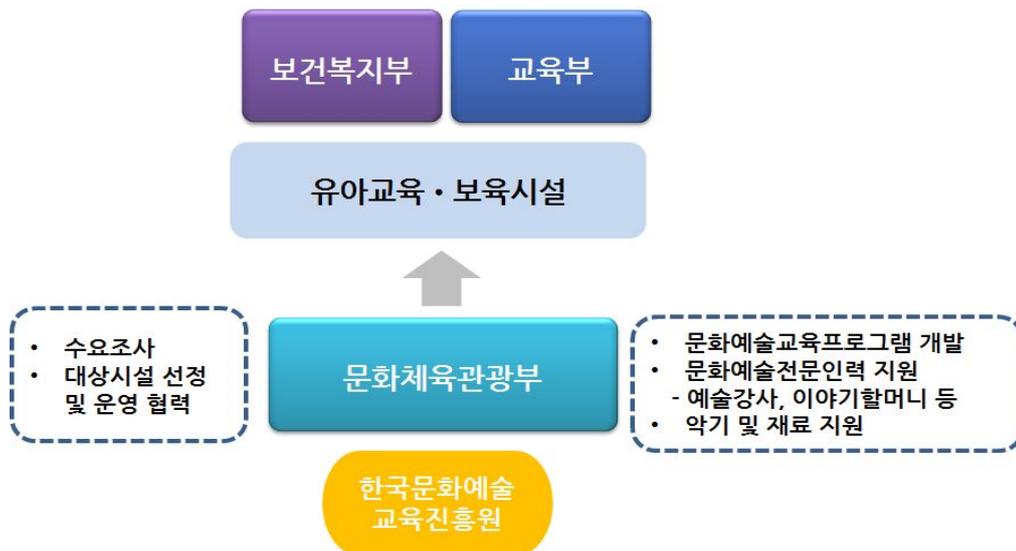
81)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2012). 전국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8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intro.arte.or.kr/business/eduSociety2012.jsp>)

□ 협력방안

- 유아교육 및 돌봄서비스에 다양한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과 전문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동의 정서함양 및 인지능력, 창의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협업이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중심)가 유아교육·보육시설에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고 문화예술 교육 인력(문화예술교육사, 이야기 할머니 등) 및 악기 등을 지원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각 부서가 보유한 유아교육시설과 보육시설에 대해 수요조사를 수행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있는 시설에 대해 문화예술강사 및 프로그램을 파견 및 보급할 수 있도록 협력(대상시설 선정 및 매칭, 운영 협력)

<그림 4-2> 유아교육 및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정(교과과정, 방과후돌봄, 자유학기제)을 위한 협업 :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교문화예술 및 체육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을 길러 주고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간의 협업을 통한 노력이 진행 중
 - 특히 문화예술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나 경험이 축적되어야 선호가 형성되고 향유능력이 길러지는 경험재(experience goods)의 성격을 띠므로, 아동 및 청소년기에 다양한 문

화예술교육이나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문화예술강사(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등 8개 분야)를 파견하여 교육하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수행
 - 2013년 기준 기본교과, 선택교과, 창의적체험활동, 토요동아리활동에 국악, 연극, 무용,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사진 등 8개 분야 예술강사가 지원
 - 그러나 2012년 기준 수혜학교의 비율은 56.8%, 수혜자의 비율은 27%에 불과

<표 4-2>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수혜학교 및 수혜자 비율

(단위: 개, 명, %)

표 구분항목	2011	2012
수혜학교 수	5,772	6,531
전체 초중고등학교 수	11,342	11,500
수혜학교 비율	50.9	56.8
강사수(명)	4,164	4,263
수혜자 수	1,760,000	1,900,000
전체 초중고등학생 수	7,470,000	7,040,000
수혜자 비율	24	27

- 이 외에도 방과후 학교와 돌봄서비스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에서 각각 추진되고 있으나 주로 교과보충수업방식으로 이루어져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적성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노정

<표 4-3> 각 부처 방과후 돌봄사업 현황(2012년 12월 기준)

(2012.12월 기준)

구분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여성가족부 방과후 아카데미
서비스 내용	보호, 학습지도, 급식지원, 상담, 지역사회 연계	보호, 학습지도 및 일부 급식지원	특기적성 교육 등 역량개발, 급식지원
규모	4,036개소	7,400교실	200개소
이용아동	107천명	160천명	8천명

자료: 보건복지부, 2013년 업무계획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복지” 주요정책 추진방향, 44p

- 한편 2013년부터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의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

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유학기제의 운영이 추진되고 있음.

- 자유학기제는 2013년 8월 개학과 동시에 42개교의 연구학교에서 운영되며, 2013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격주 1회, 총 9회 과정으로 운영될 계획(추후 희망학교로 확대하여 2016년부터는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
- 자유학기제의 운영체제는 기본교과 과정을 중심으로 한 공통과정과 학생의 흥미, 관심사 등을 반영한 자율과정으로 구성됨. 자율과정의 경우, 진로탐색, 동아리활동, 예술·체육, 학생 선택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됨(표 참조).
- 자유학기제는 13년 8월 개학과 동시에 42개교의 연구학교에서 운영되며, 13년 8월부터 자유학기제의 구체적인 운영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협업 과제로서 추진되고 있으나⁸³⁾ 준비기간의 부족으로 인한 인력 및 프로그램의 미비, 인력·지역사회의 협조를 통한 인프라의 부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⁸⁴⁾

<표 4-4> 자유학기제 운영체제 및 예시

구분	교수·학습 방법	평가
공통과정 (기본교과)	국어·영어·수학: 문제해결, 의사소통, 토론 등 사회·과학 등: 실험, 실습, 현장체험, 프로젝트 학습 등(핵심 성취기준 기반 수업)	중간기말고사 미 실시 고입 내신 미 반영 활동 내역 중심 기록
자율과정	학생 흥미, 관심사 등을 반영한 프로그램 편성 (진로탐색, 동아리활동, 예술·체육, 학생 선택 프로그램 등)	

자료:[아띠3.0]행복한 학교생활, 나의 꿈과 끼를 찾게 도와주는 자유학기제!
(<http://blog.naver.com/mykoreagood?Redirect=Log&logNo=110175125688>) (출처: 교육부)

- 관련하여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초·중등 교육에 ICT, 공학, 문화예술, 인문학 등 타 분야를 접목한 융합형 창의교육 도입을 위한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업도 추진될 예정에 있음

<표 4-5> 융합적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기반 강화를 위한 협력과제

협력부처	주요내용
미래부, 교육부	과학관, 출연(연) 등 학교 밖 인프라와 연계한 체험·탐구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하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을 중심으로 과학기술·공학·예술 관련 전문가 등의 협력 연구를 통해 현장 적용성이 높은 수업모형을 개발하고, 대학기 업·출연(연) 등을 활용한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83) 2013 대통령 업무보고, 교육부, p37)

84) Answer 제 88호, '자유학기제, 위기의 학원가에 돌파구가 될 것인가?'
(http://www.answerzone.co.kr/az_mag/az_view.asp?hosu=88&idx=1856)

	융합과학 수업모델 개발·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학교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보급하여, '17년까지 전체 학교로 융합형 과학교육 프로그램 도입 추진
	과학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학교 융합교육 지원 인력풀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문연수, 기초연수, 심화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교원 생애주기별 연수체계 구축·운영 • 융합형 과학교육 우수 사례를 체험할 수 있는 사이버 연수 콘텐츠 개발 및 원격 연수 운영 • 과학기술인협동조합, 대학생교육기부단을 활용하여 초·중·고등학교의 체험·탐구 활동 지원
교육부, 문체부	콘텐츠 분야 창의인재 조기 발굴과 체계적 육성을 위한 초·중·등 창의교육 지원 프로그램 콘텐츠 창의교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학교를 통해 공연, 미술, 음악, 디자인 등 콘텐츠를 활용한 초·중·등 '창의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2014년 10개교) •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창의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 및 저점인 '콘텐츠 창의교실' 구축·운영(2014년 3개소)

- 교육부는 국민의 인문학적 소양 증진을 위해 2006년부터 인문주간(Humanities week)를 지정하여 다양한 인문학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인문주간 주요 행사로 <국제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하여 다채로운 인문학 강연, 전시, 공연 등을 제공
 - 특히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시민인문강화>는 일반인, 초·중등학생, 노숙인, 새터민, 다문화가정 등 인문학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인문학 강좌임
-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중심으로 '길위의 인문학'이나 '정신문화포럼' 등의 인문학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음

□ 협력방안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 자유학기제, 방과후 돌봄교실, 창의적 체험활동, 토요일아리활동 등에 필요한 문화예술·체육교육 전문인력(예술강사 및 스포츠강사)를 파견하여 다양한 분야의 품질 높은 문화예술교육을 제공
 - 정규 교과과정과 관련하여 문화예술·체육을 타 교과목 내용과 결합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창의적 문제해결능력과 상상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통합교과과정 및 융합교육프로그램을 개발
 - 방과후 돌봄서비스 및 자유학기제 도입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인근에 위치한 다양한 문화시설(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등)의 프로그램을 하나의 패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과후 문화예술패스> 또는 <자유학기제 문화예술패스>를 도입하여 문화시설을 통한 다양한 문화놀이 체험, 학습능력 향상기회 제공

-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도서관, 박물관 등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는 <길 위의 인문학>사업 활용
-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미래창조과학부는 각 부처가 보유한 시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대상 시설의 선정(매칭) 및 운영에 대한 협력
- 인문학적 감수성 및 소양 증진을 위해 교육부와의 협업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학진흥원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는 <청년 인문캠프> 활용
 -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 및 방과후 과정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도서관, 박물관 등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는 <길 위의 인문학>사업을 활용

<그림 4-3>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관련 협력체계



다. 학교폭력 근절 및 인성 함양을 위한 협업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 현황 및 진단

-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다양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감사·처벌, 사후치료·교정 중심의 시책이 대부분임

<표 4-6>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협력사업 현황

주요 시책	관계부처	주요 내용
학교 반경 200M 이내를 학생안전지역으로 지정 추진	교육부, 안행부, 복지부, 식약처,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안전지역 통합관리를 위한 관계부처 T/F를 구성운영 • 학생안전지역 지정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학교 내부 및 학교주변의 학교폭력 감시대응체제 구축	교육부, 안행부,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TV 성능 개선 및 관제 강화 • 학생대상 'SOS국민안심서비스' 이용 홍보 및 안내 • 학교전담경찰관,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배치 근거 마련 및 보완
Wee프로젝트 확대 및 전문상담교사 확대를 통한 상담치료 지원 강화	교육부, 안행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상담과 치료를 위한 Wee 클래스, Wee센터, Wee스쿨을 확대 •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시에 맞춤형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
정서행동특성검사 사후 관리 및 학생 자살예방 체계 확립	교육부,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대상방법절차 등 특성검사 체계 보완개선 및 특성검사의 정기적 실시로 자살징후 등 위기학생 조기발견 체계 정립 • 관계부처차자책국립병원 등과 공동으로 자살시도 학생 등 위기 학생 관리를 위한 학교-지역사회 연계 우수모델 육성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교육부, 법무부, 여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부터 시범운영 중인 '어울림 프로그램' 등 관련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 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학부모 수요와 특성 및 자녀발달단계(예비학부모 포함)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확대

- 집단따돌림 등과 같이 최근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은 사후적 치료나 처벌, 교정 보다는 사전적인 예방 또는 정서적·관계중심적 접근방법이 보다 유효한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오스트레일리아 퀸즈랜드 대학의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의 가해 및 피해 아동의 공감능력지수'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해와 피해 경험 아동의 경우 평균 공감능력 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⁸⁵⁾
 - 청소년기의 급격한 변화가 가해학생의 개인적 특성, 좌절감, 학교 내외의 사회적 요인들과 만나 범죄적 특성을 가진 행위로 발현되는 것이 학교폭력이므로, 예술교육을 통해 폭력이 발현된 원인을 찾고, 해당 학생의 정신건강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들의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
 - 문화예술교육으로 학교폭력을 전적으로 예방하기는 힘들지만 그 변화는 놀라우며 교육과정 중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서로의 관심사나 공유를 통한 신체와 감정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또한 문화예술은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여 자신의 내재된 상처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불안한 정서를 완화시켜준다는 측면에서 그 체험 행위 자체가 치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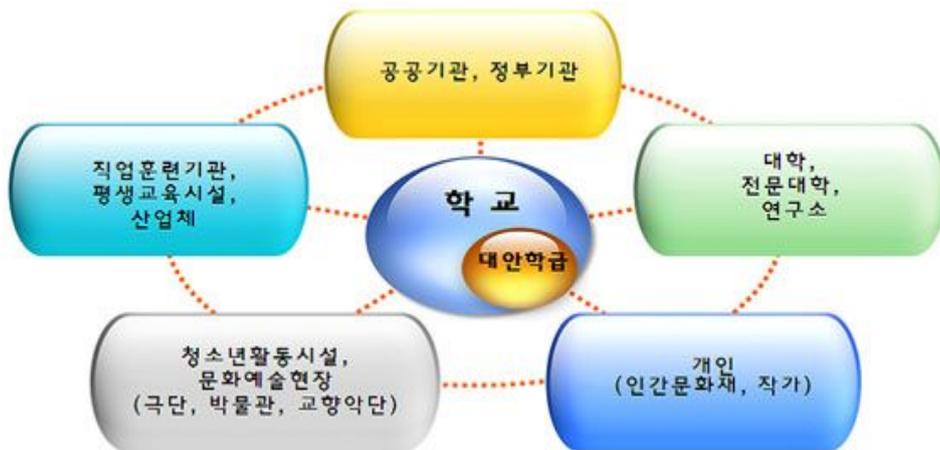
85) 양혜원·김혜인(2012). 2013 문화예술트렌드 분석 및 전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성격을 가지고 있음

□ 협력방안

- 교육부에서 시범운영 중인 ‘어울림 프로그램’ 등 관련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과 연계 협력
 - 어울림 프로그램은 역할극, 음악·미술활동, 집단상담, 감정코칭 등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공감·소통능력을 높여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으로 공감, 의사소통, 갈등해결, 자기존중감, 감정조절, 학교폭력 인식·대처 등 6개 핵심 역량 증대를 목표로 각각의 역량별로 개발되며, 학생용, 학부모용, 교직원용 별로 기본과 심화로 나뉘어 개발됨⁸⁶⁾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어울림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문화예술강사 및 문화예술교육치유프로그램 지원
- 교육부와 ‘대안교실’ 프로그램 관련 협력
 - 대안교실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가해자, 학교부적응 학생 또는 학업중단위기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학교 안팎의 시설을 활용 작업장 학교형, 명상·힐링형, 인성·체험형, 교육·상담형 등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문화체육관광부는 학생들이 극단, 박물관, 교향악단 등 다양한 문화예술현장을 체험하거나 또는 인간문화재, 작가 등과의 시간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매칭(matching) 협조

<그림 4-4> 교육부가 제시한 대안교실을 활용한 학교내외 사회적 인프라 연계 활용(안)



자료 :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JSESSIONID_KOREA=qQ1yRvtd1.35NGpx0tkY8TXcVg2M9zhtS3MQ9SG2qZF1nWMfrJz6vL1477518434!859507412?newsId=148764941&pageIndex=1

86) http://www.korea.go.kr/news/policy/policyView.do?news_id=586377

- 교육부 소관 Wee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예술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 진행
 - Wee센터는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다중의 통합지원 서비스망인 Wee(We + education + emotion) 서비스⁸⁷⁾중 하나로 단위학교에서 선도 및 치유가 어려워 학교에서 의뢰한 위기학생 및 상담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상담-치유 원스톱서비스를 제공
 - 예컨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서로를, 자신을 직접 체험하는 사회심리극 형식의 예술치유 프로그램인 교육연극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창의예술캠프>와 같은 자연 속에서 예술체험활동 프로그램의 확대

<그림 4-5> 학교폭력 근절 및 인성 함양을 위한 협업체계



라. 장애인·노인·특수계층의 문화여가기회 확대 :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 현황 및 진단

- 의학기술의 발전과 생활환경의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100세 사회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노년기가 연장되면서 노후의 삶을 보다 가치 있고 즐겁게 보내기 위해 문화활동 및 여가의 중요성에 커지고 있음. 한편 연령별 문화격차가 지속되고 있어 특정 연령대의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우리나라 사람들의 연령별 예술행사 관람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

87) Wee센터는 단위학교에서 선도 및 치유가 어려워 학교에서 의뢰한 위기학생 및 상담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상담-치유 원스톱서비스를 제공

- 내어, 60대 이상 노인층의 관람율은 40%에 못 미치는 수준임.
- 연령별 문화예술행사 관람율: 10대 92.2%, 20대 91.5%, 30대 84.9%, 40대 75.9%, 50대 54.9%, 60대 이상 30.4%(60대 39.7%, 70대 이상 21.0%)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진행 중
-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예술강사가 직접 복지기관을 방문하여 5개 분야 연극, 음악, 무용, 미술(신규), 사진(신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진행
 - 2012년 기준 전국의 노인복지시설의 수는 총 71,872개소(노인주거복지시설 416개, 노인 의료복지시설 4,352개, 노인여가복지시설 64,077개, 노인여가복지시설 64,077개, 재가 노인복지시설 3,003개)⁸⁸⁾에 달하지만, 동 사업을 통해 노인복지관에 파견된 예술강사의 수는 97명, 수혜자 수는 3,800명에 불과
- 이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229개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노인들의 ‘행복한 인생 2막’(골든 에이지)을 위한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노인들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 후에는 <문화나눔봉사단>과 각종 <문화동아리 활동>을 통해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2012년 기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511,000명에 달하며, 장애수당 수급자수는 314,894명에 해당함⁸⁹⁾
- 한편 2012년 기준 장애인 거주시설의 수는 1,348개(수용인원은 30,640명),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의 수는 478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수는 1,140개(복지관 205개, 주간 보호시설 526개 등),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수는 16개,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의 수는 17개에 달함(보건복지통계연보, 2013)⁹⁰⁾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장애인 복지관 이용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진행 중
-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아동과 부노에게 4개 분야(무용, 음악, 미술, 영화) 교육 프로그램 진행
 - 2012년 기준 장애인 복지기관에 파견된 예술강사의 수는 61명(무용 35명, 미술 11명, 음악 10명, 영화 5명), 진행된 프로그램의 수는 99개(무용 43개, 미술 29개, 음악 18개, 영화 9개), 수혜자 수는 929명(무용 421명, 미술 239명, 음악 180명, 영화 89명)에 불과

88) 보건복지부(2012). 노인복지시설 현황 자료

89) 보건복지부 시도 장애인등록현황 자료(출처 :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ndexMain.jsp?idx_cd=2768&bbs=INDX_001&clas_div=C&rotKey=1.48.0

90) 출처 :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ndexMain.jsp?idx_cd=2773&bbs=INDX_001&clas_div=A

- 우리나라 교정시설(전국 교도소, 구치소 등 51개 기관) 1일 평균 수용인원은 2012년 기준 45,488명(기결수용자 31,302명, 미결수용자 14,186명)임⁹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국방부와의 협력을 통해 교정시설과 소년원학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에 대해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진행 중
 - 2012년 기준 교정시설 40개소에 대해 50개 단체가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여 618명의 수용자가 수혜를 받음
 - 2012년 기준 10개의 소년원 학교에 대해 18개 단체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여 308명의 소년원 수용자가 수혜를 받음
 - 2012년 기준 4개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8개 단체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여 2,880명의 이용자가 수혜를 받음
 - 2012년 기준 1개의 치료감호소에 4개의 단체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여 71명의 이용자가 수혜를 받음
- 2012년 기준 우리나라 군인장병의 수는 약 650,000명(육군 520,000명, 해군 68,000명, 해병 27,000명, 공군 65,000명)으로 이 중 사병이 약 45만명에 달함⁹²⁾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국방부와 협력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군 장병들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진행 중
 - 2012년 기준 140개 군부대에 대해 144개 단체가 문화예술단체가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약 3,382명의 군장병이 수혜를 받음

<표 4-7> 군/교정시설/소년원 등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현황(2012년 기준)

구분	군	교정시설	소년원학교	청소년비행 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수혜시설 수	140	44	10	4	1
지원단체 수	144	50	18	8	4
수혜자 수	3,382	618	308	2,880	71

□ 협력방안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찾아가는 문화순회 사업>,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골든에이지 캠페인>등과 연계하여 전국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군부대, 교정시설 등에서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문화예술/

91) 법무부 내부행정자료(출처 : e나라지표)

92) 2012년 국방연감

- 교육/치유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및 프로그램의 보급
- 보건복지부, 국방부, 법무부 등은 각 부처가 보유한 시설(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군부대, 교정시설 등)에 대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시설을 선정(매칭)하고 문화예술/교육/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협력

<그림 4-6> 장애인·노인·특수계층의 문화여가기회 확대를 위한 협업체계



마.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 강화 :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 법무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 현황 및 진단

- 이민자의 수가 증가되고 부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따른 사회문제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상별 관리 및 체계적인 맞춤형 사회정착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여성가족부는 1단계 : 입국 전 결혼준비기, 2단계 : 입국초 가족관계 형성기, 3단계 : 자녀양육 및 정착기, 4단계 : 역량 강화기의 단계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⁹³⁾

<표 4-8>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1단계 : 입국 전 결혼준비기	• 국제결혼 과정의 인권보호와 교육프로그램
2단계 : 입국초 가족관계 형성기	• 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 및 안정적 생활지원

93)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내용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한국어교육 • 위기개입 및 가족통합교육 실시
3단계 : 자녀양육 및 정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교육 지원
4단계 : 역량강화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의 경제·사회적 자립 지원

○ 중앙부처 7개 기관이 다문화정책 수행하고 있으나 범정부 차원의 다문화정책 연계·협조가 미흡

-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등 7개 기관
- 다문화정책 관련 유사 위원회 설치·운영으로 정책기조의 혼선, 기능의 중복·공백 발생
- ※ 외국인정책위(법무부), 다문화가족정책위(여가부), 외국인력정책위(고용부)
- 부처별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중복수혜 발생 등 수혜자간 형평성 문제 발생
- 국제결혼 중개업체, 외국인범죄 등에 관한 정보가 관계부처간 공유되지 않아 외국인과 관련된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
- ※ 국제결혼 중개업체(법무부, 여가부), 외국인범죄(경찰청, 법무부, 고용부, 관세청)

□ 협력방안

- 지역 내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의집, 영상미디어센터,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등)에서 시행하는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및 다문화가족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타 부처 시설(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여성대학 등)과 공유
- 여성가족부가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한국어교육, 문화다양성 교육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 강화(전문강사 파견 및 교육프로그램/자료 보급)
 - 여성가족부는 수요조사 및 시설선정(매칭)과 운영 협조
-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다문화여성대학>에 한국어교육, 문화다양성 교육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 강화(전문강사 파견 및 교육프로그램/자료 보급)
 -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요조사 및 시설선정(매칭)과 운영 협조
- 법무부에서 이민자들의 한국생활 적응과 자립을 위해 진행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국어>과정, <한국사회이해> 과정 등에 한국어교육, 문화다양성 교육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 강화(전문강사 파견 및 교육프로그램/자료 보급)
 - 법무부는 수요조사 및 시설선정(매칭)과 운영 협조
-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해 윈스톱으로 제공하는 국민맞춤형 <고용복지센터(일명 윈스톱 센터)>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한국어교육, 문화다양성 교육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 강화(전문강사 파견 및 교육프로그램/자료 보급)

- 고용노동부는 수요조사 및 시설선정(매칭)과 운영 협조

<그림 4-7>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바. 북한이탈주민의 맞춤형 정착 지원 :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 현황 및 진단

- 통일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의 협업 체계 하에 탈북민 중심의 맞춤형 정착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진행 중이지만, 교육, 취업, 폭력예방 등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일반국민과 탈북민 간의 정서적 유대감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문화적 접근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표 4-9>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기존 협력사업 내용

분야	관련 부처	내용
맞춤형 교육서비스 지원	통일부, 교육부	• 전담코디네이터*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통일부,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원 교육과정 내에 고용센터 소개 및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 신설 • 취업보호담당관 제도 운영 내실화 • 지역 단위 유관기관 간 업무 네트워크 구축 협력 • 취업보호담당관에게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열람 권한 부여 검토
탈북여성 및 탈북민 가족 맞춤형 서비스 지원	통일부,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인권보호교육 등 지원 • 탈북여성 맞춤형 가정폭력·성폭력상담 지원 • 탈북민 가족재결합 프로그램(가칭) 운영 • 탈북여성쉼터 지원

□ 협력방안

- <하나센터>에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 적응을 돕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제공
 - 통일부는 수요조사 및 운영 협조
- 사회 부적응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예술치유프로그램 제공
 - 통일부는 수요조사 및 대상선정(매칭)과 운영 협조

사. 폭력 및 중독문제에 대한 예방 및 치유

□ 현황 및 진단

- 최근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와 낙오된 이들에 대한 안전망의 결여로 사회적 분노와 증오, 절망으로 인한 절망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또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음
 - 여의도 흥기 난동 사건, 오원춘 토막살인 사건 등과 같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묻지마 범죄’와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 등 장애인과 어린이, 여성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실직, 빚 등으로 한계상황에 봉착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절망적 은둔자들이 절망적 상황에 대한 분노를 특정 집단·군중을 대상으로 표출한 것으로 해석됨⁹⁴⁾
- 범죄·폭력 가해자에 대한 단속적 처벌·징계 위주의 기존 대책에서 벗어나 그들의 근본적인 태도와 심리상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접근방법이 요구되는 시점이며, 특히 ‘예술치유’나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범죄·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고 억눌린 분노와 절망감을 표현·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94) 양혜원·김혜인(2012). 2013 문화예술트렌드 분석 및 전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최근 법무부는 <수형자 교정교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수용자의 인성을 변화시켜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실질적 교정교화프로그램 시행 필요함에 따라 학과교육, 정서교육, 특정범죄 재범방지교육 등 기존에 잘 운영된 교육은 수혜자가 확대되도록 지속 추진하고 수형자 내면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인성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등 교정교화프로그램의 실질화를 추진하고 있음 (2013.10.28 시행)⁹⁵⁾
- 한편 가정폭력은 가출, 가정파탄 및 폭력성의 세습 등을 가져오는 근절되어야 할 범죄임에도 사회 통념 상 다른 형사법규 위반보다 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이 낮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가정 내에서 발생하여 음성화된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상으로 살인, 패륜 등의 강력범죄를 범하여 가해자로 전락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폭력의 악순환이 심각한 상황
- 보건복지부는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 4대 중독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응을 위해 <중독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법무처 중독대책 논의기구를 설치하여 종합적 중독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협력방안
 -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제작
 -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중인 폭력 피해자 및 동반자녀에 대해 예술치유 전문인력 및 예술치유프로그램의 제공
 -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는 수요조사, 대상시설의 선정(매칭) 및 운영 협조
 -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도박중독, 인터넷 중독자들에 대한 치료를 위해 문화예술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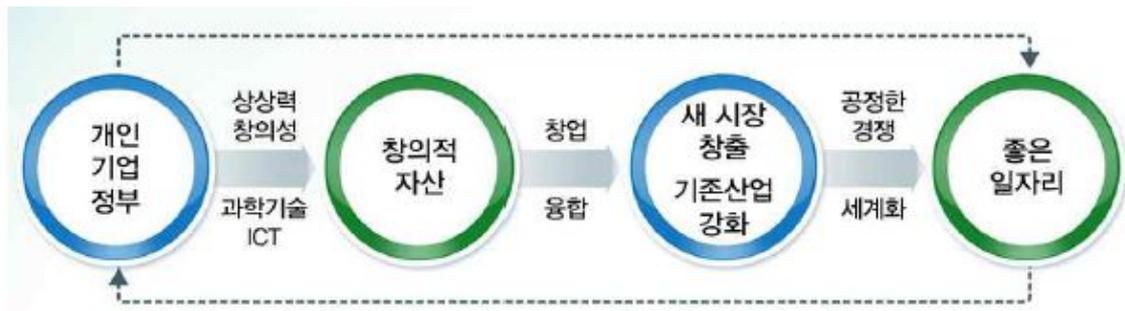
2. 산업 및 고용 분야

- 새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창조경제 실현계획 -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

95) 법무부“제68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개최- 희망교정, 교정교화의 새길을 개척하다” 보도자료 참조. 2013.10.28

- 동 계획은 그간 모방·응용을 통한 추격형 성장에서 벗어나 국민의 창의성에 기반한 선도형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우리의 강점인 과학기술, ICT 역량 등을 활용한 한국형 창조경제 추진전략을 수립
-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를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전략’으로 정의하고 창조경제 생태계를 다음의 <그림>과 같이 제시함

<그림 4-8> 창조경제 생태계



- 「창조경제 실현계획 -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에서는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비전으로 ①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② 세계와 함께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③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휘되는 사회구현 등 3대목표와 ①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되는 생태계 조성 ②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③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④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⑤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 ⑥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창조경제문화 조성 등 6대 전략을 제시함
-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는 ‘인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상상력, 비판적 발상을 통해 창조된 산물’이라는 점에서 창조경제에서 중요시되는 ‘창의성, 창조성, 상상력’은 ‘문화’의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영국 등에서는 90년대부터 문화콘텐츠산업을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라고 명명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왔으며, 우리나라를 위시한 각국에서도 ‘문화적 요소’를 활용한 지역재생, 지역개발사업 등을 ‘창조도시’ 또는 ‘문화도시’ 사업으로 명명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추진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에 해당하는 ‘문화콘텐츠산업’과 ‘문화예술’, ‘문화정책’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는 점에서 콘텐츠산업 활성화 및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협업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
 - 특히 2013년 디지털콘텐츠 관련 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됨에

따라 콘텐츠산업 관련 업무 상호협조 필요성이 더욱 커짐

- 한편 2013년 7월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콘텐츠산업 진흥 계획>에 따르면 주요 협업과제를 다음의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어 향후 이러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협업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음
 - 다만 이하에서는 이중에서도 특히 협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큰 과제들을 중심으로 논의 하도록 함

<표 4-10> <콘텐츠산업 진흥계획>에 규정된 부처간 협업과제

구분	주요 협력사항
1	·콘텐츠 펀드 조성 및 운영 연계
2	·C-P-N-D 연계 협력 (모바일 게임 상생협약체 등)
3	·콘텐츠코리아 랩 연계 추진
4	·창의인재 양성 협력
5	·융복합 콘텐츠 기술 공동개발 및 활용
6	·해외진출 공동지원 (한중 '평요우(朋友) 프로젝트(가칭)' 등)
7	·콘텐츠 제작시설(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빛마루') 공동운영
8	·표준계약서 확산 공동 노력

자료 :미래창조과학부.(2013). 콘텐츠진흥계획 발표 보도자료.

가. 융합산업 및 신산업 발굴·육성 :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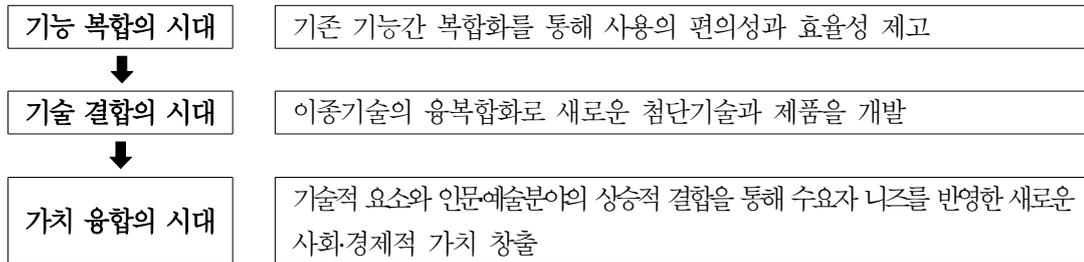
□ 현황 및 진단

- 21세기 세계경제는 융합혁명의 시대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음
 - 기존에 사용되던 기술 융합이란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기존 기술 간의 결합을 통한 신 기술을 개발 또는 기술 컨버전스를 통한 급진적 혁신'을 의미(Kodama, 1992)⁹⁶⁾하며, 산업융합이란 이종(異種)·다종(多種) 산업 간의 제품 및 서비스가 상호 결합하여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산업융합은 이종(異種)기술산업간 융합을 거쳐 인문·예술 등 다분야 융합으로 발전하면서 21세기 세계경제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특히 최근 기존산업의 성장 정체, 기술적 여건 성숙, 소비자 니즈 다양화 등으로 산업융합은 글로벌 메가트렌드로 가속화되고 있음⁹⁷⁾

96) Kodama, F.(1992). Technology fusion and the new R&D, Harvard Business Review, 70-78.

97) 관계부처합동.(2012). 제1차 산업융합 발전 기본계획(2013~2017). 지식경제부

<그림 4-9> 융복합의 시대별 발전양상



자료 : 관계부처합동.(2012). 제1차 산업융합 발전 기본계획(2013~2017). 지식경제부

- 기술과 인문·예술분야와의 융합 활성화를 위해 2012년 지식경제부 주도로 기술인문 융합의 쌍크탱크인 <기술인문 융합창작소>를 개소했으며, 2012년 6월에는 지식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기술인문 협력 MOU가 체결됨
 - 동 계획에서는 산업융합 포럼 및 세미나를 통한 소통 채널 활성화와 POSTECH의 인문기술융합연구소, KAIST의 문화기술대학원, 서울대 차세대 융합기술원, 연세대의 미래융합기술연구소 등 융합연구기관과의 연계를 제시
 - 그러나 다음의 <그림>에서 보듯이 <기술인문 융합창작소>가 처음 설계될 때부터 문화예술계나 인문학계,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와의 문화체육관광부 등과의 연계 또는 협력 구조에 대한 고민이 미흡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까지도 <기술인문 융합창작소>는 문화예술계와의 긴밀한 교류나 협력보다는 과학기술계와의 협업을 중심으로, 별도의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문화예술계나 현장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연구나 기술의 개발이 이루어지기보다는 과학기술계 주도의 연구개발 또는 융복합이 이루어진다는 한계가 존재

<그림 4-10> 제1차 산업융합발전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기술인문 융합연구’ 연계조직 체계



자료 : 관계부처합동.(2012). 제1차 산업융합 발전 기본계획(2013~2017). 지식경제부

- 한편 현재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총괄·기획·조정, R&D사업 평가 및 예산의 배분·조정 등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담당하고 있음
 -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2013년 3월 기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개편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조직으로 위원장(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장)과 정부위원(13인)과 민간위원(11인)으로 구성
 - 특히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2013년 7월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를 통해 다부처 공동기획사업⁹⁸⁾ 추진을 위한 부처간 협업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함

<그림 4-11>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조직구조



자료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홈페이지(<http://www.nstc.go.kr/c5/sub3.jsp>)

- 관련하여 2013년 기준 국무조정실 주재로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 추진>이라는 협업과제가 추진되고 있으며 동 사업에서 부처간 역할은 다음과 같음

98)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이란 특정한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개 이상의 부처가 초기 기획단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다부처특위는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제안에서부터 대상사업 선정, 참여부처의 사업 이행사항 점검, 부처간 역할분담과 이견 조정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의 특별위원회임. 다부처특위는 미래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10개 관계부처 실장급(정부위원) 공무원이 참여하고, 학계, 연구계, 산업계의 인문·사회, 경제, 경영, 과학기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

- 협업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적 사업 추진은 각 부처에서 신시장 창출 가능 분야를 발굴하여 이를 의제로 제기하면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실질적인 부처간 협업이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임

<표 4-11> 국무조정실 주제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 추진> 협업과제에서 각 부처의 역할

구분	부처	역할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 대상 유망 성장동력 발굴 총괄 및 사업 추진계획 수립시행
협조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신시장 창출 가능 분야 발굴 지원 및 산업화 또는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예술체육 분야에서 과학기술ICT와 융합 통한 신시장 창출 가능 분야 발굴
	보건복지부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복지 서비스 정책과의 연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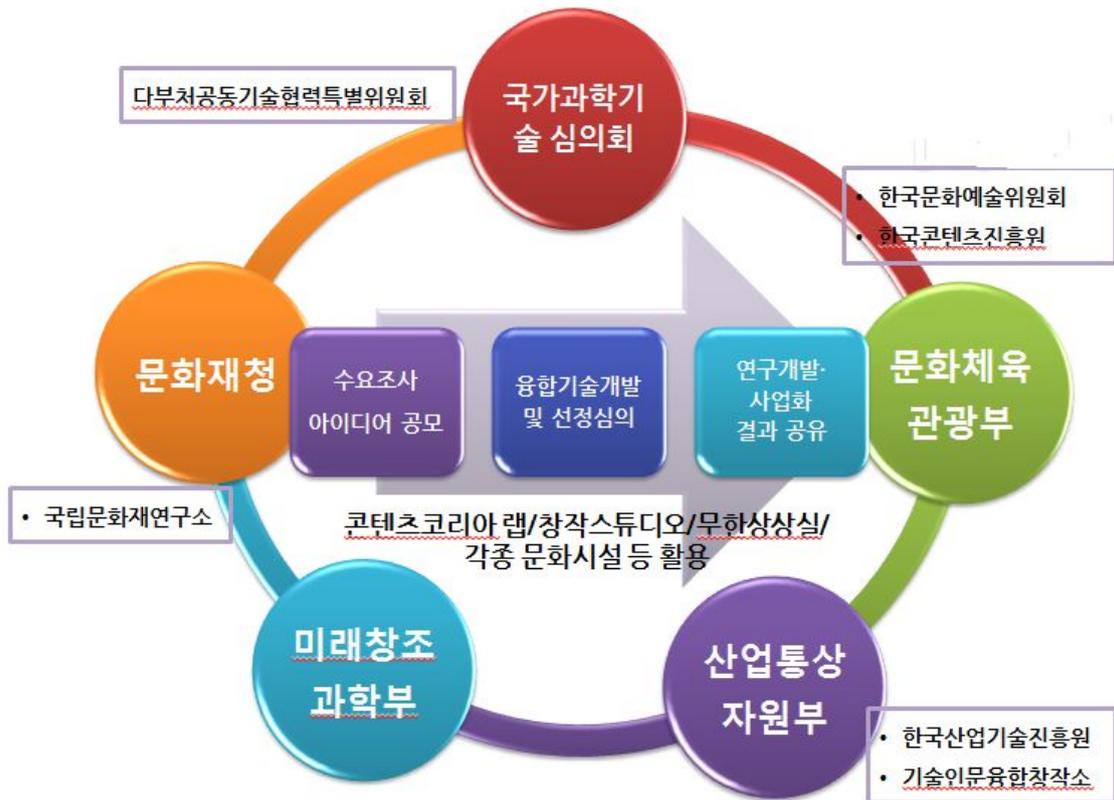
□ 협력방안

- 이종 기술, 이종 산업간 융복합은 새로운 산업의 창출과, 제품·서비스가 결합된 다양한 신시장 창출로 성장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기존 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예컨대 3D, 홀로그램 등 첨단기술과 공연예술의 접목을 통해 관객의 몰입과 체험을 극대화하는 아트 퍼포먼스 창작 지원이나, 영상·무대예술에 첨단 기술력을 활용한 오감체험 형태의 다양한 감성형 공연연출, 예술과 놀이, 예술과 치료가 융합된 새로운 놀이산업이나 예술치료, 장애인, 실버계층 등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기능성 콘텐츠,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에듀테인먼트 콘텐츠가 개발될 필요가 있음
- 국가에서 진행하는 융합기술 및 콘텐츠 개발 R&D에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나 예술단체·기관, 문화콘텐츠업계의 수요와 경험,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R&D 추진
 -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나 예술단체·기관, 문화콘텐츠업계의 경우 좋은 아이디어나 융합기술·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있어도 이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없음
 - 문화예술 및 문화콘텐츠 분야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융합기술콘텐츠 개발 수요조사> 및 <융합기술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할 경우 보다 현장수요에 적합한 연구과제를 개발할 수 있음
 - 또한 새로이 설립될 <콘텐츠코리아 랩> 이나 <무한상상실> 또한 융합기술 및 콘텐츠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
 -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 R&D 총괄부처로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인문융합창작소(atelier t*h)를 중심으로 함께 융합기술 개발, 선정, 관리에

참여

- 수요조사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수합된 연구개발안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융합기술 개발선정심의회>를 통해 연구과제를 선정
 - 선정심의회에는 과학기술, ICT 분야 인사 외에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산업, 인문학 분야 인사를 포함
 - 특히 과학과 예술의 중간지대에서 활동하는 예술스태프(무대기술, 조명, 음향, 특수효과, 촬영 등을 담당)를 연구과제의 개발 및 선정 과정에 필수적으로 참여시켜 이들이 가진 노하우와 수요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의 실제 추진 및 사업화는 보다 각 부처가 우위에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배분하여 추진하되, 인적자원·재정적 자원에 있어서의 협력
 - <미래 도전형 모형연구사업>,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프로젝트> 등과 연계 고려
 - e러닝, e트레이닝, 스마트콘텐츠와 연계한 차세대 융합콘텐츠 개발
 - 또한 연구개발 결과물의 DB화 및 공유를 통해 관련자들이 검색·이용할 수 있도록 함

<그림 4-12> 문화 활용 융합기술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



나. 융합형 창의인재 육성 :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 현황 및 진단

- 전문학과 중심의 교육체제, 입시 중심의 교육 등으로 인해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융합형 인재 확보에 한계
- 산업현장 수요와의 연계성 부족으로 다학제적 교육인력 모집 및 양성에 애로가 있으며, 특히 인문-공학 간 융합인력은 거의 부재
- 국무조정실 주재 협업과제에 이미 <산학연 협력 및 창의인재 육성>이라는 협업과제가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교육부의 방과후 수업 및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소규모의 시범사업 내용만이 제시되어 있어 보다 폭넓은 협력이 필요
 -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주재하는 협업과제에서 각 부처의 역할은 다음의 <표>와 같으며, 이 중 창의인재 육성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은 다음의 2개 사업에 불과함
 - 첫째, 방과후 학교를 통해 공연, 미술, 음악, 디자인 등 콘텐츠를 활용한 초·중등 <창의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 2014년 시범학교 10개교 운영 후 단계적 확대
 - 둘째,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창의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인프라 및 거점인 <콘텐츠 창의교실> 구축, 운영 : 2014년 3개소 오픈하고 이후 단계적 확대

<표 4-12> 국무조정실 주재 협업과제 현황(산학연 협력 및 창의적 인재육성)

협력과제	주요내용	협업부처
산학연 협력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미래부, 교육부
	• 대학 산학협력 기능강화 및 산학연간 인력교류 활성화	미래부, 교육부
	• 산학연협력 성과 공유 및 문화 확산	미래부, 교육부
	• 대학내 창업교육 및 창업활성화 지원	교육부, 중기청
창의적 인재육성	• 융합과학 수업모델 개발보급(미래부, 교육부)	미래부, 교육부
	• 과학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학교융합교육 지원 인력풀 확충	미래부, 교육부
	• 콘텐츠 분야 창의인재 조기 발굴과 체계적 육성을 위한 초·중등 <창의교육 지원 프로그램>, <콘텐츠 창의교실> 운영	교육부, 문체부

□ 협력방안

- 창의성·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하는 소규모의 사업을 넘어서서 보다 폭넓은 협업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 여기에는 문화예술 관련 융합수업모델의 개발과 보급, 문화예술교사의 연수체계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전문성 신장 및 문화예술 관련 융합교육 지원 인력풀의 확충, 그리고 교육과

정 개선을 위한 산학연 협력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초·중·고등학교 융합교육콘텐츠 공동개발 및 통합교육프로그램 추진
 -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창의재단),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인문기술융합창작소)와의 협력을 통해 창의성·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초·중등생에게 수학·과학·기술·공학·예술 등을 융합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교과서에 반영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에 수학, 과학, 기술, 공학 등을 융합한 커리큘럼을 추가하여 통합문화예술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
- 대학 및 대학과정에 융합과정 개설을 확대하고 학생들이 전공 과목 외에도 수학·과학·기술·공학·문화예술 등 타 분야에 대한 지식 또한 폭넓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특히 문화예술 관련 학과 학생들의 경우 필수전공학점(필수 전공이론 및 실기)의 비중이 커서 인문교양이나 타 분야에 대한 지식습득이 기회가 한정되어 졸업 이후 타 분야로의 변경이 곤란
 - 문화예술 관련 학과를 졸업한 모든 이가 해당 분야에서만 직업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타 분야 및 인접분야에서의 활동 또한 가능할 수 있도록 필수전공학점의 비중을 감소시키는 방안 검토
 - 한편 문화예술 관련 학과 과목의 경우 지나치게 실기 중심이거나 전문적이어서 이공계나 사회과학계 학생들이 수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타 전공 학생들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입문과정을 확대 개설하는 방안 검토
- e러닝, e트레이닝. 스마트콘텐츠와 연계한 차세대 창의인재 양성 콘텐츠 개발 및 보급 확대
 - 문화예술교육을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상의 제약요인을 고려하여 누구라도, 언제나, 편리하게 문화예술분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e러닝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을 확대할 필요

<그림 4-13> 융합적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부처간 협력체계



다. 문화 분야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 :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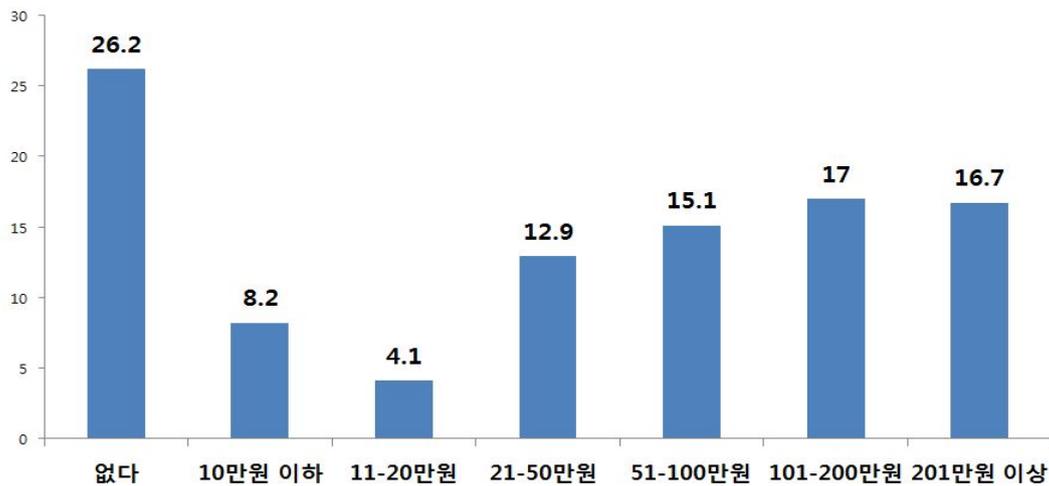
□ 현황 및 진단

- 저성장의 지속으로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문화예술분야에서도 1인 창업이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이 새로운 고용창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2013년 중소기업청의 조사에 따르면 1인 창조기업은 29만 6,137개로, 3년 만에 9만여 개가 늘어난 수치를 보임
 -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은 다양한 사업을 전개 중이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또한 2011년 제정됨
- 문화분야에서도 ‘캐릭터 마케팅 동화책 출간’으로 연간 1억 원의 매출을 올린 <지니비니>나 다양한 3D 시뮬레이션 개발로 인정받은 <3D RAY>와 같이 웹 기반 1인 기업이나, 클라우드 편당으로 출판예산을 충당하는 <북스피어>나 저가형 애플 솔루션을 개발한 <판다모코리아> 등 다양한 1인 출판기업, 인테리어 디자이너 1인이 운영하는 <디자인 스튜디오 모우리 (MouRi)>, 시각예술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된 큐레이팅 그룹 <더바인더스> 등도 나타나고 있음⁹⁹⁾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1인 출판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99) 김혜인.(2014). 2014 문화예술트렌드 분석 및 전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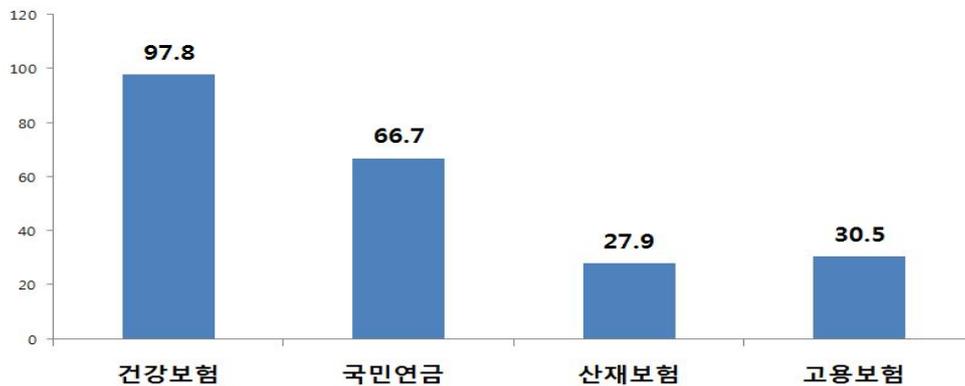
- 한편 문화예술계(예술인) 및 문화서비스 종사자(사서, 학예사, 문화예술교육사, 문화복지인력, 문화콘텐츠업계 종사자 등)들의 근로조건 및 환경은 타 분야 종사자에 비해서도 매우 열악한 상황
 - 대부분의 문화서비스 종사자의 고용형태는 비정규 계약직으로 일상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저임금으로 인한 빈곤 및 겹겹으로 본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 불공정계약에 노출

<그림 4-14> 문화서비스 종사자의 창작활동을 통한 월평균 소득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2 문화예술인실태조사

<그림 4-15> 문화서비스 종사자의 월평균 소득 및 4대 보험 가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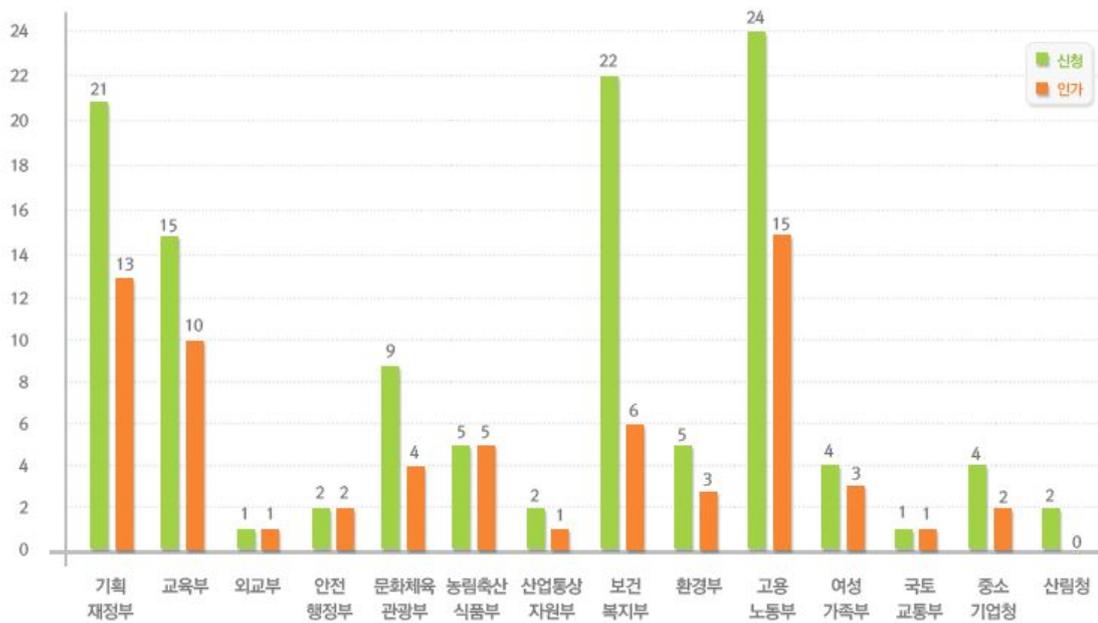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2 문화예술인실태조사

-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자생성과 지속가능성을 획득하기 위해 문화예술분야에서도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하고 있으나 정보 부족, 경영마인드의 부족, 예산·회계·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경험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림 4-16> 문화체육관광분야 사회적 기업 현황



<그림 4-17> 문화체육관광분야 사회적 협동조합 현황(2013.8월 기준)



자료 : <http://www.cooperatives.go.kr/>

□ 협력방안

-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경영지원센터>, 기획재정부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문화 분야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와 경영컨설팅 역할 강화 필요
 - 홍보 및 마케팅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 법률자문, 채용조달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 등
- 또한 문화 분야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의 채용조달을 위해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과 같은 중소기업청의 금융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매개 역할을 수행

<그림 4-18>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라. 가족친화여가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 현황 및 진단

-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가친화적 환경,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
 - 주 5일제가 정착기에 있고 대체공휴일제의 도입이 추진 중에 있으나,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92시간이며, 세계에서 근로 환경이 가장 열악한 국가 상위 10개국 중 3위¹⁰⁰⁾
- 근로자들이 마음놓고 필요할 때 일·가정 양립 제도를 이용하도록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이 진행 중

100) 헤럴드 경제 2013. 10. 25 뉴스 참조.

<표 4-13>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 내용

일·가정 양립 제도개선 및 이용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어린이집 확대(기재부, 고용부, 복지부, 국토부, 산업부) ○ 상장기업의 경영공시에 가족친화인증정보 자발적 공시(금융위) ○ 육아휴직 이용 활성화(고용부) ○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여가부) ○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등 유연근무제도 활성화(안행부, 고용부, 기재부)
가족친화 인증제도 내실화 및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공공기관은 2017년까지 의무적으로 가족친화 인증제 참여(안행부, 기재부, 총리실) ○ 기업대상 정부지원 사업 선정기준에 기업의 일·가정양립 수준 반영(산업부, 중기청 등 각 부처) ○ 투융자 금리 우대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발굴(전부처) ○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가족친화 인증기준과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고려한 가족친화 지수 마련(여가부)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가족친화경영대상 시상(여가부) ○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및 발표(여가부) ○ 일·가정 양립 아젠다 시행 시기별 맞춤형 홍보 및 연말에 종합 성과 보도(대국민 여성정책 성과보고대회) (여가부)

□ 협력방안

- 여성가족부가 추진 중인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에 있어 가족친화 인증기준 및 업종별·규모별 특성 고려한 심사기준에 있어 여가친화적 환경 조성 부분을 반영

<표 4-14> 여가친화인증제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가족친화제도: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 인증 주체 : 여성가족부장관 ○ 인증 대상 : 기업,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 ○ 인증기준 : 운영요구사항,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중소기업은 6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인증 부여 ○ 사업추진체계



○ 인증유효기간 : 3년(2년 연장 가능)

○ 인증효력 및 기대효과 : 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 인증표시 활용·홍보를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정부사업 참여시 인센티브 부여, 정부포상, 시상식 등)

○ 인증표시



○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여가친화기업인증제> 도입에 있어 고용노동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조

- 근로자의 휴가비 적립 등을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한국형 체크바캉스)의 도입 시에 여가친화기업인증제와 연계

- <여가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관련 고용노동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조

○ 직장인 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협력

- 문화체육관광부는 <직장인 문화예술동호회>에 대한 공간 및 기자재 지원, 예술강사 지원,

배달강습 프로그램을 지원

- 고용노동부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한 수요조사, 대상기업선정, 운영 협조

3. 문화교류 및 외교 분야

가. 재외교육문화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문화외교 활성화

□ 현황 및 진단

- 현재 재외교육 및 문화지원사업은 여러 부처, 여러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유사중복,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 또한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교육진흥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등에서 편찬한 여러 가지 교재로 인한 혼란 가능성(김영, 2006)¹⁰¹⁾이 제기되기도 함
- 재외 한국문화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으로서 국제문화교류활동을 수행하고 해외문화홍보의 거점 역할을 담당함¹⁰²⁾
 - 1979년 최초로 일본 동경에 한국문화원이 설립된 후 2013년 기준 재외 한국문화원 26개소, 해외문화홍보관 10개소가 설립·운영되고 있음(31개국, 37개소)
 - 운영프로그램은 문화원별로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이미지 제고, 문화행사 등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밀착성 증대, 현지문화예술단체와의 공동사업 등을 통한 주재국과의 네트워크 강화 등으로 구분됨
 - 2008년 재외한국문화원 운영평가보고서(2009)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한국어를 포함한 강좌(51.26%), 공연/전시/영화관람(17.48%), 한국정보 및 자료이용(13.87%) 등으로 나타남¹⁰³⁾

<표 4-15> 재외 한국문화원 설립·운영 현황

한국문화원	나이지리아, 뉴욕, 독일, 동경, 러시아, 멕시코, 베트남, 벨기에, 북경, 브라질, 상해, 스페인, 아르헨티나, 영국, 오사카, 워싱턴, 인도, 카자흐스탄, 태국, 터키, 폴란드, 프랑스, 필리핀, 헝가리, 호주, LA
문화홍보관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스웨덴, 싱가포르, 이란, 이집트, 이탈리아, 캐나다, 홍콩, UAE

101) 김영(2006), LA지역 한글학교의 한국어 교육 방안,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2) 한국해외문화홍보원 홈페이지(<http://www.kocis.go.kr/overseas.do>)

103) 채지영.(2012). 한류 확산을 위한 재외 한국문화원 활용 연구. 예술경영연구 22 : 239-265.

- 한국학교는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해외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국내 연계 교육, 해외 동포 자녀들에 대한 현지 적응 교육,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재외국민 자녀에 대한 모국 이해 교육에 초점(박채형, 2011)¹⁰⁴⁾
 - 2010년 1월 기준 재외한국학교는 일본,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15개국 30개교가 운영중(교육과학기술부, 2010)¹⁰⁵⁾
- 한국교육원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과 그 밖의 교육활동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재량에 의해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보급,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한국인 유학생의 상담 및 지도,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활동, 해외 교육정보의 수집 및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및 전부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박채형, 2011)
 - 2010년 1월 현재 재외 한국교육원은 일본지역 18개원, 미국지역 6개원, 러시아지역 4개원, 기타지역 11개원 등 14개국에 총 39개원이 운영중(교육과학기술부, 2010)¹⁰⁶⁾
- 세종학당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고 교육하는 기관
 - 운영 목적은 문화 상호주의에 입각한 문화 교류 활성화,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용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대표 브랜드 육성 및 확산 등
 - 2007년 기준 3개국 13개소에서 2013년 7월 기준 51개국 117개소로 확대
 - 지원사업 내용은 세종학당 교육과정(단계, 시간, 내용 등) 표준화 및 표준교재 보급, 온라인 한국어 학습 시스템 ‘누리-세종학당(www.sejonghacdang.org)’, 한국어교원 자격 향상 및 해외 파견, 세종학당 문화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KF)은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 목적사업은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지원 및 참가, 국제교류를 목적

104) 박채형(2011), 재외 교육기관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역사적 고찰 -미국의 한글학교·한국학교·한국교육원을 중심으로-, 교육사상연구, 25(1): 73-94

105) 교육과학기술부(2010), 재외한국교육원 및 재외한국학교 현황(2010.1월 기준),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25571>)

106) 교육과학기술부(2010), 2010년 재외교육기관현황, 코리아넷 (<http://www.korean.net/portal/PortalView.do>)

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 국외 한국연구의 지원 및 연구결과 보급,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제반활동,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친선의 증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민족적 유대감을 고취하기 위한 재외동포 관련 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 기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및 부대사업 등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6조)

-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외교부 산하의 정부 출연기관으로 정부차원의 대외무상협력사업 전담기관(대개도국 무상원조기관)
 - 1991년 4월 1일 한국국제협력단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우리나라 외 아시아(13), 아프리카(8), 중남미(4) 등 28개국에 28개 사무소(주재원 16개소) 운영중
 -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들의 경제 사회발전 지원을 통해 국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한국국제협력단법 제1조)하기 위한 설립목적 하에, 국내초청연수 사업, 해외봉사단 파견(World Friends Korea), 해외재난긴급구호, 평화구축지원 사업, 민-관협력 사업,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사업 등의 프로젝트 사업 추진
- 국립국제교육원은 재외동포교육과 국제교육 교류/협력을 위하여 설립된 교육부 소속의 국가기간으로서 1962년 모국 수학생 지도를 위한 서울대학교 학생지도연구소로 출발, 1992년 국제교육진흥원으로 개편, 2001년부터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재외동포 교육전문기관
 - 글로벌 인재양성 및 교육한류의 중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 하에, GKS 국제체육 교류체계화, 재외동포 교육지원, 한국어 보급 강화, 유학생유치 및 관리 기반 조성, 국가 영어능력 평가시험(NEAT) 시행, 외국어 공교육 지원 확대 등 지원 사업 추진
-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 안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재외동포재단법 제1조)으로 1997년 설립된 외교부 산하 기관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자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 거주·생활하는 자(재외동포재단법 제2조)를 대상으로, 재외동포 교류사업, 재외동포사회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 및 홍보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
- 국무조정실은 <재외 문화교육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협업과제를 통해 각 부처 간 역할과 책임을 조정함으로써 해외에서의 문화교육 수요 증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한국어를 포함한 한국문화의 세계적 확산을 지원하고자 함
 - 협업과제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표 4-16> 재외 문화교육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유관부처의 역할

구분	부처	역할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어, 한국문화가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재외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할 필요 세종학당재단 설립 계기로 해외 한국어 보급 기본 계획 마련 등 한국어교육 확대 및 전문성 강화 지원
주관	교육부	한국교육원을 통해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실시 및 한국어 보급, 해외 초중등학교의 한국어 채택 지원, 한국의 유학 정보 안내, 한글학교 교육활동 지원 확대
주관	외교부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한 차세대 재외동포 대상 한글·역사·문화 교육지원 사업의 효율성 제고

<표 4-17> 재외교육문화 관련 소관부처 및 기관(대상별)

대상	소관 부처 및 기관	
외국인	일반	문체부-세종학당(표준교재, 교육과정, 전문교원)
	대학	외교부-KF(한국학과 설치 교수 지원), KOICA(한국어 봉사단원 파견)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한국어능력시험 주관)
	초·중·고(및 유학)	교육부-교육원(한국어채택, 유학생 유치)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원 파견)
재외국민, 재외동포	외교부-재외동포재단(한글학교 지원) 교육부-한국교육원(해외한국어 보급, 한글학교 교육활동 지원, 유학생 유치 지원 등)	

<표 4-18> 재외교육문화 관련 소관부처 및 기관(교육과정별)

교육과정	대상	소관 부처 및 기관
정규 교육과정	초·중·고(및 유학)	교육부-교육원 (한국어 채택, 유학생 유치, 한국어 교원파견)
	대학	외교부-KF(한국학 강좌운영 지원)
비정규 교육과정	외국인 일반	문체부 세종학당(표준교재, 교육과정, 전문교원) 외교부-재외동포재단(한글학교지원)
	재외국민, 재외동포	교육부-한국교육원(해외한국어 보급, 한글학교 교육활동 지원, 유학생 유치 지원)
	개도국 일반	외교부-KOICA(한국어 봉사단원 파견)
한국어능력시험	전체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

- 이후 국무총리실 주재 관계 차관회의를 거쳐 통합기관 명칭, 관련법령 개정, 통합근무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실무협의를 거쳐 38개 교육원 중 12개 문화원 통합, 22개 분원 전환 등을 합의함

- 한편 문화교류사업에 있어서도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유기적 협력과 자원의 공유가 필요하다
- 현재 외교부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함께 <쌍방향 문화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쌍방향 문화교류 사업은 문화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국가간 우호협력 강화 및 우리 국민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위해 우리나라와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지역의 문화예술을 국내에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사업임
- 또한 외교부는 2008년부터 선진문화국가 브랜드 구축 및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문화외교정책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외교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가 하면, 세계 91개국, 150명의 <재외 명예영사>를 통해 재외국민 보호, 한국 홍보, 주재국과의 협력 강화 등 민간외교사절로 기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외 명예영사를 한국에 초청하여 한국 소개 세미나, 산업 및 안보현장 시찰, 한국 전통문화현장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여 우리나라의 발전상과 역사 및 문화를 몸소 체험하도록 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문화, 예술, 산업, 관광, 체육 등 세계 각국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일정기간 한국에 체류하면서 관련 분야의 교류와 지식을 넓히는 문화 레지던시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동반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및 학생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개도국 예술대학 및 음악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술교육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이후 개도국 문화예술영재들을 초청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개도국 문화꿈나무 아트캠프>를 개최하기도 함

□ 협력방안

- 재외 한국문화원과 한국교육원의 효율적 운영
 - 중복 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공간 통합 및 기능 협력 강화
 - 일본, 미국 등 인접에 설치된 한국문화원과 한국교육원을 중심으로 공간 통합, 한국어 교원 연수회 공동 개최 등 협력 확대
 - CIS, 남미, 일본 등 국가에 설치·운영되는 한국문화원과 한국교육원은 교육과 문화 기능을 상호 보완
- 한글학교·세종학당 중복방지 및 해외 한국어 보급체계 효율화
 - 세종학당재단, 재외동포재단, 국제협력단(KOICA) 등 국외 한국어 보급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방안 마련
 - 관계기관 간 협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세종학당·한글학교 대상 정부지원 중복방지 대책 마련

- 한국어 보급 전략 수립 및 보급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해외 한국어 보급 효율화방안’ 수립
- 표준 프로그램 및 교재 발굴에 대한 기획 단계부터의 협력
- 주한 외국인, 외교관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및 프로그램의 공동 추진
- 수교기념 행사사업, 재외공관 행사, 공공외교 행사사업, 한류의 세계화 및 한국문화와 가치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국제행사 등의 개최와 관련 협력
-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등 유네스코 차원의 협력
- 문화교류와 관련된 지식과 정보의 공유
 -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가 가동하고 있는 다양한 민관네트워크를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정보의 공유로 문화교류협력의 효과성 제고

나. 한국스타일 콘텐츠로 세계 진출 및 한식세계화사업 재정비

□ 현황 및 진단

- 콘텐츠 수출은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며, 타 분야에 대한 파급효과를 통해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
 -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콘텐츠 수출 비중은 크지 않으나, 고성장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에 긍정적 영향
 - 콘텐츠 수출비중은 ‘05년 0.46%, ‘12년 0.8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 규모도 큰 폭으로 성장
 - 콘텐츠 수출은 전자, 자동차, IT 등 소비재 수출을 견인하며, 한국제품에 대한 선호를 증가시켜 무역을 촉진
 - 문화상품 수출 100달러 증가 시 소비재 수출 412달러 증가(수출입은행, 2012)
 - 기업의 51.9%가 한류 확산이 기업의 매출 상승에 실질적 도움(대한상의, 2012)
 - 한류를 통해 관광·패션산업 및 제조업 등 관련 산업의 성장에 긍정적 파급효과
 - 2012년 방한 관광객 1,114만명(‘11년 980만 명), 일본 32%, 중국 26% 등 한류가 형성된 아시아 국가의 방한 관광객이 전체의 81%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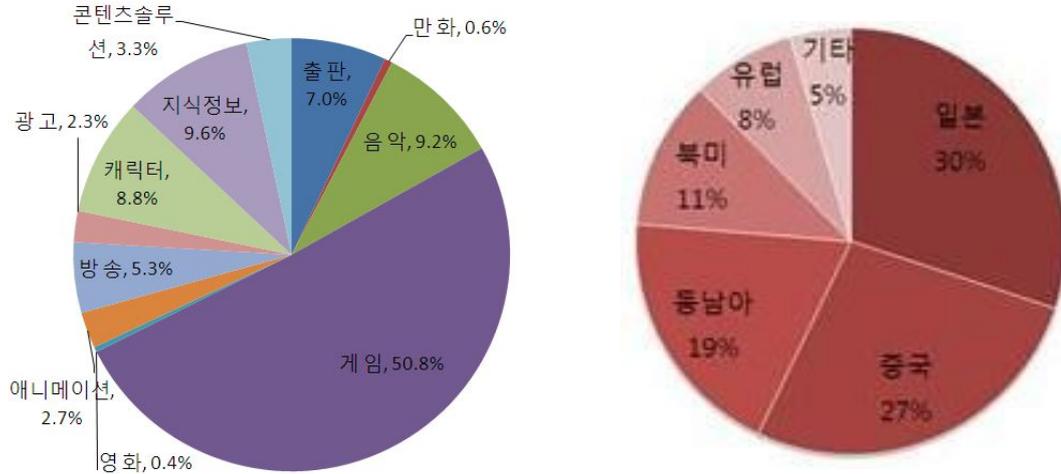
<그림 4-19> 산업별 한류의 매출상승 효과



자료: 콘텐츠 해외진출 확대 방안(2013), 관계부처 합동, 대외경제장관회의 '13-09.12(의결안건)

- 인터넷 기반 글로벌 플랫폼과 스마트 기기 등을 통해 국내외 콘텐츠를 누구나 손쉽게 이용·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세계 콘텐츠 시장의 규모 및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액 급증
 - 세계 콘텐츠시장은 2012년 기준 1조 6,385억불로 경제성장률(2.3%, IMF) 보다 높은 5.1% 성장, 한국 점유율은 2.8% 수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저조(북미 4.0%, 유럽중동아프리카 3.6%, 아시아태평양 6.6%, 라틴아메리카 13.1%)
 - 2012년 콘텐츠 수출액은 48억불로 전년대비 11.6% 증가했으나 분야별, 지역별 편차가 심함.
 - 산업별로는 게임이 24.7억불(5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음악 4.5억불(9.2%), 캐릭터 4.3억불(8.8%), 출판 3.4억불(7.0%) 순(2012년 기준)
 - 지역별로는 일본이 12.5억불(30.1%)로 가장 크고, 중국 11.1억불(27.0%), 동남아 7.9억불(19.0%) 순(2011년 기준)

<표 4-19> 장르별('12년) 및 지역별('11년) 콘텐츠산업의 수출비중



자료 : 콘텐츠산업통계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1; 2012)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리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013년 7월 문화예술 및 한류 콘텐츠 해외진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문화예술 해외시장 정보 공유 및 공동 홍보 마케팅, KOTRA 해외무역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사무소와 연계한 한국 문화예술의 해외진출 확대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함
- 한편 안전행정부는 우리의 전통자원을 보존하고 자랑스러운 유산을 많은 사람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전통기술에 대한 융합 문화상품 개발 등 연계협력사업을 추진 중
 - 안전행 정부는 2010년 <향토자원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우수 전통기술에 대해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공방설치, 기계 설비 구입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디자인 상품을 개발하는 등 사업화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개발이 완료된 융합상품들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공기관의 기념품·선물용품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국립박물관 문화상품점 등에 입점시키고, 2013년 9월에는 옷칠, 금속, 도자, 목기 등 한국전통기술 14개 분야 31명의 장인들이 참가한 <동경국제선물용품전>에 참여하여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기도 함
- 한식세계화 사업은 한류열풍을 계기로 한식의 우수성을 세계에 홍보하여 우리 음식 및 식문화를 해외에 전파하고 농식품 수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작(조윤희, 2013)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재원으로,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를 법적근거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재단법인 한식재단,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이 사업 수행
- 뉴욕시민 대상 2011년 정부 설문조사 결과, 한식 인식도는 2009년 9%에서 2011년 41%로 급증, 해외진출 한식당 4곳에 2011년에 최초로 미슐랭 스타 획득, 해외진출 한식업체 수는 2008년 109개소에서 2011년 210개소로 증가(농림축산식품부, 2012.6.1. 보도자료)

<표 4-20> 한식세계화사업 2012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예산액	집행액
인프라 구축	5,160	6,348
전문인력 양성	4,690	4,252
한식당 경쟁력 강화	6,000	6,152
한식 홍보	6,099	7,198
합계	21,949	23,95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2013.3. 조윤희(2013)에서 재인용

- 그러나 여전히 한식 음식 경쟁력 미흡(2012년 4월 현재 12개국 중 7위, C등급), 해외 한식당에 대한 국내산 식재료 공급체계 미비, 기 추진된 사업내용의 부처간 유사·중복, 일부 사업의 계획 부실 및 중단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 문제(조윤희,2013)가 제기됨
 - 한식세계화 사업은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한식세계화추진단이 정책 자문기능, 한식재단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이 사업을 시행하는 등 사업 추진 기관의 다원화로 인한 기능 중복 우려
 - 농림축산식품부 내 한식원형복원사업은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초기반연구사업과 일부 유사·중복 소지
 - 국비 50억원과 민간투자 100억원을 유치하여 뉴욕 맨하탄에 세계적 수준의 고급 한식당을 개설하기위해 2011년 신규 추진된 「플래그쉽 한식당 개설사업」이 민간투자공모 절차 진행과정에서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사업 종료, 해외에 한식당을 신규로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개설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한 해외한식당 개설사업(2009-2010) 선정업체 일부의 사업 포기 등 개설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미흡으로 인한 예산운영 비효율 및 인력·조직 낭비의 문제가 제기됨
-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 6월 우리 고유 음식을 이용하여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식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다음의 내용에 대한 협력을 진행하기로 함

- 농림축산식품부의 종가음식 및 한식 육성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고택종택 지원사업을 연계한 음식관광상품 발굴·육성 : 고택종택과 연계한 종가음식 체험프로그램 운영, 종가음식 산업화를 위한 실용화모델 개발, 전통음식 명인 및 생산현장 연계 체험 음식관광 상품 등 발굴
 - 한국음식의 국내외 홍보 강화 : 주요 국제행사 및 문화교류를 활용한 음식이벤트 공동참가, 한류관련 이벤트(K-Food in K-Pop)와 연계한 한국음식 홍보,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음식관련 국제컨퍼런스 개최, 해외 문화기관을 활용한 한식문화 홍보(해외 한식강좌 실시 및 홍보 등) 협력
 - 음식관광 인프라 개선 : 음식관광 전문인력 양성, 미술랭 레드가이드 발간 추진 및 맛 지도 제작, 메뉴판 표기 등 식당문화 개선사업, 기타 한식 콘텐츠의 관광자원 기반 구축 등 추진
- 외교부 또한 한식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외국인 대상 한식경연대회인 <K-FOOD 월드페스티벌>을 2013년 처음으로 진행함
- 각국을 대표하는 예선전 우승자들은 한국에 방문하여 <K-FOOD 월드 페스티벌>에 참여하고 방문시간 동안 서울 투어, K-FOOD 캠프 등의 기회를 통해 다양한 한식과 우리 식재료를 경험할 기회를 부여받게 됨

□ 협력방안

- 콘텐츠 산업의 부가가치 및 성장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분야별 편차가 심한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수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문체부와 미래부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
- 신흥시장(남미, 중동, 아프리카)을 대상으로 산업별 진출을 위한 현지 시장 조사 강화, 바이어 발굴, 네트워크 형성 및 한국 콘텐츠 공동홍보관 운영, 정례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인지도 제고
 - 성숙시장(아시아)의 한류 다양성 및 지속 가능성을 위한 쌍방향 교류·협력 확대, 특히 일본과의 역사문제, 중국의 문화보호 정책 강화 등은 대일, 대중 의존도가 높은 콘텐츠 수출에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아시아-태평양 방송연맹(ABU) 네트워크 등을 활용, 공동제작 등 협력 활성화 필요
 - 전략시장(북미, 유럽)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네트워크 및 협업 강화 및 창조형 차세대 콘텐츠 인력 양성 및 현지투자 확대를 통한 선진시장 진출 기반 마련
 - 수출기업과 콘텐츠 기업 간 연계 및 연관 산업 분야 간 협업·융합 상품 개발 지원(코리아 브랜드&한류상품박람회, 패션-문화산업 간 융합콘텐츠 개발 지원), 콘텐츠코리아 랩 및

글로벌 창업지원센터 등 맞춤형 컨설팅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을 통한 해외 현지 창업 활성화 지원

- 부처간 해외 진출 연계를 위한 범 부처 지원 협력체계 구축(문체부, 미래부, 산업부, 외교부, 기재부)
 - 콘텐츠, 유통 플랫폼, 제조 및 서비스업, 관광 등 관련부처 및 기관 간 해외 진출 협의회 등 협력체계 구축(문체부: 콘진원, 관광공사, 영진위, 한류재단; 미래부: KISA, RAPA; 산업부: KOTRA; 외교부: 국제교류재단)
 - 각 부처 유관기관 공동 글로벌 시장조사 및 통합정보 제공, 정보교류, DB 연계를 위한 협의회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콘텐츠 기획·개발 단계부터 제작 및 유통까지 현지시장 중심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원
 - * ‘뿌까’는 제품 구상단계에서부터 해외시장 진출을 고려하여 세계적으로 통용 가능한 캐릭터 이름, 언어, 스토리 등을 기획하여 약 150개국 진출
 - * ‘뽀로로’는 해외진출 초기단계부터 해외전시회를 통한 홍보 실시

<표 4-21>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개선방안

	현재	개선 방향
시장 전략	· 시장세분화/권역별 진출전략 부재 · 국내 시장 중심 · 콘텐츠 단독 진출	· 지역별 차별화된 접근 전략 · 현지 시장 중심 · 타분야와 콘텐츠기업 간 연계 진출
지원 방식	· 부처 간 지원체계 협력 부족 · 공급자 중심 지원	· 부처 간 협력으로 통합지원 · One-Stop 수출 서비스 제공
저변 확대	· 일방 비즈니스 중심으로 반한류 등 형성	· 쌍방향 교류협력을 통한 콘텐츠 저변확대

자료:콘텐츠 해외진출 확대 방안(2013), 관계부처 합동, 대외경제장관회의 '13-09.12(의결안건)

- 한식의 세계화와 관련해서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사업계획 구체화 단계에서부터의 효율적인 협업 체계 구축 및 관련 사업간 계열화 등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여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기 보다는 사업수요 및 필요성, 현지시장의 트렌드 조사·분석을 위한 부처간 협력 및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 안목에서의 사업선정 및 추진 필요
 - 특히 한식세계화를 위한 한식당 디자인 표준 모델 및 한식 홍보관 매뉴얼 개발, 한식 메뉴 책자 발간 등 인프라 구축, 한식 조리 전문 인력 양성 및 표준화된 교육과정 개발 등 인력

양성 측면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됨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식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재외 한국문화원, 외교부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각 부처가 보유한 네트워크와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활용할 필요

다. 문화융성과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교류 추진

□ 현황 및 진단

- 1989년부터 시작된 남북한 교류협력은 북핵문제 및 천안함 격침, 연평도 사건 등 북한의 도발로 인한 갈등 국면을 겪으면서 위축. 그러나 새정부 출범과 함께 통일부는 남북한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및 실질적 통일준비를 토대로 한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중점과제를 제시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추진과제로는 인도적 문제 실질적 해결, 당국 간 대화추진 및 합의이행 제도화, 호혜적 교류협력, 개성공단 국제화,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기여 등
 - 2013년 통일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호혜적 교류협력의 질서있는 추진 차원에서 문화융성과 민족동질성 회복 등 민족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순수 사회문화교류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학술, 종교, 체육 분야로 교류를 확대 예정
- 정치논리나 경제논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사회문화교류협력은 민감한 남북관계 변화의 영향변수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족 동질성 회복, 평화통일 기반 구축, 민간의 중재 역할 등 남북관계의 평화적 관리 및 통일과정에서의 신뢰구축에 중요한 역할(전미영, 2012; 현대경제연구원, 2013)
 - 국민의 64.3%가 남북한 사회문화교류가 남북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2012, 서울대통일평화연구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사회문화협력은 정치적 상황에 크게 좌우되어 온 특징(현대경제연구원, 2013)
 -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한 2000년대 들어 사회문화협력이 본격화되었으나, 남북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개성 만월대 공동조사사업, 겨례말 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신계사 복원 기념 남북 공동 법회 등 극히 일부 사업만 유지

<표 4-22> 남북간 사회문화협력의 분야별 성과와 한계

분야	특징	성과	한계
종교	2008년 이후에도 중단없이 접촉을 지속한 유일한 분야	교류의 지속성, 종교 건물의 복원 및 개축은 문화재 보존에 기여	교류의 비대칭성, 단순지원 및 방문 수준의 교류
체육	남북간 상호왕래가 가장 활발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방문건수와 인원수가 많음)	국제대회 공동입장으로 한민족 과시, 대규모 상호 왕래 추진	교류의 정례화 미흡
교육학술	역사 분야 등 상대적으로 이념 충돌이 작은 범위부터 협력 추진	역사 유적 발굴 UNESCO 등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	교육 분야의 협력은 단순 지원 수준
언론출판	남북한 공동 작업 진행 등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교류 추진	북한 주민 참여 유도, 민족 언어와 문화의 공감대 형성	저작권 교류 관련 제도적 장치 미비
문화예술	남북 사회문화협력 가운데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음	남북공동행사의 지속적 개최	공연교류는 일회성 이벤트에 그침, 영화교류는 초보적 수준
과학기술	북한의 우수한 인력이라는 인적 인프라 구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제도적 한계 내재	IT 분야의 성공적 협력, 인력 양성 효과	전략물자수출통제 등 제도적 제약

자료: 현대경제연구원(2013)의 표(p.5) 재구성

□ 협력방안

- 청소년 교류, 예술인 교류 등 긴장 완화와 민족 동질성 유지를 위한 민간의 역할을 재정적, 정책적으로 지원한 동서독의 사례(현대경제연구원, 2013)처럼 정치적 논리에 좌우되지 않고 일관되기 유지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문화예술교류정책의 추진 필요
 - 현재 종교, 체육, 교육학술, 언론출판, 문화예술 등에 국한된 남북간 사회문화교류협력의 분야를 보다 다양화하기 위한 통일부와 문화부 간 협업이 필요
 - 도시 간 자매결연 등 지자체를 통한 교류, 남북한 문화체육예술기관 간 교류 등 교류의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한 문화부의 인적·물적 인프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지원
 - 체계적이고 정례화된 사회문화교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문화협정의 추진
 -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이후 매년 600여 건의 사회문화교류가 이루어진 반면, 1986년 문화협정 체결 이후 6개월간 563건의 사회문화교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박영정 외, 2013)을 기억할 필요가 있음

4. 지역 및 일상 분야

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과 농촌 정주여건 실현을 위한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

□ 현황 및 진단

- 도시재생 및 농어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시책이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이들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는 형성되지 않음
- 먼저 국토교통부는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위주의 물리적 정비로부터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경제·사회 특성을 접목한 맞춤형 재생으로 도시정책의 새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함
 - 동 법은 정부가 도시재생전략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제시하고 주민, 지자체, 지역전문가 등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각종 H/W 및 S/W 재생사업을 종합한 재생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각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분산 지원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지자체가 수립하는 재생계획에 따라 연계 통합되고 관계부처간 협업으로 패키지 지원이 가능하게 됨
 -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융자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교육, 컨설팅 등 주민 재생역량 지원을 위한 도시재생지원기구(중앙), 도시재생지원센터(지방)을 설치하도록 함
- 2013년 6월 제정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주도로 농어촌마을의 기반정비, 노후 주택개량, 슬레이트처리, 독거노인 등 공동생활형 주택,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의 통합적 실시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이 추진 중임
-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노후한 산업단지 유희공간을 문화공간으로 리노베이션하고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운영 콘텐츠와 문화예술공간 기획·운영을 지원하는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 지역의 유희공간 및 기존의 문화·체육·복지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주민의 생활문화예술 및 문화동호회 활동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특색있는 지역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및 지역 자체가 고유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형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는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 지자체가 공공미술 부분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투어 프로그램, 커뮤니티아트, 작품 설치 프로그램 등을 발굴 지원하는 지역 맞춤형 공공미술 사업인 <공공미술 2.0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참고]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문화체육관광부)

- 기존 문화시설, 유흥시설을 리모델링 하여 주민의 생활 속 문화활동 및 발표 공간으로 활용
- 사군구 단위에 설치하는 거점형 센터와 읍면동 단위에 설치하는 생활권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
-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시설 조성 (작은도서관, 동아리 회합공간, 밴드연습실, 목공방, 댄스연습실, 전시장, 공연장, 작은영화관, 동네주방, 스포츠체육시설 등)

[참고] 문화예술교육버스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 시각예술, 공연예술, 영상미디어, 전통예술 등 콘텐츠와 시설장비 장착

□ 협력방안

-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복합서비스센터>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 <폐산업단지를 활용한 도심문화재생 사업>,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공공미술 2.0>, <문화예술교육버스> 사업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 제고
 - 지역적으로 동일한 또는 인접한 지역(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 관련 부처간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기획, 조성, 운영, 홍보, 컨설팅, 평가 등에 있어 협력하여 중복시설 투자로 오는 재정적 낭비를 예방하고 사업의 효과성 극대화
 -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시설의 S/W를 기획하고 담당할 기획·운영인력에 대한 양성, 배치, 파견, 기획, 운영과 관련하여 강점을 가지므로,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부처간·사업별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
 - 부처 합동으로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 및 사례전시회, 그리고 인센티브 사업비 등을 제공하는 방안 고려
-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범죄예방을 위한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Geo-Pro) 구축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미술 2.0> 사업을 연계하여 범죄다발지역에 범죄예방디자인(CPTED) 공동 추진
 - 미로와 같은 좁은 골목길을 밝은 벽화 그리기로 깨끗하고 쾌적한 산책길로 바꾸고, 범죄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에는 노란 대문과 조명, 비상벨을 설치하고, 골목 곳곳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디자인을 활용하여 범죄발생률을 낮추고 지역에 대한 애착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
 - 예술가·예술단체와 범죄전문가, 경찰 등과의 협력을 통해 기능적 측면 뿐 아니라 감성적·미학적 측면에서도 수준 높은 범죄예방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협력

[참고] 범죄예방을 위한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Geo-Pros)

- 방대한 범죄수사 데이터를 지리정보시스템(GIS)와 과학적 공간통계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 지도상에 범죄위험지역 등을 표현하는 시스템
- 범죄 유형지역시간대별로 범죄다발지역과 위험도를 Hot-Spot으로 표시하고 범죄에 대한 지역별시기별 맞춤형 치안 대책 수립, 범죄위험도에 따른 순찰차 배치 및 순찰 경로 선정 등

[참고] 범죄예방디자인(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범죄예방디자인이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동네에 대한 애착을 키워준 것으로 나타남

- 대중교통체계가 취약한 농어촌, 산간지역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버스> 활성화 제도 도입을 통해 문화시설 이용 접근성 제고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
 - 국토교통부 : <예약형 콜버스> 등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도입 법적근거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 : 수요응답형 콜버스 운영 관련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 셔틀버스나 소형마을버스 등 커뮤니티버스가 운행할 노선에 문화시설을 포함시켜 밤늦게 끝나는 공연 등으로 문화향유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배려

<그림 4-20>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제시한 농어촌지역 커뮤니티버스 모델

<p>Model 1 : 복합서비스센터 셔틀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중심지 복합서비스센터에 셔틀버스 운영 · 차량구입비, 운영비 등 지원 	<p>Model 2 : 군내 버스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내 버스 중 일부를 수요응답형 버스로 전환 · 차량운행 실적 등에 따라 운행손실 보전
<p>Model 3 : 마을기업 설립 지원(소형마을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 마을순환버스를 운행하는 마을기업 설립 · 차량구입 및 개조비 등 지원 	<p>Model 4 : 주민공동체 활용(자가용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자가용을 이용한 주민공동체 회사 설립 · 콜센터 설치 및 운행비 보조

나. 다양한 마을공동체 발전사업의 시너지 제고

□ 현황 및 진단

- 부처별로 다양한 마을 발전사업을 단발적이고 분산적으로 개별 추진하고 있음
- 안전행정부는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수입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는 <마을기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 전국에 약 1,200개의 마을기업이 지정되어 3,000~5,000만원의 사업비 지원

및 중간지원기관을 통한 경영컨설팅과 교육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음

- 또한 2009년부터 <동네마당 조성사업>으로 시작된 <희망마을 사업>은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생활공간 개선, 사회복지시설 확충, 수익증진 사업 등을 통해 복합생활공간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 기준 총 58곳이 조성됨¹⁰⁷⁾
- 안전행정부는 <2013년 업무계획>에서 중앙부처간 협의체, 지자체 부서간 TF, 마을단위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한 마을 관련 사업의 효율적 종합 추진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시함
 - 또한 인구산업·성장잠재력 등을 반영한 마을 진단지표를 개발하여 사업 대상지 선정·평가 및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 등에 활용하고 마을사업 추진단계별 표준운영방안을 마련·보급할 것을 제시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이 가지고 있는 각 마을의 특색있는 자원을 발굴하여 마을주민 주도형의 특색있는 마을을 만들어 마을발전의 원동력으로 만들어나가는 <색깔있는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현장활동가와 광역단위 활성화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주민 스스로 자원발굴, 발전계획을 마련하는 현장포럼을 실시할 것을 제시함¹⁰⁸⁾
 - 또한 빈집슬레이트 처리, 공동생활 홈 및 공동급식시설 조성 등 마을환경을 종합 정비하는 <농촌마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며, 농촌에 부족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을 위해 <농촌재능기부 운동본부>를 구성할 것을 제시함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사사업으로는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과 <농어촌 신바람 놀이문화사업> 등이 있음
 -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사업은 한국문화원연합회 주관으로 농산어촌, 임대아파트 단지 등 문화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자생적인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공동체 조성을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2011년 기준 총 25개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 중임.
 - <농어촌 신바람 놀이문화사업>은 사라져가는 농어촌 지역의 전통적인 두레문화를 되살리고 주민의 문화예술 복지 혜택을 향상시키고자 전국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강사, 악기 및 소품 공연발표 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한국전통연희단체총연합회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
 - 이 외에도 특색있는 지역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및 지역 자체가 고유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형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는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이 2013년부터 추진되고 있음

107) 선정된 지역에는 2억원의 특별교부세와 지방비 2억원이 투자됨

108) 농림축산식품부.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

□ 협력방안

-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림청에서 진행하는 <마을만들기>사업 관련 합동(패키지) 공모 방식 활용
 - 대상지역에 대한 정부재정투자가 최대의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사업대상 선정 및 추진과정에서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공모와 선정, 모니터링과 컨설팅 수행
- 안전행정부, 농림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림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마을만들기 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문화이모작 사업>, <생활문화공동체 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
 - 지역적으로 동일한 또는 인접한 지역(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 관련 부처 간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기획, 조성, 운영, 홍보, 컨설팅, 평가 등에 있어 협력하여 진행함으로써 중복투자를 최소화

다. 문화유산과 고도(古都)의 효과적 보존과 활용

□ 현황 및 진단

- 도시개발이나 지역개발에 있어 지역의 문화유산이나 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부처 간 사전조율체계나 협업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소중한 문화유산이 훼손되거나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나타남
-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개발과 진흥에 관련된 사업으로 문화의 거리, 문화지구, 문화관광거점도시, 문화관광벨트, 문화도시·역사도시, 문화관광권 및 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문화권형 특정지역 등 다양한 사업들이 있으나 이 중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해온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가 문화권 조성관련 사업임
- 문화권조성사업은 역사문화자산을 기반으로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권 조성사업>과 국토교통부의 <문화권형 특정지역> 개발사업으로 추진되어왔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주로 관광인프라시설을, 국토교통부는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문화재청은 역사문화자원의 수리, 정비, 복원 업무를 각각 추진해옴
 - 그러나 문화권 조성사업이 지역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부각시키기보다는 관광자원화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일부 사업의 경우 지역의 고유한 장소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사례를 야기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됨¹⁰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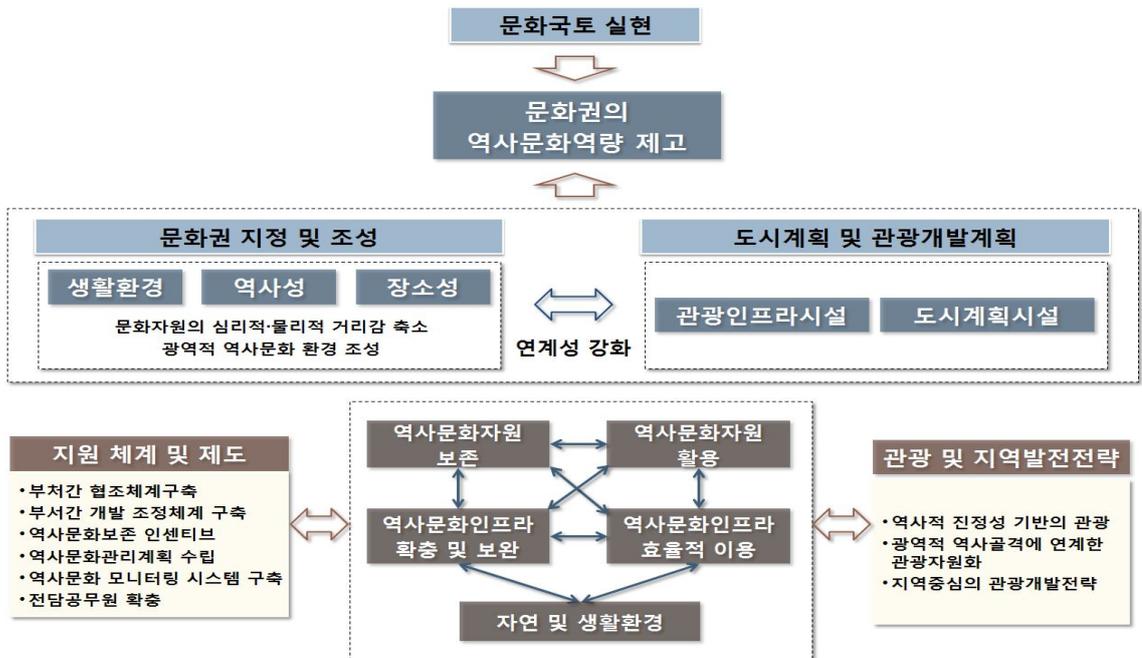
- 역사문화자원과 관련된 법으로는 「관광진흥법」, 「문화재보호법」,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등이 있으며, 이들 법령에 근거하여 문화재보존계획, 고도보존육성계획, 특정지역계획(문화권 조성), 광역관광개발사업(문화관광권) 등이 수립·추진되고, 경관지구, 미관지구 등이 지정되어 도시의 경관을 관리함
 -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역사문화자산 보전은 지정문화재 중심으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생활유적 등 역사문화환경요소는 체계적 보존 및 관리대상에서 배제됨
 - 고도보존계획은 고도가 가진 역사적 진정성을 토대로 고도의 골격을 회복시키고 고도의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공간을 개선하고 도시기능을 재생시켜, 역사문화유산의 효과적 보존은 물론 고도의 활력을 되살리고자 수립하는 계획임
 - 그러나 고도보존 및 육성사업 역시 ‘고도’로 지정된 곳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도시에는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문화권형 특정지역의 경우 광역적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적 요소와 지역내 관광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지역개발의 효과를 도모하는데 성과가 있었으나 지역이 지닌 장소성과 역사적 진정성을 기초로하기보다 관광수입 증대를 위한 관광개발사업 내지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와 다양한 역사문화유적과 관광시설을 입체적으로 연계하여 역사문화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또한 개별적이고 단편적으로 지역내 역사문화자산 및 시설이 관리되면서 다양한 시설을 입체적으로 연계하여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지역별 고유자산, 박물관, 전시관 등의 문화시설과 도로, 공원 등의 공공기반시설이 지역의 역사문화역량 구축에 대한 큰 틀 없이 개별적으로 설치·관리되어 지역의 역사문화역량 강화 및 이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인으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이 외에도 작은 계획변경, 개별 사업별로 소관부처 협의 및 예산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문화권 지정 및 계획승인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 등이 제기되며, 문화유산 보존정비, 도시계획, 지역개발계획, 그리고 관광개발계획의 긴밀한 연계체계 없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문제, 문화권 조성사업 주변지역의 난개발과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미비되어 있다는 점, 문화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개발사업·계획의 사전조율체계의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됨

109) 채미옥.(2013). 국토의 역사문화역량 제고를 위한 국토관리 및 문화정책의 개선과제. 문화와융성 연속토론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협력방안¹¹⁰⁾

- 인구 저성장 시대를 맞아 경제개발의 현장이었던 국토를 문화적 시각에서 재정비하여 국토의 품격을 높이는 것은 문화융성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의 하나임
 - 이를 위해서는 개발연대를 거치면서 훼손된 국토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문화정책과 국토관리정책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토의 역사문화역량을 높이는 형태로 국토관리의 기반들을 문화지향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국토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토 자체가 가진 역사성과 장소정신을 살리고, 이를 공간계획적으로 연계하여 우리 국토가 가진 역사문화의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토가 가진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역사문화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역사문화자원 관련 정책사업의 패러다임을 물리적 시설 설치를 통한 지역개발 또는 관광자원 개발에서 역사문화역량 회복 및 보존을 통한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유적지를 복원하거나 보존하면서 단위 유적지 주변에 관광시설이나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단위 관광지 조성사업에서 탈피하여 역사적 맥락을 조성하고 활용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

<그림 4-21> 문화권 조성사업 내실화를 위한 국토의 역사문화역량 제고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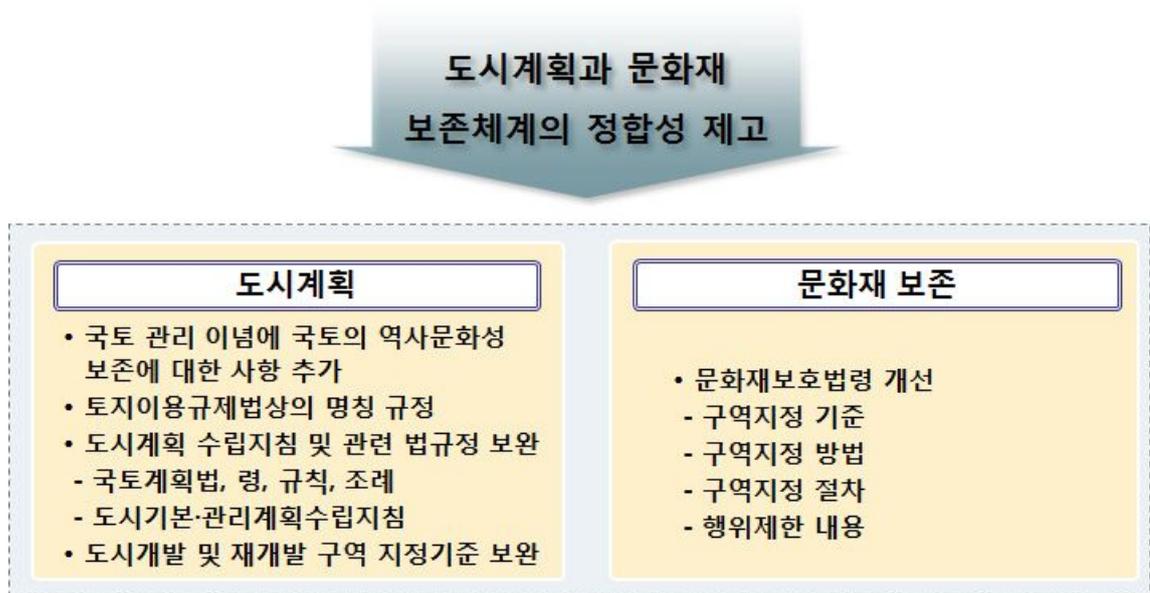
110) 채미옥.(2013). 국토의 역사문화역량 제고를 위한 국토관리 및 문화정책의 개선과제. 문화와융성 연속토론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자료 : 채미옥외.(2010). 지방대도시권고유의 역사문화역량 확충방안. 국토해양부.

- 또한 권역별로 고유한 장소성과 역사성을 맥락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문화권별로 고유한 역사문화역량을 발굴하고 진화시켜 나가는 공간계획적 접근이 필요함
 - 각 권역이 보유한 유무형의 역사문화자산과 발굴기록 자료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해당 문화권의 역사적 골격과 맥락을 재해석하는 작업 후에 이를 토대로 문화권사업을 실시할 지역의 범위와 성격을 확정함으로써 문화권과는 상관없는 지자체의 숙원사업이나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단위 개발사업 중심의 사업으로 흐르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관광인프라 시설은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과 연계하여 입지시킴으로써 문화권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관광경쟁력이 지역 활성화와 궤를 같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스토리텔링 작업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문화재 보존체계와 국토관리 체계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보호법」 만으로는 국토에 산재해있는 모든 문화재를 지키고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국토관리의 기본이 되는 「국토기본법」 상의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역사문화보존 원칙’을 천명하여 역사문화자원이 국토관리의 기본틀 형성의 중요한 토대가 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는 「국토계획법」 에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 지정하는 용도지역에 따라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이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문화재 보존체계와 「국토계획법」 간의 상호적합성을 높여서 도시계획수립 기준 및 지침, 기초조사 항목 등에 역사문화환경 고려 항목을 추가하여 도시계획 수립단계에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간손도로 등 각종 도시계획시설 설치로 인한 역사문화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설치 기준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재건축사업, 도시정비사업 택지개발사업, 도로건설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역사문화환경의 훼손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각종 개발계획수립지침에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하는 기준을 규정하는 노력도 경주될 필요가 있음
 -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역사문화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권 내에서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과의 사전협의를 통

해 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는 형태의 지구지정이 이루어지도록 상호협의 조정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그림 4-22> 문화재 보존체계와 도시계획체계의 연계성 제고 방안



자료 :이진화·황병준(2012).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문화재청

- 문화권 조성사업의 협력적 추진을 위한 부처간 협의체 상설 운영
 -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 관련 중앙부처간 협력적 사업지원체계 구축과 사업간 연계·조정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운영이 필요함
 - 특정사안에 대한 부처간 조정·협의를 위해 부처간 조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추진 모니터링과 관련해 주기적으로 사업을 조정·연계 추진하여 내실화할 필요

제3절 문화로 옷 입히기를 위한 협력기반 구축

1. 문화진흥기본계획 및 문화영향평가 실시

-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통한 정책수립단계에서부터의 공동협력 시행
- 2013년 12월 제정된 「문화기본법」 제8조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법정계획인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에 타 부처와 관련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부처간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토대로 세부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함으로써 정책수립단계에서부터 공동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표 4-23> 문화기본법 상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규정

제8조(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2.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3. 문화진흥을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9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문화정책
 5.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6. 문화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7. 문화·여가 시설 등의 구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8. 문화 인력의 양성과 문화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문화정책 관련 조사·연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
 10. 문화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영향평가 실시를 통한 문화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
- 2013년 12월 제정된 「문화기본법」 제5조 4항은 국민들 삶의 질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최소화하고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 관련 사업이나 계획에 대하여 문화적 영향을 평가할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함

<표 4-24> 문화기본법 상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규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 시책 등 문화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문화영향평가는 규제적 성격¹¹¹⁾이 아닌 규범적 성격¹¹²⁾의 평가제도로서 문화적 관점에서 관련 정책 및 계획을 평가하여 문화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김효정, 2013)
 - 문화영향평가는 국가/자치단체 운영과 국민생활 차원에서 문화적 정체성과 문화적 권리 구현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분야와 영역을 중심으로 일상생활 속 문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담보하는 수단 및 공통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국민일상생활과 국가운영 차원에서 계획과 정책이 국민개개인의 문화적 권리와 국가 및 집단의 문화정체성 보호를 통해 미래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한국문화영속과 세계문화를 리드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을 가진 국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구성

2. 문화자원DB 공동활용과 문화컨설팅 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뿐 아니라 타 부처에서도 문화적 요소를 활용한 사업들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문화자원’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대되고 있음
 - 협의의 문화자원 뿐 아니라 지역의 역사, 지리, 사회적 관습, 인물, 관습과 전통, 일상생활 등으로 문화자원의 개념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당대의 문화자원을 아카이브화하여

111)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과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대규모개발/시설조성사업에 대해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평가

112) 성별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기술영향평가, 개인정보영향평가 등과 같이 강제성 없이 사업 및 정책과 관련 예상되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추구하는 평가의 가치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

미래세대에 전승해주는 것이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러 관련 공공 및 민간 영역에 분산되어 있는 전통문화 관련 22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20여만건의 정보를 한데 모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통문화종합정보사이트(<http://www.kculture.or.kr/>)>를 운영하고 있음
 - 동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생활(민속, 의식주, 산업), 예술(미술, 음악, 문학), 인문(종교/사상, 언어, 역사, 지리, 인물), 문화유산(국가유산, 자연유산), 한스타일(한글, 한복, 한지, 한식, 한옥), 한국적 우수공간, 전통문화마을 등 7개 범주로 분류되어 제공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 11월 정부 3.0의 일환으로 국립국어원(표준국어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정보), 한국문화정보센터(전문예술정보)에서 보유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공공데이터 100만건을 개방함
- 이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자원 및 DB등을 통합연계하여 타 부처 또는 민간에 제공할 경우 문화 가치의 사회적 확산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음
- 전국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문화의집, 기타 문화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보다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DB를 구축하고, 이들 문화자원DB간의 통합적 연계를 통해 문화자원의 공유, 확산, 공동활용을 제고
 - 나라기록포털, 국가문화유산포털, e뮤지엄, 문화원연합회DB 등
- 또한 문화예술,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인력에 대한 정보를 DB화하고 타 부처 등에서 문화 전문인력에 대한 정보 또는 요구가 있을 경우 제공하거나, 타 부처 사업 중 문화적 가치의 고려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전문인력을 파견하여 문화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3. 공공시설과 행정서식에 창의적 문화 감성 구현

-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 등에 창의적인 문화적 감성을 덧입혀 기능적 효율성, 심미적 가치, 창의적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도록 함
- 간판 정비 등 초보적 수준의 공공디자인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가치와 상상력,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창의적 공공디자인(creative public design) 사업 추진
 - 공공시설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공공디자인 공모사업과 선정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예술가나 시민의 창의적이며 기발한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국적 생활문화공간 시범조성>사업의 활용
- <정부미술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부보유미술품의 공공기관에 대한 대부 및 전시
- 지하철터널 등에 미디어아트 설치, 버스정류장이나 쓰레기봉투 등에 커뮤니티아트적 요소를 도입하여 미학적 아름다움과 소통과 공동체성의 형성
- 안전행정부와 협력하여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민원서식 등의 일괄 정비 시에 편리하고 아름다운 공공디자인과 서체를 적용
- 정치·행정·외교적 행사 등에서 전통문화(한복, 한식, 한옥, 전통음악 등)의 효과적 활용을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국가적 정체성 형성

<그림 4-23> 공공디자인 서체 예(서울 서체)



4. 행정인(人)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으로 Soft Power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뿐 아니라 타 부처 공무원들 또한 기본적인 문화적 소양과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연수 확대
- 채용 이후 연수 과정에서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과정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고, 공무원 근로복지 차원에서 연중 문화동호회 활동이나 문화향유 및 참여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문화적 소양을 함양하고, 동시에 문화적 가치를 체화할 수 있도록 함

5.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의 협력체계 구축 및 협업지원체계 강화

- 타 부처와의 협업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에서부터 협력연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분야, 문화콘텐츠분야, 관광분야, 체육분야 간 존재하는 칸막이를 허물기 위해 부처 내 협력사업에 대한 발굴 및 협력·조정을 위한 워크숍이나 간담회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부처 내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직원이나 과에 대해 포상을 수여하거나 평가 및 인사 상에 가점을 주는 등의 인센티브 부여 또한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기획조정실은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의 협업과 문화체육관광부와 타부처 간의 협업과 관련하여 주된 지원기관으로서 기능하고, 협력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별도의 협업예산이나 인력을 배정하거나, 인센티브 부여 등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타 부처에서 협업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에서 협업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을 때 이에 대한 의사를 타진할 수 있는 채널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러한 협력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한 주요한 역할에 포함될 것임

참고문헌

- 강경숙, 최세민, 오가영(2009), 「통합예술치료가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또래관계 향상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13(2) : 99-112.
- 강인애 외(2011), 「문화예술활동 기반 통합 수업의 학습효과」, 조형교육, 40 : 1-26.
- 고용노동부.(2013).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 : 2013년 고용노동부 국정운영보고.
- 곽윤정(2010),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우울성향, 자아상,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7(1) : 1-14.
- 관계부처합동.(2012). 제1차 산업융합 발전 기본계획(2013~2017). 지식경제부
- 관계부처합동.(2013). 정부3.0 추진 기본계획. 안전행정부.
- 교육과학기술부(2010), 2010년 재외교육기관현황, 코리아넷
- 교육과학기술부(2010), 재외한국교육원 및 재외한국학교 현황(2010.1월 기준), 정책브리핑
- 교육부.(2013).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 - 2013년 국정과제 실천 계획.
- 구인숙(2010), 「예술통합교육·무용이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모더니 예술, 3 : 237-255.
- 국무조정실(2013). 국정과제지원평가 시행계획.
- 국민소통실.(2013). 문화융성의 의미 및 실천방안. 문화체육관광부.
- 국방부.(2013). 튼튼한 안보 구현을 위한 2013년 국방정책 방향.
- 국방부.(2013). 2012년 국방연감.
- 국토교통부.(2013). 2013년 국토교통부 국정과제 실천계획.
- 기획재정부.(2013). 기획재정부 2013년도 업무계획 :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위한 업무추진계획.
- 김상원 외 (2012). 문화도시 공간규모에 따른 창조적 재생 사례 연구-독일, 스페인, 영국, 국제기구 및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지 : 344-363.
- 김성섭김미주.(2009). 태국사회에서 한류 대중문화 상품이 한국의 국가이미지 인식과 한국 방문의향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23(4) : 101-125
- 김성진(2005). 축제의 문화적 정체성과 경제·사회적 효과에 관한 연구 : 프랑스 니스 카니발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학위논문.
- 김세훈.(2012). 문화예술정책과 타 정책영역간 협력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영(2006), LA지역 한글학교의 한국어 교육 방안,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경(2011). 국내 소셜 게임 시장 전망.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24(1). pp. 113-123.
- 김윤권.(2013), 협업행정의 동인과 제약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13년 0호, pp. 1108-1141
- 김은영(2011),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영향에 대한 질적연구」, 예술경영연구, 19 : 5-31.
- 김은진, 강인애(2011), 「대학교양과목 수업에서 음악테크놀로지 기반학습(MTBL)이 감성의 활성화

- 에 미치는 효과」, 감성과학, 14(4) : 513-524.
- 김은화(2011), 「통합예술치료가 지적장애아동의 적응행동과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7(1) : 117-140.
- 김인숙, 이경희(2011), 「무용/동작치료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7(4) : 57-73.
- 김정수.(2010). 문화행정론 : 이론적 기반과 정책적 과제. 집문당.
- 김태현.(2014). 달동네였던 '부산 감천문화마을', 관광객 年 40만명 몰린다는데... 한국경제 2014.1.20.
- 김현진·장관석.(2013). 골빔면... 스팸뮤지컬... 식품업계 4C 마케팅. 동아일보.
- 김혜인.(2014). 2014 문화예술트렌드 분석 및 전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효정.(2013). 문화영향평가 실행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남정탁.(2013). “수원 못골시장, 구경 한번 와보세요...웃음이 가득해요”. 세계일보 2013.11.19.
- 농림축산식품부.(2013). 농림축산식품부 2013년 업무계획.
- 뉴스핌(2013).제품에 예술을 입혀라..콜라보레이션 마케팅 '눈길'.
- 문선영(2008), 「통합예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 한국예술치료학회지, 8(1) : 275-301.
- 문지영(2010) ,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유치원 아동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 예술교육연구, 8(2) : 35-48.
-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2 문화예술인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3).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2 콘텐츠산업백서.
- 미래창조과학부.(2013). 콘텐츠진흥계획 발표 보도자료.
- 미래창조과학부.(2013). 2013년도 업무보고 :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
- 박덕수(2013), 정부 3.0 추진방향과 협업행정 활성화 방안, <서울행정학회 창립 20주년 2013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서울행정학회, pp. 395-407
- 박영정 외(2013),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 분석 및 발전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박채형(2011), 재외 교육기관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역사적 고찰 -미국의 한글학교·한국학교·한국교육원을 중심으로-, 교육사상연구, 25(1): 73-94
- 박천오 외.(2011). 융합행정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행정안전부.
- 박천오·주재현·진종순.(2012). 우리나라 융합행정의 발전 가능성과 방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6(2)
- 박천오·주재현·진종순.(2012). 우리나라 융합행정의 정책방향과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50(2) : 35-64.
- 배준구, “프랑스의 지방분권 이후 문화정책”, 「프랑스문화연구」 제20집, 2010, pp. 175~201

- 법무부.(2013). 2013년 법무부 성과관리시행계획.
- 변윤희, 현은자(2004),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유아교육연구, 24(5) : 311-336.
- 변인옥, 황순택(2009), 「알코올 중독자의 충동성 및 자기존중감 향상을 위한 인간중심 표현예술치료의 효과」, 미술치료연구, 16(6) : 1003-1027.
- 보건복지부(2011).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 및 종사자현황보고
- 보건복지부(2012). 2012 보육 통계
- 보건복지부(2012). 노인복지시설 현황 자료
- 보건복지부(2013). 보건복지부 2013년도 업무계획 :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지
-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2012). 전국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산업통상자원부.(2013).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과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 서주연, 원상화(2011), 「예술심리치료가 학교부적응 여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학교적응력에 미치는 단일사례 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7(1) : 19-43.
- 성제환.(2004). 문화경제학. 한울아카데미.
- 송수연.(2013). 인천성모병원, 인천지하철에 피아노건강계단 설치. 청년의사. 2013.12.13.
- 신형미,정여주(2006), 「탈북청소년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체험연구」, 심리치료: 다학제적 접근, 6(2) : 81-102.
- 안전행정부.(2013). 안전행정부 2013년 업무보고 :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양건열.(2013). 문화융성의 의미 -역사적, 이론적, 정책적 사례를 중심으로. KDTI 가치와 전망 제18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양현미.(2007). 문화의 사회적 가치 - 행복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양혜원(2012). 문화복지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 추정과 정책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양혜원·김혜인(2012). 2013 문화예술트렌드 분석 및 전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여성가족부.(2013). 여성가족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 : 여성행복, 가족행복, 국민행복 여성가족부가 앞장서겠습니다.
- 외교부.(2013).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를 여는 신뢰외교 : 2013년 외교부 업무보고.
- 유문무. (2010). 문화복지의 성장동력-영화 <엘시스테마>를 중심으로. 문화경제연구, 13(2) : 27-46.
- 유세경·고민경.(2006). 한국 TV 드라마의 시청행위와 한국과 한류에 대한 태도 관계 연구: 중국 대학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6 : 46-76
- 유승관(2009). 한일 양국 수용자의 드라마 시청이 국가이미지 형성에 대한 비교 연구. 방송통신연구 68 : 192-220

- 윤혜경, 이연숙(2008).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의 도시재생 기능성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15. pp.123-128.
- 이광규(2008), 미국 동포와 한국어 교육,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언어와 문화, 4(2):1-29
- 이동배(2011). 중국 수상공연 콘텐츠의 성공요인 분석과 한국적 적용방안 연구-장이머우의 인상시리즈를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연구 제1호.
- 이동연.(2013). 문화융성이란 무엇인가 : 개념, 정책방향, 실천과제. 문화체육관광부.
- 이상연.(2014). '산복도로 르네상스'...부산 감천문화마을 사업비 10억 추가 확보. 경상일보. 2014.1.19.
- 이은경(2005), 「보호 관찰소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집단치료프로그램 효과검증」, 학생생활연구, 21 : 99-128.
- 이진화·황병춘(2012).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문화재청
- 이철우, 김갑숙(2007), 「인지행동 집단미술치료가 흡연여중생의 흡연량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8(2) : 493-511.
- 이현우.(2011). 예술과의 협업을 통한 브랜드 디자인 경영실태와 효과. 예술경영연구 19. 123-147.
- 장은지.(2013). 피아노계단·트릭아트...시청 지하도에 공공디자인 도입. news1 2013.12.31.
- 정여주, 미술교육논총<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예술치유 시범사업 평가 및 발전 방안>, 한국미술교육학회, 2007,4. p.269.
- 정재훈, 김대희(2009), 해외 한글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국어교육학회, 새 국어교육, 82: 415-438
- 정정순(2004),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이 발달장애아동의 감정표현에 미치는 효과」, 언어치료연구, 13(3) : 53-74.
- 조윤희(2013),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 13-05
- 조은영(2008), 「무용교육이 유아의 창의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혜영.(2003). 한국 체류 중국 유학생들의 한류와 한국 이미지 인식에 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3(2) : 209-234
- 채미옥.(2013). 국토의 역사문화역량 제고를 위한 국토관리 및 문화정책의 개선과제. 문화와융성 연속토론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채미옥외.(2010). 지방대도시권·고유의 역사문화역량 확충방안. 국토해양부.
- 채지영.(2012). 한류 확산을 위한 재외 한국문화원 활용 연구. 예술경영연구 22 : 239-265.
- 최애나 외 (2010), 「음악치료활동이 주간보호노인의 인지기능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 연구, 6(1) : 103-121.
- 최영진.(2012). 시장의 진화 - 전통시장이 문화예술을 만났을 때, 경향신문. 2012.9.28.
- 통일부.(2013).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2013년 통일부 업무보고.

- 캔 로빈슨(2007). 내 안의 창의력을 깨우는 일곱가지 법칙. 한길아트
- 한국교육개발원 (2012). 2012 교육통계연보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intro.arte.or.kr/business/eduSociety2012.jsp>)
- 한국해외문화홍보원 홈페이지(<http://www.kocis.go.kr/overseas.do>)
- 해양수산부.(2013). 2013년 해양수산부 업무 추진계획 : 바다를 통해 국민의 꿈과 행복을 실현하겠습니다.
- 환경부.(2013).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허정임 외(2010), 「미술교육을 통한 문화예술 소외지역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 연구」, 미술교육연구논총, 27 : 185-203.
- 황혜진, “국가주도형 프랑스 문화정책과 시사점”, 「유라시아연구」, 제7권 제1호, 2010.3, pp. 341~357
- Arjo Klamer(2004).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Values of Cultural Goods, Cultural and Public Action. V. Rao and M. Walton, eds., Stanford University Press.
- Art Council(2004). The Impact of the Arts : Some Research Evidence.
- Barrett. Pat.(2003). Governance and Joined-up Government : Some Issues and Early Successes : Paper Presented at Australian Council of Auditors-General Conference. Melbourne.
- Bruno S. Frey.(2007). 문화예술경제학. 주수현, 유영명, 박상현, 최성희 역. 시그마프레스
- Christensen, Tom and Per Laegreid(2007). The Whole-of-Government Approach to Public Sector Reform.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7(6)
- Fleishman, R. (2009), To Participate or Not to Participate? Incentives and Obstacles for Collaboration, In The Collaborative Public Manager: New Ideas for the Twenty-First Century(O'Leary, R. & Bingham, L. ed.): 31-32,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Holden, J.(2004). Capturing Cultural Value : How culture has become a tool of government policy. Lodon: Demos.
- Holden, J.(2006). Cultural Value and the crisis of legitimacy. London: Demos.
- Home, C. S. & Paris, T. V. (2009), Preparing MPA Students to Succeed in Government-Nonprofit Collaboration: Lessons from the Field, Journal of Public Affairs Educaion, 16(1): 13-30
- Kodama, F.(1992). Techonology fusion and the new R&D, Harvard Business Review, 70-78.
- Ling, T.(2002). Delivering Joined-up Government in the UK: Dimensions, Issues and Problems. Public Administration 80(4)

McGuire, Michael.(2006). Collaborative Public Management : Assessing What We Know and How We Know I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6(Special Issue) : 33-43
NAO(U.K. National Audit Office).(2001). Joining Up to Improve Public Services : report by the COMptroller and Audit General. London : TSO.
Pollitt, Christopher.(2003). Joined-up Government : a Survey. Political Studies Review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교육부 홈페이지 www.moe.go.kr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홈페이지(<http://www.nstc.go.kr/c5/sub3.jsp>)
국방부 홈페이지 www.mnd.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sf.go.kr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www.msip.go.kr
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w.go.kr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www.motie.go.kr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www.mospa.go.kr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mogef.go.kr
외교부 홈페이지 www.mofa.go.kr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http://www.korea.kr>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www.mof.go.kr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 ④ 문화관련 사업 실행과 관련된 노하우의 축적
- ⑤ 기타 (_____)

[문항 4] 문화체육관광부가 타 부처와의 협력과제를 통해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_____)

- ① 타 부처 예산의 공동활용
- ② 타 부처 사업실행 전달체계(네트워크)의 공동활용
- ③ 타 부처 사업에 문화적 가치의 반영 및 확산
- ④ 기타 (_____)

[문항 5]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타 부처와의 협업이 잘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항 6] 문화체육관광부와 타 부처와의 협업이 잘 수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_____)

- ① 협력사업에 대한 이해의 부족 ② 협력사업에 대한 관심의 부족
- ③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④ 협력사업으로 인한 성과배분의 모호성
- ⑤ 각 부처 조직문화 및 의사결정체계의 상이성
- ⑥ 각 부처의 고유한 사고방식 및 용어로 인한 합의도출의 어려움
- ⑦ 조직통합의 우려 ⑧ 부처별·사업별 예산 배정으로 인한 협력사업 추진의 곤란
- ⑨ 협업을 위한 예산 및 인력의 부족 ⑩ 조직이기주의
- ⑪ 협업 결과에 따른 평가 및 인사상 인센티브의 부재
- ⑫ 협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부재
- ⑬ 기타 (_____)

[문항 7] 문화체육관광부와 타 부처와의 협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_____)

- ① MOU체결 ② 협업을 위한 TF팀 등의 구성 ③ 상부 의사결정자들의 관심과지지
- ④ 협업 담당자의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기회 제공
- ⑤ 협업 실무자간 교감 및 신뢰형성을 위한 워크숍, 간담회 실시

- ⑥ 협업관련부서 신설을 통한 협업에 대한 지원 강화
- ⑦ 협업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제정 및 제시
- ⑧ 기획단계에서부터 협업과제에 대한 공동설계
- ⑨ 협업과제에 대한 평가 및 인사상의 인센티브 제공(집단별)
- ⑩ 협업과제에 대한 평가 및 인사 상의 인센티브 제공(개인별)
- ⑪ 협업과제를 위한 별도의 인력 및 예산의 배정
- ⑫ 협업으로 인한 업무조정 및 조직통합에 대한 우려 불식 필요
- ⑬ 기타 ()

[문항 8] 다음은 각 부처가 2013년 업무계획보고에서 밝힌 주요사업 중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이 가능한 사업의 목록입니다. 협업의 필요성이 큰 사업과 협업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사업에 대해 모두 체크(√)해주시시오.(복수응답)

부처	사업내용	협업의 필요성	협업의 시급성
1.기획재정부	1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2 협동조합 활성화		
2. 미래창조과학부	1 창조허브로서의 무한상상실 운영		
	2 창조경제 문화 조성(무한상상마당, 창조경제 종합포털 등)		
	3 산학연 협력 및 창의적 인재육성		
	4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		
	5 지식정보의 창조적 활용체계 구축(국가DB구축 및 활용지원)		
	6 사회 각 분야에 ICT 적용 확산(창조경제 비타민)		
	7 생태계 창조형 R&D 패러다임 전환		
	8 범정부 차원의 창조경제 실현 추진		
	9 국가 정보화 추진		
	10 공개SW 온라인교육서비스 및 SW 오픈마켓 활성화		
	11 한국 스타일 콘텐츠로 세계 진출		
	12 방송산업 및 스마트미디어산업 육성		
	13 사회이슈 해결형 기술개발		
	14 사회문제해결형 프로젝트		
	15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 및 정보격차 해소		
	16 창조경제국민행복을 위한 우체국 네트워크 활용		
3. 교육부	1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2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정 운영(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		
	3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4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		
	5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6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7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8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특성화 전문		

		대 100개교 육성을 통해 산업핵심인력 양성체제 구축, 전문대학 생의 해외진출 활성화 등)		
	9	지방대학 지원 확대(지방대학 특성화 분야 집중 육성 등)		
3. 교육부	10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11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온오프라인 평생학습종합진 달체계 구축, 생애단계별계층별 국민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12	방과후돌봄 서비스 확대		
	13	교육비 부담 경감(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		
	14	장애·다문화·탈북학생 등 교육지원 강화		
	15	재외문화교육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		
	16	산학연 협력 및 창의적 인재육성		
	4. 외교부	1	개도국에 희망주는 국민참여 개발협력(ODA) 추진	
2		700만 재외동포 역량 결집 및 교육문화 지원 확대		
3		공공외교 활성화법 제정 및 유관부처 협업체제 구축		
4		178개 재외공관 등의 문화외교 전초기지화		
5		민간역량 결집을 통한 국민 공공외교 전개		
6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공공외교 프로젝트 추진		
7		한중일 3국간 공공외교포럼 창설 및 청소년교류 확대		
5. 통일부	1	문화융성과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 추진		
	2	북한이탈주민의 맞춤형 정착지원		
	3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6. 법무부	1	학교폭력 등 청소년비행예방기능 강화		
	2	소년원교육 내실화 및 사회복지 지원강화		
	3	전문인력에 의한 가정폭력치료 수강명령 집행		
	4	맞춤형 교정·교외프로그램 개발 운영		
	5	수형자의 사회복귀 지원 활성화		
	6	수형자의 취업·창업지원 활성화		
	7	여성아동 대상 범죄피해자 인권강화 및 양성평등 의식 제고		
	8	인권교육		
	9	이민자가 행복한 사회통합 기반 구축		
7. 국방부	1	보람있는 군 복무 및 국민존중의 국방정책 추진		
8. 안전행정부	1	중대본 중심의 통합재난대응시스템 구축		
	2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으로 효율적 현장대응 보장		
	3	국가방재자원 공동활용		
	4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5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6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7	다양한 마을공동체 발전사업의 시너지 제고		
9. 농림축산식품부	1	생산·가공·유통·관광 등을 융복합한 6차 산업 활성화		
	2	한식세계화 사업 재정비		
	3	숲교육·치유휴양 등 산림복지 혜택 확산 및 생활권 녹색공간 확충		
	4	농촌 정주여건 실현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확충		
	5	중심지 접근성 제고를 위한 준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6	유희시설 활용한 마을문화공간조성 및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7	다문화여성대학 운영		
	8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인력 양성, 지원조직 확충 및 역량강화		
	9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농촌 공동경영체 육성		

	10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농촌 정착 지원		
	11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및 목표치 수정·보완		
10. 산업통상 자원부	1	선도형 신산업 육성		
	2	전통기법, 소재등 활용 생활용품의 명품브랜드화		
	3	중견·중소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화		
	4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		
	5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11. 보건복지 부	1	부모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2	취약아동 돌봄서비스 내실화		
	3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4	범부처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6	해외환자유치 및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촉진		
	7	치매 및 요양필요 노인 보호 확대		
	8	노인일자리 확대 및 사회참여 활성화		
	9	공공-민간 복지자원 활용 극대화		
	10	주민센터를 맞춤형 복지 허브기관으로 개편		
	11	4대 중독문제(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에 대한 종합적 대응		
	12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복지정책 통합조정 강화		
12. 환경부	1	생태휴식 공간 확대 등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		
	2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3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		
	4	지역단위 생태기반 지역발전 거버넌스 운영		
13. 고용노동 부	1	청년 친화적 일자리 확충 기반 조성		
	2	사회적기업 활성화로 따듯한 성장		
	3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망 강화		
	4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5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		
	6	장시간 근로개선 및 정년 연장으로 함께 일하기		
	7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조성 및 근로자 건강 증진		
	8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		
14. 여성가족 부	1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확대		
	2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3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		
	4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및 품질관리		
	5	위기청소년 눈높이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창의성 및 글로벌 역량 강화		
	7	취약가족 지원 확대		
	8	다문화가족 적응력 제고		
	9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 및 활동 내실화		
	10	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확대		
15. 국토교통 부	1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추진		
	2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인프라 확충		
	3	지역 성장거점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4	환경과 조화된 국토관리체제로 전환		
	5	공간정보의 융·복합을 통한 정부 3.0 구현		
	6	기존 산업의 창조산업화(U-City산업, 항공레저업, 자동차튜닝업 등)		
	7	산업단지를 창조기업의 인큐베이터로 조성 (노후산단 재창조)		
	8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제도 도입		

	9	행복주택 공급		
16.해양 수산부	1	해양관광·레저스포츠 육성		
	2	연안어촌의 국민생활 공간화		
17. 문화재청	1	문화재 안전관리체계 고도화		
	2	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 체계화		
	3	국민의 문화재 향유권 확대		
	4	문화재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확충		
	5	지역문화재 활용 다양성 제고		
	6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관리		
	7	문화재 남북교류 및 국제협력 강화		
18. 문화체육 관광부	1	범부처 사업을 아우르는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2	문화영향평가의 실시		
	3	공공시설 및 행정서식에 문화적 감성을 입히기		
	4	타부처 공무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강화		
	5	협업지원체계 강화		

[문항 9] 협업과제 진행 및 발굴에 있어 어떠한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하고 있는 기존사업의 확대를 통한 확산
- ② 타 부처가 진행하고 있는 문화관련 사업의 지원을 통한 확산
- ③ 신규과제의 발굴
- ④ 기타 ()

※ 공무원의 경우 ☞ [문항 10]으로 이동

공무원이 아닌 경우 ☞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

[문항 10] 귀하께서는 부처간 협력과제를 진행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현재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

- ① 협력과제 경험이 있다. (협력과제명 : _____) ☞ [문항 11]로
- ② 협력과제 경험이 없다. ☞ 마지막 페이지로

[문항 11] 귀하가 진행한 부처간 협력과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성공적이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성공적

[문항 12] 위와 같이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 : _____

[부록 2] 전문가 설문조사 응답결과 : 협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단위 : %)

부처	사업내용		협업의 필요성	협업의 시급성
1.기획재정부	1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66.7	36.7
	2	협동조합 활성화	46.7	3.3
2.미래창조과학부	1	창조허브로서의 무한상상실 운영	53.3	6.7
	2	창조경제 문화 조성(무한상상마당, 창조경제 종합포털 등)	66.7	36.7
	3	산학연 협력 및 창의적 인재육성	50.0	30.0
	4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	40.0	6.7
	5	지식정보의 창조적 활용체계 구축(국가DB구축 및 활용지원)	33.3	23.3
	6	사회 각 분야에 ICT 적용 확산(창조경제 비타민)	33.3	10.0
	7	생태계 창조형 R&D 패러다임 전환	50.0	16.7
	8	법정부 차원의 창조경제 실현 추진	36.7	13.3
	9	국가 정보화 추진	23.3	6.7
	10	공개SW 온라인교육서비스 및 SW 오픈마켓 활성화	23.3	10.0
	11	한국 스타일 콘텐츠로 세계 진출	53.3	36.7
	12	방송산업 및 스마트미디어산업 육성	50.0	30.0
	13	사회이슈 해결형 기술개발	30.0	6.7
	14	사회문제해결형 프로젝트	46.7	20.0
	15	건강한 사이버문화 정착 및 정보격차 해소	46.7	30.0
	16	창조경제국민행복을 위한 우체국 네트워크 활용	20.0	3.3
3.교육부	1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80.0	63.3
	2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정 운영(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	56.7	30.0
	3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36.7	20.0
	4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	53.3	40.0
	5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43.3	20.0
	6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23.3	10.0
	7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33.3	16.7
	8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육성을 통해 산업핵심인력 양성체제 구축, 전문대학생의 해외진출 활성화 등)	33.3	3.3
	9	지방대학 지원 확대(지방대학 특성화 분야 집중 육성 등)	13.3	6.7
3.교육부	10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13.3	3.3
	11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온오프라인 평생학습종합진달체제 구축, 생애단계별계층별 국민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33.3	16.7
	12	방과후돌봄 서비스 확대	40.0	26.7
	13	교육비 부담 경감(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	26.7	20.0
	14	장애다문화탈북학생 등 교육지원 강화	56.7	33.3
	15	재외문화교육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	60.0	23.3
	16	산학연 협력 및 창의적 인재육성	40.0	20.0
4.외교부	1	개도국에 희망주는 국민참여 개발협력(ODA) 추진	46.7	23.3
	2	700만 재외동포 역량 결집 및 교육문화 지원 확대	53.3	13.3
	3	공공외교 활성화법 제정 및 유관부처 협업체제 구축	30.0	16.7

	4	178개 재외공관 등의 문화외교 전초기지화	56.7	30.0
	5	민간역량 결집을 통한 국민 공공외교 전개	26.7	3.3
	6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공공외교 프로젝트 추진	30.0	16.7
	7	한중일 3국간 공공외교포럼 창설 및 청소년교류 확대	33.3	10.0
5. 통일부	1	문화융성과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 추진	80.0	23.3
	2	북한이탈주민의 맞춤형 정착지원	53.3	23.3
	3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30.0	13.3
6. 법무부	1	학교폭력 등 청소년비행예방기능 강화	50.0	33.3
	2	소년원교육 내실화 및 사회복지 지원강화	56.7	13.3
	3	전문인력에 의한 가정폭력치료 수강명령 집행	33.3	13.3
	4	맞춤형 교정교화프로그램 개발 운영	46.7	13.3
	5	수형자의 사회복지 지원 활성화	23.3	3.3
	6	수형자의 취업·창업지원 활성화	16.7	0.0
	7	여성아동 대상 범죄피해자 인권강화 및 양성평등 의식 제고	26.7	26.7
	8	인권교육	26.7	13.3
	9	이민자가 행복한 사회통합 기반 구축	46.7	26.7
7. 국방부	1	보람있는 군 복무 및 국민존중의 국방정책 추진	43.3	13.3
8. 안전행정부	1	중대본 중심의 통합재난대응시스템 구축	13.3	0.0
	2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으로 효율적 현장대응 보장	13.3	3.3
	3	국가방재자원 공동활용	13.3	3.3
	4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23.3	20.0
	5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26.7	23.3
	6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23.3	16.7
	7	다양한 마을공동체 발전사업의 시너지 제고	66.7	53.3
9. 농림축산식품부	1	생산·가공·유통·관광 등을 융복합한 6차 산업 활성화	43.3	13.3
	2	한식세계화 사업 재정비	53.3	26.7
	3	숲교육·치유·휴양 등 산림복지 혜택 확산 및 생활권 녹색공간 확충	33.3	10.0
	4	농촌 정주여건 실현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확충	56.7	26.7
	5	중심지 접근성 제고를 위한 준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10.0	0.0
	6	유희시설 활용한 마을문화공간조성 및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70.0	43.3
	7	다문화여성대학 운영	53.3	10.0
	8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인력 양성, 지원조직 확충 및 역량강화	36.7	16.7
	9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농촌 공동경영체 육성	30.0	6.7
	10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농촌 정착 지원	20.0	6.7
	11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및 목표치 수정·보완	10.0	3.3
10. 산업통상자원부	1	선도형 신산업 육성	33.3	10.0
	2	전통기법, 소재등 활용 생활용품의 명품브랜드화	46.7	20.0
	3	중견·중소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화	23.3	10.0
	4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	13.3	3.3
	5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43.3	13.3
11. 보건복지부	1	부모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20.0	10.0
	2	취약아동 돌봄서비스 내실화	30.0	23.3
	3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20.0	16.7
	4	범부처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26.7	6.7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16.7	6.7
	6	해외환자유치 및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촉진	26.7	13.3
	7	치매 및 요양필요 노인 보호 확대	16.7	16.7
	8	노인일자리 확대 및 사회참여 활성화	40.0	26.7
	9	공공-민간 복지자원 활용 극대화	26.7	10.0

	10	주민센터를 맞춤형 복지 허브기관으로 개편	43.3	23.3
	11	4대 중독문제(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에 대한 종합적 대응	53.3	23.3
	12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복지정책 통합조정 강화	30.0	10.0
12. 환경부	1	생태휴식 공간 확대 등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	63.3	26.7
	2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13.3	6.7
	3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	13.3	0.0
	4.	지역단위 생태기반 지역발전 거버넌스 운영	20.0	6.7
13. 고용노동부	1	청년 친화적 일자리 확충 기반 조성	50.0	26.7
	2	사회적기업 활성화로 떠들썩한 성장	53.3	16.7
	3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망 강화	26.7	10.0
	4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30.0	16.7
	5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	13.3	3.3
	6	장시간 근로개선 및 정년 연장으로 함께 일하기	16.7	6.7
	7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조성 및 근로자 건강 증진	40.0	3.3
	8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	20.0	3.3
14. 여성가족부	1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확대	26.7	0.0
	2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20.0	3.3
	3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	53.3	23.3
	4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및 품질관리	23.3	16.7
	5	위기청소년 눈높이 보호 지원	20.0	16.7
	6	청소년의 창의성 및 글로벌 역량 강화	50.0	33.3
	7	취약가족 지원 확대	26.7	16.7
	8	다문화가족 적응력 제고	70.0	33.3
	9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 및 활동 내실화	30.0	23.3
	10	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확대	16.7	13.3
15. 국토교통부	1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추진	56.7	33.3
	2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인프라 확충	53.3	33.3
	3	지역 성장거점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23.3	10.0
	4	환경과 조화된 국토관리체제로 전환	23.3	6.7
	5	공간정보의 융·복합을 통한 정부 3.0 구현	10.0	6.7
	6	기존 산업의 창조산업화(U-City산업 항공레저업 자동차투광업 등)	20.0	10.0
	7	산업단지를 창조기업의 인큐베이터로 조성 (노후산단 재창조)	26.7	6.7
	8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제도 도입	10.0	0.0
	9	행복주택 공급	20.0	10.0
16. 해양수산부	1	해양관광레저스포츠 육성	56.7	20.0
	2	연안어촌의 국민생활 공간화	36.7	16.7
17. 문화재청	1	문화재 안전관리체계 고도화	53.3	23.3
	2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 체계화	63.3	26.7
	3	국민의 문화재 향유권 확대	63.3	26.7
	4	문화재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확충	56.7	36.7
	5	지역문화재 활용 다양성 제고	56.7	23.3
	6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관리	46.7	16.7
	7	문화재 남북교류 및 국제협력 강화	63.3	13.3
18. 문화체육관광부	1	범부처 사업을 아우르는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76.7	43.3
	2	문화영향평가의 실시	66.7	40.0
	3	공공시설 및 행정서식에 문화적 감성을 입히기	56.7	30.0
	4	타부처 공무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강화	80.0	33.3
	5	협업지원체계 강화	60.0	33.3

문화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협력과제 발굴 연구

발행인 |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처 |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전화 044-203-2000 팩스 044-203-3447

<http://www.mcst.go.kr>

작성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인쇄일 | 2013년 12월

발행일 | 2012년 12월

인쇄처 | (주) 크리홍보

※ 문화체육관광부의 허락 없이 이 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전제
·발행할 수 없습니다.

<비매품>